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인재 · 임지연 · 김 민 · 강영배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저 자 최인재, 임지연, 김민, 강영배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민(순천향대학교 교수)
_강영배(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관련 부처의 유사 사업에 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 내용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기능적, 법·제도적 측면의 검토와 현재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관련 유사 사업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 도출.
-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활성화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근거로 정책과제 마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 관한 내용 검토
-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련 사업과 다부처 연계·협력 사업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 추진의 방향성 설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정책 현황 파악
- 양적·질적 문항의 타당성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설문 조사

-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 및 정책 과제 도출
- 조사 대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 표본 수: 성인 93명, 청소년 30명 등 총 123명
- 설문 응답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방식

● 면접 조사(FGI)

-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심층분석
- 조사 대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청소년
- 참여자 수: 전문가 6명, 청소년 5명 등 총 11명
- 면접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

● 현장 사례 조사

- 선정 대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있는 지역, 총 6개
- 선정 기준: 시·군·구 행정 단위별, 각 2개 지역 / 사업 운영기관별, 청소년재단 2곳, 청소년수련관 2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곳, 청소년문화의집 1곳
- 선정 지역: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곡성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원시 진해구
- 면접 내용: 선정 지역 사업 담당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선정 지역의 사업 현황 파악,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 활성화 요인 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타 연구 방법

- 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논의와 실천적 영역에서의 시사점 도출
- 콜로키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논의의 장 마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교육(지원)청의 관련 사업 담당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 제고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

■ 연구 결과

주요 연구 결과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관련 유사 사업에 관한 검토 및 논의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정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유형, 범위, 자원의 유형, 네트워크의 구축, 중간지원조직 등을 검토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이 외에 네트워크 운영방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에 관해 분석함.
- 법·제도적 측면에 대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관련 유사 사업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함.

● 시범사업 지역 현장 사례 조사

- 시범사업 지역 중 6곳을 선정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함. 부천시는 네트워크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재단 내 미래교육센터 설치 후 새로운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성남시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추진이 활발한 지역으로 재단 내 미래교육실을 설치하여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완주군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함께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곡성군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토대로 네트워크가 성장한 지역으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활발하게 구축해 가고 있음.
- 진해구는 지자체의 정책 아젠다와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마을교사 양성과정 활성화로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수성구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 내 유사사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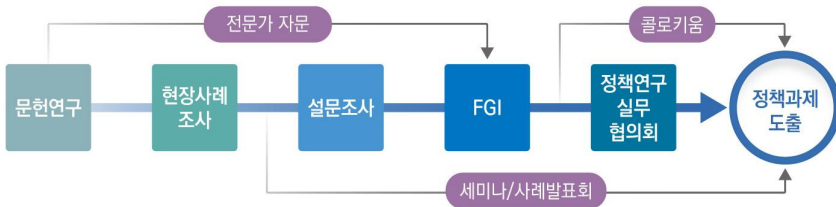
● 설문 조사 및 FGI

- 설문 조사와 FGI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과 정책 과제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예컨대 사업 운영의 주체, 범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운영 방식, 만족도, 사업 참여 후 변화,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책과제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였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문헌 연구, 시범사업 지역 현장 사례 조사, 설문 조사, FGI, 콜로키움, 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정책과제 3개와 세부 추진과제 10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 정책과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0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1-1.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1-2. 지역 특성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운영 1-3.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0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	2-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심화 적용 2-2.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확립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
0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3-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3-2.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3.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23-기본0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배경 분석	5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부처의 네트워크 사업 분석 ..	5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분석 ..	5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5
3. 연구 방법	6
1) 문헌 연구	6
2) 전문가 자문회의	6
3) 설문조사	7
4) 면접조사(FGI)	7
5) 시범사업 지역 사례 조사	8
6) 기타 연구 방법	8
4. 연구 추진 체계	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	13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	14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	15
2)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	18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의 유형	19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2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관 운영 주체와 중간지원 조직 ·	24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	31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원리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	31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방식	33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35
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법·제도적 측면	37
1) 법체계 및 법령의 입법 절차	37
2)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40
3) 청소년 관련 법	42

III.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

1. 분석 개요	49
2. 분석 결과	51
1) 중앙 부처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51
2) 지역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67
3)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71
3. 소결 및 시사점	77

IV.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 분석

-사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 사례 분석 개요	83
1) 사례지역 선정 절차 및 현황	83
2) 분석 방법 및 질문 내용	85
3) 인터뷰 대상	86

2. 지역별 인터뷰 분석 결과	88
1) 전라북도 완주군	88
2) 전라남도 곡성군	109
3) 경기도 부천시	130
4) 대구광역시 수성구	151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66
6) 경기도 성남시	182

V.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적·질적 조사

1. 조사 개요	197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97
2) 조사 방법 및 절차	197
3) 조사 내용	199
2. 양적 조사 결과	202
1)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 사업추진 전/후	202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206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초기의 형태	214
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성단위	218
5)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220
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각 항목별 가능성의 정도	224
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 운영을 위한 각 항목별 중요성	238
8)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중 각 항목별 중요도	240
9)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	242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	244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 ···	246
1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 ···	248
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	250

3. 질적 조사 결과	254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	254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256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범위	258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259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방식 ..	261
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65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만족도와 인식의 변화	266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경험	267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268
4. 소결 및 시사점	273
1) 양적 조사	273
2) 질적 조사	277

VI. 정책제언

1. 정책과제 개요	283
1) 정책과제 도출 과정	283
2)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85
2. 정책과제 및 제언	286

참고문헌	307
------------	-----

부 록	323
--------------	-----

1. 성인 참여자용 설문지	323
2. 청소년 참여자용 설문지	332

Abstract	341
----------------	-----

표 목차

표 I-1. 자문영역 및 자문진 구성	6
표 I-2. 설문조사 개요	7
표 I-3. 면접조사 개요	7
표 II-1.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 분류	17
표 II-2.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25
표 II-3.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별 주요 속성	26
표 II-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36
표 II-5.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41
표 II-6.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8조	42
표 II-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장 제2조, 제2장 제5조	43
표 II-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9조, 제12조의2	44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5
표 III-1. 분석 대상 사업 목록	50
표 III-2. 2020~2021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의 목표	55
표 III-3. 2023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의 목표	56
표 III-4. 2020~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65
표 III-5.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추진 개요	72
표 IV-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 분석 지역	84
표 IV-2. 주요 질문 내용	86
표 IV-3. 인터뷰 참여자	87
표 IV-4. 읍면별 세대수와 인구현황	91
표 IV-5. 수성구 인구변동추이	151
표 IV-6. 수성구 학교현황	153
표 IV-7. 수성구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현황	153
표 IV-8. 창원시 주요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169
표 IV-9. 성남시 청소년인구(9~24세) 현황	183
표 IV-10. 성남시내 학교, 청소년기관 및 자원 현황	184
표 V-1. 조사 개요	198

표 V-2. 설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98
표 V-3. FGI 대상자	199
표 V-4. 설문지 구성 체계 및 내용	200
표 V-5. FGI 질문 구성 체계 및 내용	201
표 V-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전	203
표 V-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후	205
표 V-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207
표 V-9.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관(官) 주도	209
표 V-10.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民) 주도	211
표 V-11.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관(民官) 공동주도(복수응답)	213
표 V-1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형태	215
표 V-13.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	217
표 V-14.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단위	219
표 V-15.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221
표 V-16.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223
표 V-17.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225
표 V-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227
표 V-19.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229
표 V-2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231
표 V-2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조달의 안전성	233
표 V-2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235
표 V-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237
표 V-2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성	239
표 V-25.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의 중요도	241
표 V-26.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243
표 V-2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	245
표 V-2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	247
표 V-29.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	249
표 V-3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252

표 V-3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계속)	253
표 VI-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85
표 VI-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항목 개정안(예시)	299
표 VI-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추진 계획	304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과정 체계도	9
그림 Ⅱ-1. 네트워크의 유형	14
그림 Ⅱ-2. 서울의 생활권 구분	19
그림 Ⅱ-3. 청소년 관련 포털사이트	21
그림 Ⅱ-4. 시범사업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23
그림 Ⅱ-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 체계(안)	30
그림 Ⅱ-6. 법률의 입법 절차	38
그림 Ⅱ-7.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	39
그림 Ⅱ-8. 총리령·부령의 입법 절차	40
그림 Ⅲ-1. 학생 삶을 중심에 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52
그림 Ⅲ-2.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53
그림 Ⅲ-3.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 공모 및 추진 절차	60
그림 Ⅲ-4.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 연계 체계 구축	60
그림 Ⅲ-5.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전달체계	69
그림 Ⅳ-1.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	89
그림 Ⅳ-2. 완주군과 전주시	89
그림 Ⅳ-3. 지역별 교육자원 유형	102
그림 Ⅳ-4. 곡성군 행정구역 현황	110
그림 Ⅳ-5.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전략체계도	114
그림 Ⅳ-6. 부천시 행정구역 현황(2024년 1월 계획)	131
그림 Ⅳ-7. 수성구 행정구역도	152
그림 Ⅳ-8.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개념도	154
그림 Ⅳ-9. 수성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체계도	155
그림 Ⅳ-10. 창원시 인구변동추이	167
그림 Ⅳ-11. 창원시 및 진해구 행정구역도	167
그림 Ⅳ-12. 진해구 학교분포도	168
그림 Ⅳ-13. 창원시 마을학교 추진과정	170

그림 IV-14. 경기도 및 성남시 행정구역도	182
그림 IV-15. 성남시청소년재단 조직도	185
그림 IV-16. 성남미래교육협력지구 성남미래교육 비전 및 추진목표 ·	186
그림 IV-17. 성남시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BIGTA	192
그림 V-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전체 기준) - 사업추진 전	203
그림 V-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후	205
그림 V-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	207
그림 V-4.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관(官) 주도	209
그림 V-5.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民) 주도	211
그림 V-6.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관(民官) 공동주도(복수응답)	213
그림 V-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형태	215
그림 V-8.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 ·	217
그림 V-9.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단위	219
그림 V-10.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221
그림 V-11.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223
그림 V-12.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225
그림 V-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227
그림 V-1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229
그림 V-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231
그림 V-1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조달의 안전성	233
그림 V-1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235
그림 V-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237
그림 V-19.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성	239
그림 V-20.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의 중요도 ···	241
그림 V-2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	243
그림 V-2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 ·	245
그림 V-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	247
그림 V-2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	249
그림 V-2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251

그림 VI-1 정책과제 도출 과정	284
그림 VI-2.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287
그림 VI-3.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조직 현황	289
그림 VI-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291
그림 VI-5.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291
그림 VI-6.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293
그림 VI-7.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도식	295
그림 VI-8.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297
그림 VI-9. 미래교육지구, 지자체-교육청 간 연계협력 체계	301
그림 VI-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	30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 4. 연구 추진 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을 둘러싼 생태환경의 변화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방식의 전환과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 환경적 변화의 예로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 증가 속도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9~24세) 인구(여성가족부, 2020)의 경우 1980년 1,401만 명(인구구성비 36.8%)이었으나 2030년 654만 명(인구구성비 12.6%)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뿐 아니라 각종 자원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서비스 환경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시책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변화 흐름은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가치관의 변화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테크놀로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보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사람, 데이터,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hyper-connectivity)된 네트워크 사회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도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지원 정책보다는 개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소수 엘리트 양성 중심의

1)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가치를 중요시했던 산업화 사회의 가치에서 개개인의 행복과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함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서비스의 방식도 이제는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한 방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II(이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로 표기함)」(최인재 외, 2019, 2020, 황세영 외 2021)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다. 위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수립한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사업과 관련된다. 이 사업은 한 지역의 모든 청소년이 성장에 필요한 활동,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에서 진행된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사업의 기획과 수행을 담당하는 플랫폼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민(民), 관(官), 공(共) 각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계·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참여 주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20년부터 4개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3개년 동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지원의 단절, 사업 담당자의 역량 부족과 소진,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사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여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논의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부처들에서 시행 중인 사업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배경 분석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국내에서 시행 중인 관련 사업들과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부처의 네트워크 사업 분석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 관련 부처 사업이 수행되고 있기도 하고, 다부처 연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사업 주체도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사업, 지자체나 지역의 민(民)이 주도하는 사업들도 있다. 이들 관련 사업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분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였던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활성화 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예컨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사업에 대해 개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크게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 설정과 연구 양적·질적 조사의 문항 개발 및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였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련 사업과 다부처 연계·협력 사업을 개관함으로써 이들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추진의 방향성 설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초기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학계, 지자체 관련 공무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전문가 등 본 사업에 대해 관련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된 양적·질적 문항의 타당성에 관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1. 자문영역 및 자문진 구성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1	연구 방향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자문	◦ 학계, 지자체 관련 공무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전문가 등 10명 내외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관련 자문	
1	양적·질적 조사 문항 개발 및 분석 자문	
1	부처 간 사업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관련 자문	
1	추진 과제 및 정책 방안 관련 자문	

3) 설문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과 정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성인 93명, 청소년 30명 등 총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응답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 대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표본 수	성인 93명, 청소년 30명 등 총 123명
표집 방법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유의 표집)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시기	2023년 8월

4) 면접조사(FGI)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을 위해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성인 전문가 그룹과 청소년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표 1-3.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 대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면담참여자 수	전문가 6명, 청소년 5명 등 총 11명
면접 방법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분 후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인터뷰
면담 시간 및 횟수	약 2시간, 그룹별 1회
면담자	연구진

5) 시범사업 지역 사례 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절차 및 내용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과 활성화 요인 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기타 연구 방법

(1) 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적 논의와 실천적 영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학술적 논의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련 연구의 최근 동향 및 이론적 논의에 관해 검토하였고, 실천적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수행 중인 관련 우수 사업들에 관해 사례발표회를 진행하였다.

(2) 토크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현재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이 사업과 유사한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진행 과정과 본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교육(지원)청의 관련 사업 담당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주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 방안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2회 개최하였다.

4. 연구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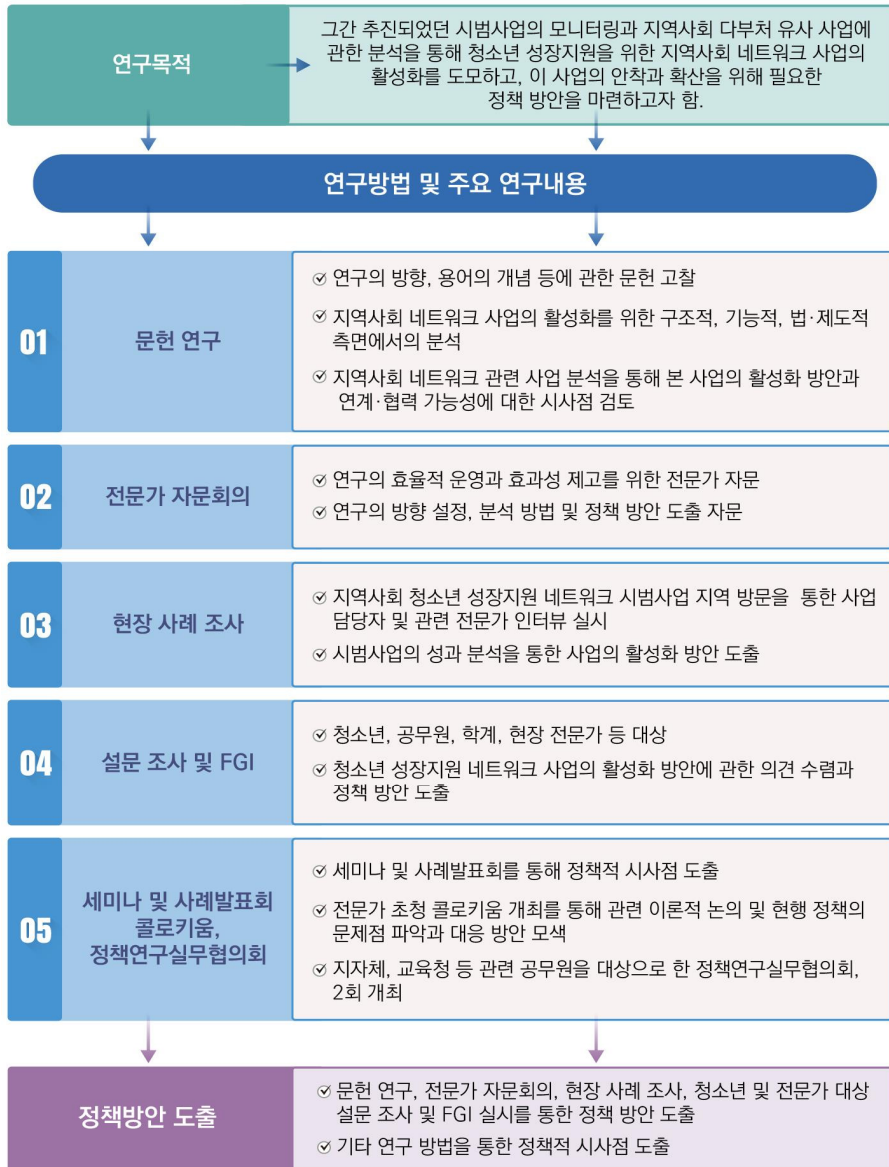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과정 체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
-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 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법·제도적 측면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에 관해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운정 (2019)은 청소년기본법(제2조)을 토대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이라 개념화하였다. 한편, 지역사회(Community)란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공동의식과 애착을 가지는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개인, 특정 조직(지역단체, 전문기관, 비영리조직 등), 행정기관 등을 포괄(송혜승, 이명훈, 2017)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networks)라는 용어는 본래 공학 분야에서 사용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교육학, 복지학, 행정학, 경영학, 국제관계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네트워크가 기술공학적 의미로 사용되면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형태와 작동 방식을 의미하지만, 사회학적 장면에서는 “한 시스템 안의 구성요소 간, 연계·협력과 제휴 양상을 의미한다(양병찬, 2000).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간의 관계(relationship), 연결(connection), 협력(cooperation)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네트워크 구성 주체 간의 상호보완성과 협력관계가 강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 간에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이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혹은 네트워크 사업)’란,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요구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자원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체계(최인재 외, 2019 내용을 재구성)라 개념화하고자 한다.

2)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조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생태주의 관점에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구조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유형,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의 유형,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관 운영 주체 및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그 이론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복잡성 교육철학(complexity thinking of education)에 기반하고 있는 생태주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집합(collection)이 아닌 집단(collective)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교실, 학교, 마을,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서용선 외 2015).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구성원 각 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와 네트워킹 방식에서도 하나의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킹이나 지역사회 내 산재되어있는 여러 주체와 과도한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탈 중심형 네트워킹보다는 이들 간의 중간 형태인 분산형 네트워킹을 지향한다.



* 출처: 서용선 외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경기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림 II-1. 네트워킹의 유형

이러한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또 다른 원리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이다. 이는 복잡성 과학의 이론을 토대로 출현한 이론으로 특정 시스템의 구조가 외부의 압력과 관련 없이 스스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도 네트워크 주체들의 끊임없는 상생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공진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다변화되는 환경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고,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된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 II(최인재 외, 2019; 최인재, 강건균, 송민영, 조운정, 2020)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최인재, 오해섭, 김민, 정진희 외, 2022) 연구의 분류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I-1>과 같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은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주체³⁾가 누구냐에 따라 관(官) 주도, 민(民)주도 그리고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주도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 주도 모형은 다시 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민주도 모형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주체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추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모형은 민간 단체(시설) 등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는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에 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유형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유형이다. 제1유형 사업의 예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청소년시설 주도의 민간 협력 사업,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 소지역 내 다부처 연계 사업 등이 있다.

3) 정책 주도 주체를 크게 관(官)과 민(民)으로 구분하였다. 관은 행정 영역과 공공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행정 영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해당하고, 공공 영역은 학교, 청소년 관계 기관, 진로·직업체험센터,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경찰서, 평생교육기관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민간 영역은 청소년,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개인과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기업체, 협동조합, 각종 협의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유형은 교육(지원)청이 유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경우이다. 사례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혁신(행복)교육지구 사업(초기) 등 사업추진 주체인 교육지원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이 변모되는 사례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 초기에는 각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점차 두 주체가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3유형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유형이다. 관련 사례로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행복)교육협력센터 사업 등이 해당한다. 또한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의 폐교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며 인구는 더욱 감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나 농촌 유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제3유형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4유형은 ‘관’의 영역에 포함되는 정부 단위 주체의 관여가 없거나 혹은 일부 관의 지원이 있으나 민간 단체(일부 청소년 유관 시설이나 단체 포함)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면서 서서히 관을 지역사회 변화 동력의 파트너로 견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제4유형이다. 이 사업의 예로는 민간 단체(기관) 주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이 해당한다. 아름다운재단 역시 지역사회 변화 사업으로 지리산 권역 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민간 주도 모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5유형은 관(공공 포함)에 해당하는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유형을 말한다. 1~3유형 중 제3유형 보다 발전된 형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제5유형은 제3유형뿐 아니라 제4유형까지를 포괄하는 유형으로 가장 발전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5유형의 사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과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표 II-1.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 분류

구분		네트워크 유형	사례
정책 주도	추진 주체		
관(官) 주도 모형	지자체	제1유형: 지자체 주도 + 민간, 공공 협력	- 지자체(청소년시설)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아동(청소년)친화도시사업 - 다함께돌봄사업 - 다부처 정책연계 공모사업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네트워크 사업추진	
	교육(지원)청	제2유형: 교육(지원)청 주도 + 민간, 공공 협력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혁신교육지구사업(초기모델)
		교육(지원)청이 주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네트워크 사업추진	
	지자체+ 교육(지원)청	제3유형: 지자체 · 교육(지원)청 공동주도 + 민간, 공공 협력	- 미래교육지구사업 [미래(행복)교육협력센터 사업] -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 농촌 유학사업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네트워크 사업추진	
민(民) 주도 모형	민간 단체(시설) 등	제4유형: 민간 주도 + 민간, 공공 협력	-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 주도 네트워크 사업 - 삼성공장학재단, 아름다운 재단 등의 지역사회 지원사업
민관(民官) 협력 모형	민간+지자체+ 교육(지원)청	제5유형: 민 · 관[지자체, 교육(지원)청, 공공 포함] 공동주도 +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 각종 청소년 혹은 교육재단 - 미래교육지구사업 [미래 (행복)교육협력 센터 사업 (일부 지역)]
		민(民)(지역 내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나 시설 등) · 관(官)(지자체, 교육(지원)청), 공공(公共) 포함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협력하여 네트워크 사업추진	

* 출처: 최인재 외 (2022).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p.60의 내용을 재구성함.

2)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행정구역, 생활권, 교육 학군, 마을 단위 등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로 삼을 수도 있고, 지역을 넘나드는 특정 공동체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자생력 있는 민(民)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일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의 발굴과 자원 간 연계를 위해 관(官)의 개입과 지원이 상당 부분 요구된다. 행정구역 단위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눈다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마을, 생활권) 등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7개 시·도(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226개 시·군·구(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3,515개 읍·면·동(읍 234개, 면 1,178개, 동 2,103개)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 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는 구성원 간 교류와 개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인프라의 활용이나 예산과 행정력의 제한이 따르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도 단위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필요와 수요를 모두 담기 어렵고, 참여자의 수도 매우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앞서 진행한 시범사업은 시·도와 읍·면·동 단위의 중간 행정 단위인 시·군·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서는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를 지칭하는 ‘생활권’이라는 용어로 지역을 구분하여 도시 관리를 추진 중이다. 생활권은 자연적·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과 영향권, 행정구역과 교육 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5~10만 단위로 3~5개의 행정동을 묶어 116개의 지역생활권(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생활권별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생활권이라는 용어는 이처럼 최근 경기도 광교, 세종특별자치시 등 신도시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권역 구분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도와 읍·면·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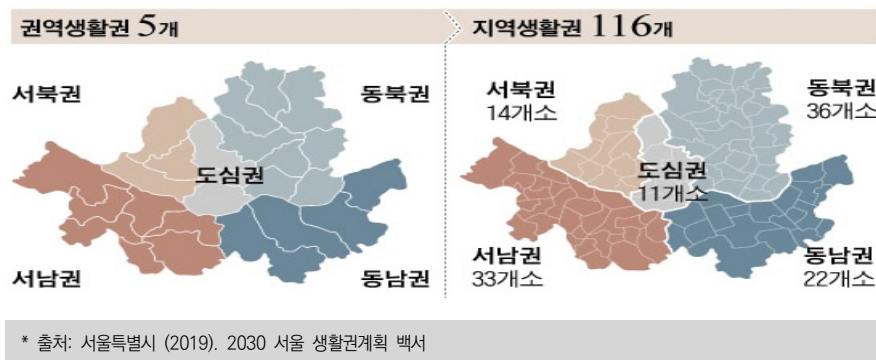


그림 II-2. 서울의 생활권 구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설정을 어떤 단위와 규모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후 네트워크 단위별 역할과도 관련된다. 네트워크 범위가 특정한 표준방식으로 모든 지역에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 범위를 찾아가는 지역사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를 토출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에 앞서 먼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선행 과제 중 하나이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의 유형

지역사회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이 자원들은 개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양병찬(2000)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유형을 정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상 제시한 네트워크 중 인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정보, 공간, 사업 네트워크를 크게 '물적'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교육, 복지, 상담, 진로,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 시설, 정책 등의 정보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집이 과거에 비해 수월하고, 그 내용 또한 매우 풍부하다. 이와 관련된 예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e 청소년(<https://www.youth.go.kr>)'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20

년부터 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채움’ 홈페이지(<http://cheum.hi1318.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에서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 청소년’에서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 검색, 봉사활동 신청, 청소년 성취포상제 참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안전망 내 흠어져있는 민·관의 서비스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에서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Net)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 및 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직업에 대한 정보나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인적 자원에 관한 것이다. 인적 자원은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학부모, 프로젝트 기획자, 지역사회 활동가(교·강사 포함), 자원봉사자, 기업가, 전문 분야 직업인 등이 해당한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 단체는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은 물론 자원 제공 주체의 이익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보 포털을 통한 인적 자원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종 연수, 세미나, 협의회 등을 통한 인적 자원 간 교류의 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공간 네트워크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시설 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간은 단순히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각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교육매체, 교재, 교구 등 모든 자원을 포함한다. 공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설과 시설 내 각종 자원의 교류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공간은 개별 시설 간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시설을 복합시설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 내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네트워크는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위 사업을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부처 간 유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부처 연계·협력이 강조되면서 다부처 연계·협력 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향후 지역사회 관련 주체 간의 연계·협력 사업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 자기관리 활동가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

[전체메뉴](#)

**청소년
포상제**

"내가 할 작란다는 참아보고 싶지 않아요"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해 보세요!**

DOVOL

봉사활동 찾기
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눈에

1365 연계
봉사활동 일지를 1365에 연계

재능 나눔
독특한 재능을 가진 분들의
직접 만들어 낸 것

나의
활동확인서

인증 수련활동 찾기
인증하고 유익한 인증수련활동 찾기

인증수련활동 참가여부 확인
일회, 단체로 활동할 등 계약 확인

인생학교나눔살롱
활동기록북

명품수련센터찾기
포상제타점기

최근 등록된 체험활동
+

봉사동아리 운영 동아리 모임 인천청소년문화센터 063-273-5901	1·2학년 세계문화교과(종교) 참가... 인천청소년문화센터 032-429-1310	2023년 중랑청소년문화의집 ... 중앙청소년문화의집 033-734-3668	베이킹클래스 '얼굴꾸미 만들기' 가림청소년센터 051-792-4900	워터풀 만들기 가림청소년센터 051-792-4900
--	---	--	--	--

최근 등록된 봉사활동
+

지역산유스캠프환경정화 2023-02-16 ~ 2023-02-16 진여14명 / 모집14	대천 2023-02-17 ~ 2023-02-17 진여1명 / 모집1	병곡루아카데미 교육봉사 2023-02-17 ~ 2023-02-17 진여1명 / 모집1	도서관 책창고 및 청소 - 오후 2023-02-17 ~ 2023-02-17 진여명 / 모집1
울산시 어린이집 영아 보육도우미 2023-02-17 ~ 2023-02-17 진여2명 / 모집2	광주 노약자 및 장애인 도우미 활동 2023-02-17 ~ 2023-02-17 진여1명 / 모집1	어린이도서관 서가정리와 및 환경미화 2023-02-17 ~ 2023-02-17 진여명 / 모집2	원월동의 군산센터 원월 홀보 통배민 2023-02-17 ~ 2023-02-17 진여1명 / 모집1
거주 학습 지도 수석 2023-02-17 ~ 2023-02-17 진여2명 / 모집2	전남 기호초등학교 환경 정리 및 미화 봉사활동 2023-02-17 ~ 2023-02-17 진여4명 / 모집6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 출처: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https://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t?curMenuSn=3940>
2023년 2월 15일 인출
2)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용, <http://cheum.hi1318.or.kr/>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3)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Chapter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1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에 산재 되어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때론 담당자가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소진되기도 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최소한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비된다는 생각으로 네트워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은 물론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체들도 성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최인재 외,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은 먼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간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만나는,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만듦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원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만남과 소통을 통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원탁토론회, 네트워크 파티 등의 이름으로 지역사회 자원 간의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였다(최인재 외, 2019). 또한 구성된 네트워크는 주기적인 만남과 지역 내 현안에 관해 포럼, 세미나 등의 논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와 협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 교육장과의 만남을 통해 연계·협력에 관한 협조를 먼저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네트워크 파티의 장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곡성군 청소년 성장지원 원탁토론회



곡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대화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토론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세미나



* 출처: 최인재 외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재구성.

그림 II-4. 시범사업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관 운영 주체와 중간지원 조직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관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 주체나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는 여러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의 주관을 맡아 운영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모형으로 운영되었기에 대체로 앞서 언급한 기관들이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시·도 단위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한다면 위 기관들 외에 또 다른 주체가 주관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단위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 운영기관에 포함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하여 지역(마을) 단위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단위에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역량이 있는 민간 단체가 운영을 맡을 수도 있다.

이상의 각 주체 중 어느 한 곳이 반드시 네트워크 주관 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각 지역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주관 기관 네트워크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운영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태도와 협력 의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네트워크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단체(시설)보다는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할 때, 네트워크의 운동성이 약화 되고 관료화될 가능성이 동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성숙해감에 따라 주관 운영기관을 민간 영역으로 차츰 이양하도록 네트워크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였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것이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이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Briggs, 2003, Brown & Kalegaonkar 2002). 한편, 정병순, 황원실(2018)은 중간지원조직을 공공(행정) 영역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연계, 정보교류, 이해 조정,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개념화하였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고경호, 김태연(2016)은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정보화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및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보았다. 이 외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그간의 선행 연구의 논의를 다음 <표 II-2>에 정리하였다. 중간지원지원조직은 이처럼 지역사회 내 관(官)과 민(民)의 중간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조직이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원 간의 조정자 역할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2.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년도)	개념 정의
최인수, 전대옥, 이승종 (2014)	정부와 관련 기관, 주민 및 주민조직 간의 중간 매개자이자 완충장치의 역할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필요 자원의 코디네이터, 주민역량 강화, 학습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조성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박세훈 (2015)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이를 연계하고 이들 간의 정보교류, 이해 조정, 협력관계 촉진 수행 조직
강지윤, 이태동 (2016)	민과 관 사이 중간에 위치해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민·관 두 부문의 기술, 거버넌스, 규범의 변화를 추동하고, 규범 촉진자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제도적 형태
이기태, 하현상 (2019)	주민들과 정부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주민 및 주민조직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 시키며 공동체 활동의 문제해결역량을 증진 시키는 활동 주체
고경호 (2021)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 단체, 민간 단체와 주민 등 둘 이상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이며 이들 주체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개 및 조정, 중재자 조직이자, 활동의 촉진자
박재은 (2022)	중간지원조직이 좁게는 주민과 정부, 넓게는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른 기능을 지닌 조직 사이에 위치한다는 특성이 있음
강문희, 윤준희 (2021)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이익 집단들 사이에 위치하여 다른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행정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하는 조직

* 출처: 출처: 조철민, 안창희, 유명화 (2022). 광명시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안. 일부 내용을 재구성.

표 II-3.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별 주요 속성

구분	공설 공영	공설 민영			민설 민영
	직영	공공 위탁	재단	민간 위탁	단체 자체 운영
주체	행정	행정	행정 출연	행정	민간 단체
운영 주체	행정	공공조직	재단법인	민간 단체	민간 단체
직원	시의 직원	공공조직의 직원	재단 직원	민간 단체 직원	민간 단체 직원
고용 안정성	일반적으로 계약직 (5년 정도 계약 연장)	위탁 센터가 사라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 있음	정규직, 지속가능성 큼	위탁 사업이 사라지면 고용이 불안	정규직이지만 자체 사업모델 고민 필요
사업예산 조달 체계	행정자금	일반적으로 재단법인 출연금(독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적 근거 필요)	재단 출연금(독자 사업은 자체 재 원이나 행정적 근거 필요)	민간 위탁 사업은 정해진 대로 수행하 되, 자체 자원 조달(CSR 사업 등)은 업무 협약과 규정을 통해 정해야 함.	융복합 가능성 큼(자체 자원+ 행정 보조+기금 등)
독립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안정적	역할이 분명하고 공공조직이 지속하면 안정적	재단 자체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안정적	수탁단체의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 경제 자립도는 과제임.	자유로움
이점	자금 면에서 안정적이며 운영의 연속성이 있음	자금 면에서 안정적이며 운영의 연 속성이 있음	자금 면에서 안정적이며 운영의 연속성이 있음	공설 민영과 민설 민영의 쌍방의 이점을 가짐	시민이 주체성이 살아있음
일반적 특성	행정 주도형으로 흐르기 쉬우며, 특히 직원이 항상 이동할 수 있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으로 보완 가능	특화된 센터 형태로 독립성을 보장 하지 않으면 공공조직이 임무에 힘 쓸릴 수 있음. 반면 공공조직의 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확장 가능성 있음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으나 관료제의 늪에 빠지거나 민간에 대한 친밀도가 떨어질 수 있음	위탁 사업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비, 조성금, 자체 사업 등으로 재 원확보 노력과 시민 주도의 운영으 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 조례 필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익 활동과 의욕이 넘치는 거점 운영을 목표 로 하려면 '민설 민영'의 형태가 이상적이나 높은 경영 감각이 없 으면 생존 자체에 목매 수 있음.
민간 주도성	낮음	중간	낮음	높음	높음

구분	공설 공영 직영	공설 민영			민설 민영 단체 자체 운영
		공공 위탁	재단	민간 위탁	
거버넌스 효과성	행정 중심적(탑 다운)으로 진행 될 수 있으나 행정력을 잘 활용 하면 조정자로서 협력적 거버 넌스를 형성하는데 중심 역할 을 할 수 있음.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거버넌스에 이를 활용 가능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행정과 민간을 동원하기 수월한 점이 있음.	출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와의 유 기적 협력관계 유지가 수월함. 민간 전문가 및 전문가와의 연 계가 수월함.	민간과 행정의 가교역할 수월함. 고 도의 균형 감각이 없으면 양쪽의 원 망을 들을 수 있음.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민간 진영의 종속성 경 향을 극복하기 힘들 수 있음.	민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협상을 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음.
네트워크 효과성	규정에 따른 행위제약으로 네 트워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높은 전문성을 담보하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공공조직의 특 성상 민간과의 접촉이 부족해질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 필 요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바탕으로 전문가, 민간 단체, 행정 등을 연 결할 수 있는 역할 가능	민간과 행정의 양쪽 정보를 취득하 기 쉬운 포지션으로서 이를 활용한 네트워크 연결자로서 역할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 됨. 관의 칸막이가 민간 중간지원조 간 칸막이로 작동할 여지가 있음.	조직적 자유로움을 활용하여 다 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수월하지 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면 행정과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 음. 지역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로 사 회적 자본의 집적과 확산에 수월함.
주요 이해관계자	의회 및 관계 기관	공공조직의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 자가 다를 수 있음	행정 및 관계 기관	행정 및 민간 조직	네트워크 멤버십을 가진 민간 단체
예산 융복합 가능성	낮음. 경직됨.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 가능 (재단법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기금화가 가능한 것 이 최대 장점임.	조례에 근거한 예산 혼합	높음.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율성. 규정과 결정의 유연성

* 출처: 최준규, 이현우, 신이수. (2019).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 일부 내용을 재구성.

중간지원조직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과 민간 영역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에 기반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박경철, 황바람, 구자인, 박주석, 2015)는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논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예컨대 조철민 외(2022)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마을자치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협력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을 제시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으로 공설 공영, 공설 민영, 민설 민영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설 공영은 행정기관의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전부 세금으로 운영하고, 공설 민영은 시설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위탁비나 조성비 등으로 민간 단체나 NPO(non profit organization)가 운영을 담당하며, 민설 민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을 말한다(이자성, 2011). 최준규 외(2019)는 중간지원조직 각 유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먼저 공설 공영의 경우 지자체가 직영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예산 운영이 안정적이며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정 중심적 정책추진 방식으로 인해 관료화되거나 경직된 운영이 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따른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공설 민영은 다시 공공 위탁과 재단 운영, 민간 위탁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 위탁은 앞서 공설 공영과 같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간과의 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재단 운영의 경우 출연기관으로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정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계 기관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 위탁과 마찬가지로 민의 주도성이 다소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공설 민영 중 민간 위탁의 경우 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이 가능하고, 민의 주도성이 높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의 불안정성, 경제적 자립도, 행정력의 동원 등에서 제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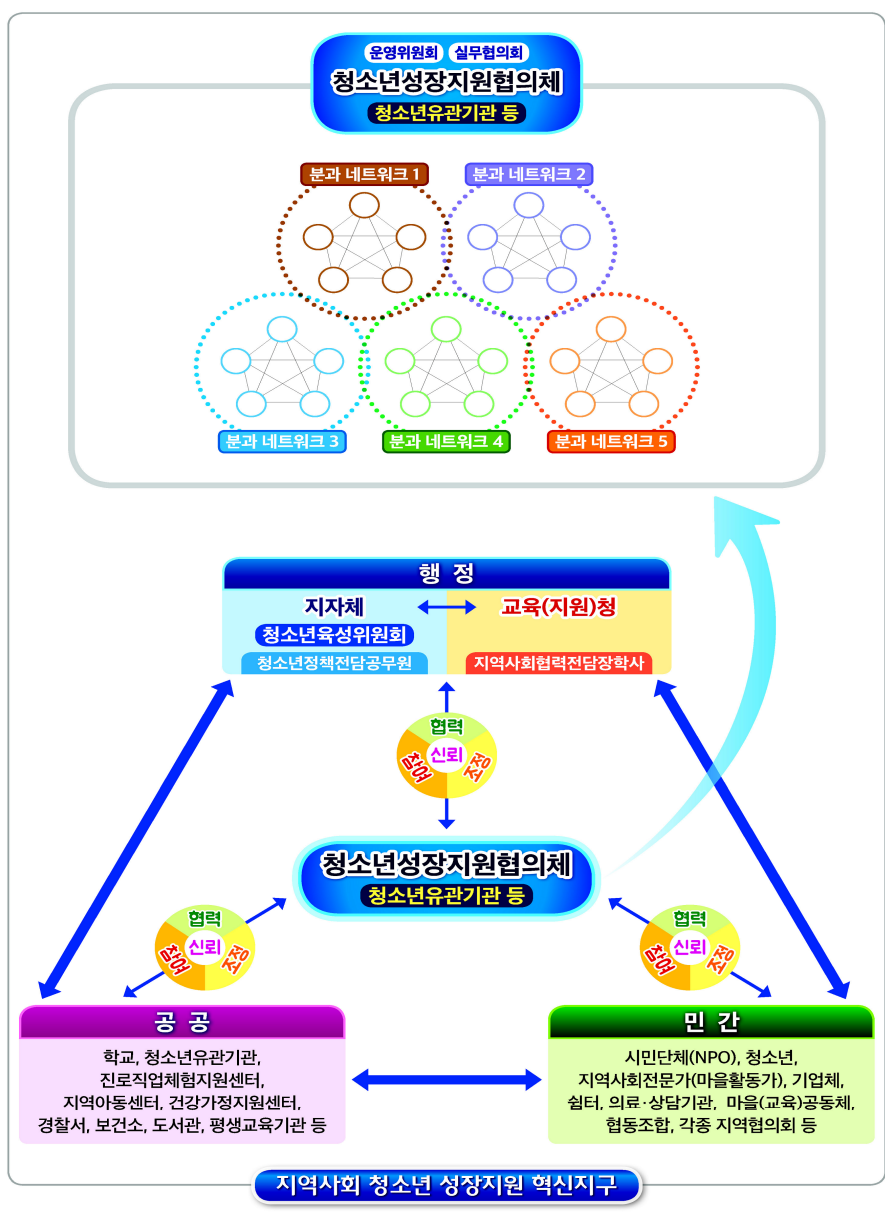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민설 민영의 경우 지역사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의 자유로운 기획과 민간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의 한계와 사업추진의 안정성 부분이 공설 기관에 비해 낮다.

현재 정부 정책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중간지원 조직의 예로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사무소로의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센터(지역에 따라 행복교육지원센터 혹은 미래교육지원(협력)센터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교육부, 2020).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 II(최인재 외, 2019, 2020)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자원 간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사실 중간지원조직은 예산과 자원 간 협력 환경이 확보된다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같은 별도의 법인이나 하드웨어를 갖춘 센터 설립이 이상적인 형태이다. 또한 이들 법인이나 센터에 해당 지역의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의 담당자가 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법·제도적 근거와 예산 확보 등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우선 운영이 가능한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림 II-5]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관한 모형이다.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 직영, 청소년 관련 재단 혹은 청소년 유관 단체(시설) 위탁, 민간 단체(시설)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운영을 맡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체는 크게 행정, 공공, 민간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협의체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상호연계·협력이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이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칭)지역사회 협력 전담 장학사”가 참여하여 협의체에서 요구되고 의결되는 사안들을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들의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의 이슈와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분과 네트워크에는 실무협의체를 두어 세부 추진 사업을 지원하고, 협의체 내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업을 의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최인재 외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그림 II-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 체계(안)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원리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중 ‘네트워크의 운영 원리’에 관한 주제는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과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네트워킹의 유형(그림 II-1 참조)” 중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효율적 네트워킹으로 중앙집중형보다는 분산형이나 탈중심형 네트워킹이 적절한 모델임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분산형이나 탈 중심형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를 통해 그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정의는 시대적 배경, 사회정치적 상황,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국제기구들은 거버넌스를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자원을 관리하는 권력 행사의 방식, 국가 통치의 방식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김영배, 2022). 1990년대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확산하여 온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연구자나 정책 결정자들은 특히 ‘위계적 거버넌스’와 같은 기존의 의사결정과 정책 시행 방식보다는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거나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위계적 권력관계가 형성될 때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즉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균형을 이루거나 시민사회의 성숙성이 담보 되었을 때 비로소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거버넌스를 광의의 거버넌스와 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기도 한다(Rhodes, 1997, 최병두 2015, 재인용). 먼저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협력이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부와 민간 영역 간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예컨대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민간 영역의 사적 조직 간의 관계에서 정부 주도적인 거버넌스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의 거버넌스는 참여자 간의 호혜적이며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협력관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거버넌스에 비해 적절한 거버넌스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협력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주재복 외, 2011, 최병두, 2015). 이처럼 거버넌스의 개념적 논의는 그동안 위계적/네트워크 거버넌스, 광의/협의의 거버넌스, 구(정부 주도)/신(시민사회 자율성과 상호협력 기반)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었다.

산업화 이후 다원화되고 분권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추진 방식보다는 정부를 포함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정 그리고 상호 협력적 방식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행정서비스의 단순 공급자라는 정책 기조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Kooiman, 2003, 이명석, 유흥림, 2009). 이러한 시대적 가치 변화와 맞물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부각 되었다.

Ansell &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닌 참여자 혹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정학, 지역개발학 등에서 도시재생사업, 군사시설이나 폐기물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해 왔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 부문이나 정부와 관련된 갈등뿐 아니라 공공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주체 간의 협력적 행동이나 노력이라 할 수 있다(이명석, 2010). 이처럼 협력적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는 정부나 시민단체, 개인 등 어느 사회 단위에서 독점하여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지역사회 민·관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이 연구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개념화하고자 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 원리로 다루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방식

이 절에서는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가 운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지난(至難)한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 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가 운용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의 모든 주체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양 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 협력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양 방향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담보로 한다. 참여자들이 단순한 관심의 표시나 의견 제시로만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사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을 분과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내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 역시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고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간지원 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하위 분과(혹은 실무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제안되고 도출된 이슈를 분과 네트워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당 이슈의 해결을 위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업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관리자(기관장) 혹은 지역사회 각종 모임이나 네트워크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 네트워크에서 상정된 사업을 의결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분과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 등 각 단위에서 사업 대상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참여는 분과 네트워크 단위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연계·협력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참여와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 자치는 일반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프로그램이나 단순 사업 형태로 활용해 왔다. 이후 사업이 성숙하고 발전되면서 교육부의 혁신교육지구와 이의 심화 모델인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며, 지역에 교육협력센터를 만들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고 상호연계·협력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 협력센터와 같은 공간과 조직이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가 협의체에 참가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은 플랫폼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이슈는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가 다양하고 그 변화의 주기도 매우 짧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유연해야 한다. 지역의 이런 생태환경의 특성은 협의체의 운영 방식에 있어 플랫폼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어야 한다. 분과 네트워크의 운영 기간도 지역사회 내 이슈의 특성에 따라 단기간 운영되는 네트워크부터 중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주체와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해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위계적이며, 하향식 정책의 대응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정책과 정부 관리에 의한 협력을 강조(Ansell & Gash, 2008)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협의체 운영 역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과정에 관(官)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관의 정책추진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앞 절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에 관한 논의와 함께 구조적 측면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적 측면인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들은 중간지원조직이 비교적 이르게 출현한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의 출현은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된다(정병순, 황원실, 2018). 1980년대 신 공공관리론의 흐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된 공급자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기구, 비정부조직 등이 공공서비스 생산·전달의 새로운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민간, 비영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공동생산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조직 간 조율과 조정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시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김정숙, 이재용, 황창호, 2021). 국내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나고 활성화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관련 연구를 보면, 시설의 제공, 구성원들의 역량증진, 각종 정보제공 등과 같은 지원 역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교류 촉진, 코디네이터, 지역 내 문제에 대한 이슈화나 정책 제안, 조사 및 연구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일본 내각부, 2002, Kellogg Foundation, 2002; 이기태, 하현상 2016 재인용). 고재경, 주정현(2012)의 연구에서는 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지원 서비스 역할 ② 단체나 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량 강화 역할 ③ 자금지원 단체나 지원 단체에 대해 자신의 활동이나 단체를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 ④ 여러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주민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 ⑤ 지역의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체와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역할 ⑥ 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 효과성 제고 역할 등으로 총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고광용(2014)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 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크게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킹, 정보·지식·기술 지원, 역량증진 교육·훈련,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역할
Brown & Kalegaonkar (2002)	① 참여자와 조직의 역량개발 ② 인적·물적 자원 동원 ③ 정보·지식·기술 지원 ④ 상호협력을 위한 구조 제공 ⑤ 타 조직 간 중개자
Jennifer (2011; 60)	① 의사결정 과정 및 제도의 형성 및 집행 ② 적극적이고 열린 의사소통 촉진 ③ 커뮤니티 지원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④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 정보 공유 및 훈련 지원 ⑤ 일상적인 평가 및 조직 학습 진행 ⑥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
Mignon & Kanda (2018)	① 행정 ② 학술지원 ③ 연구 ④ 교육·관리 지원 ⑤ 커뮤니티 관여
강내영 (2008)	① 정보 수집·제공 ② 활동 지원·조정, ③ 교류 촉진, 상담 및 컨설팅 ④ 네트워킹 ⑤ 연구 조사 ⑥ 인재 양성 ⑦ 정책 제안
심익섭·이기백(2015)	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② 자원과 기술의 중개 ③ 인재 육성, 상담 및 컨설팅, ④ 지원 및 개발 ⑤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⑥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일본 내각부(2002)	① 정보 교환 ② 각종 자원 및 기술 연계 ③ 인재 양성 ④ 컨설팅 ⑤ 네트워킹 ⑥ 평가 ⑦ 정책제시 ⑧ 연구 조사
정병순·황원실(2018; 7)	① 주체 간 상호연계 ②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정보교류 ③ 이해 조정 ④ 활동 지원

* 출처: 김정숙 외 (2021). 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 조직 역할 비교 연구. 재구성

그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기한 역할들을 협의체에서 수행해 왔다. 예컨대 지역사회 자원 맵 작성과 각종 인적·물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진행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욕구 조사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가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의체와 지역 구성원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성원 간 그리고 민·관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도 하였다. 한편 협의체와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진로 박람회, 진로 체험 활동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향후 협의체의 역할과 과제로는 협의체 활동의 질적 제고와 함께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요구된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법·제도적 측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시범사업 지역사회에서 조례 제정 등의 자치 법규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제정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해서 조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기존의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절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령의 입법 절차를 개관해 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청소년 관련 법의 법적 관련 근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법체계 및 법령의 입법 절차⁴⁾

(1) 법체계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규범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즉,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입법 주체와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률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규범이다. 한편 법령이란 위에서 제시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 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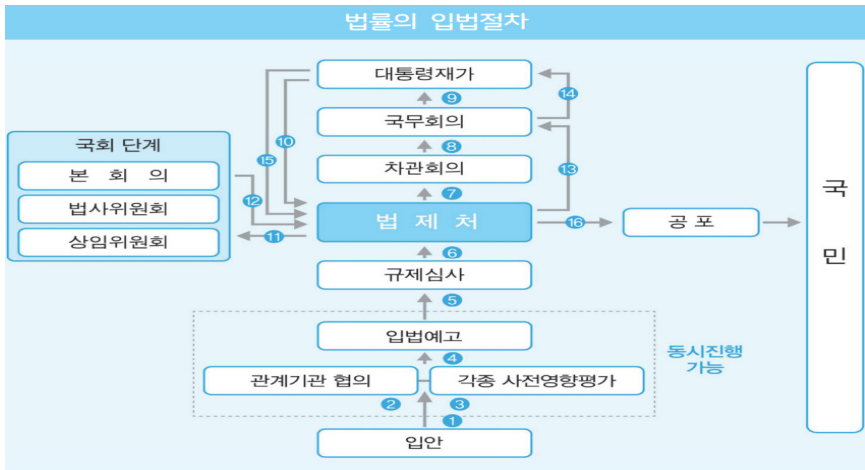
4) 법제처(2022). 법제업무편람, 법제처(2021).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2) 법률의 입법 절차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 발의 법률안이라 부른다. 정부 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입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입안한 법률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각종 사전평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이후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되고,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얻는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면 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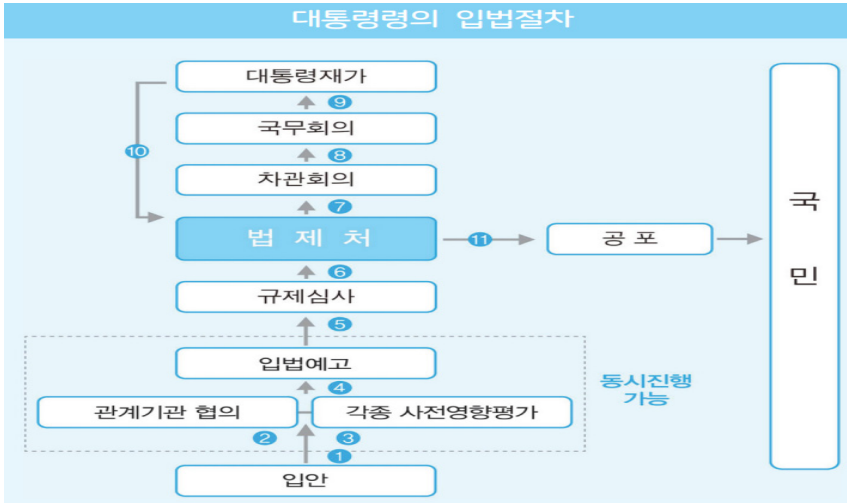


* 출처: 법제처 (2023). 법제업무 편람

그림 II-6. 법률의 입법 절차

(2)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그 입법 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 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



* 출처: 법제처 (2023). 법제업무 편람

그림 II-7.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

(3) 총리령·부령의 입법 절차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요(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다만,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 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총리령을 총괄하는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로부터 총리령 공포 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해야 한다. 부령의 경우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각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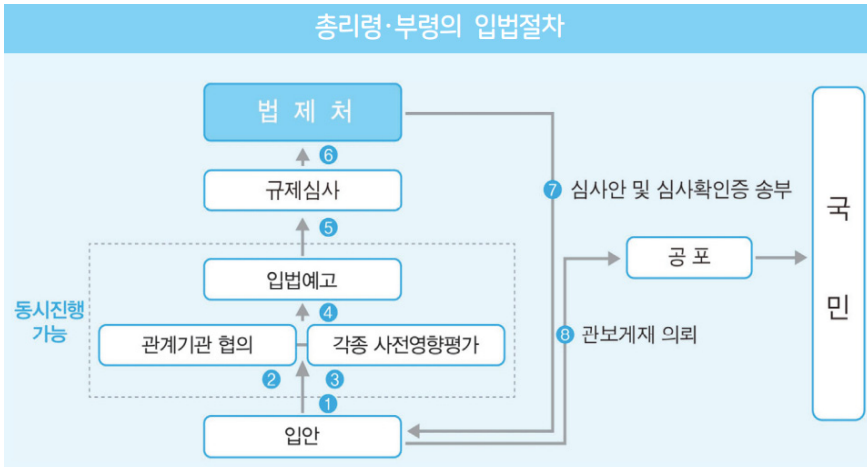


그림 II-8. 총리령·부령의 입법 절차

2)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⁵⁾

자치법규는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규칙(「지방자치법」 제83조)이 있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구분된다. 또한 조례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가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 의무와 벌칙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위임조례’나 ‘필수조례’에 해당하게 된다.

5) 법제처(202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세종: 법제처.

규칙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 규칙’과 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 소위 ‘직권 규칙’으로 구분된다. 또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표 II-5.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r/LSW/lsiInfoP.do?efYd=20220113&lsiSeq=238325#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먼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 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주민조례발안)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는 주민이 일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⁶⁾에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3) 청소년 관련 법

(1) 청소년기본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추진 방향은 청소년의 참여, 창의성과 자율성,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념과 방향과 더불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시책과 재원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제48조).

표 II-6.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8조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장 제5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제1장 제2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각 세부 활동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표 II-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장 제2조, 제2장 제5조

제1장 제2조(정의)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2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9#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제5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제9조)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2조의 2)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필수 연계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연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연계·협력 주체의 대상과 협력 내용 면에서도 더 포괄적이고, 사업 지향점도 지역의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표 II-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9조, 제12조의2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출처: 국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851#0000>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제1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제3조). 또한 이들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제12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 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24&lsiSeq=230449#00000>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

- 1. 분석 개요
- 2. 분석 결과
- 3. 소결 및 시사점

1.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 현황을 개관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단체와 학교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중앙부처 또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시작된다. 본 장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중앙, 지역, 민간을 구분한 후, 각 층위에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네트워크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 사업은 다음 <표 III-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중앙부처 수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단일 부처의 사업이지만, 사업 내용으로 볼 때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업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유학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이에 분류하였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선정하였다.

7) 이 장은 김은경 교수(공주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다음으로 민간 수준에서는 기관이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례인 삼성꿈장학재단 사업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접근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낸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사례 그리고 민(民)이 주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와 연계한 서울 노원구와 천안의 사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주된 작동 방식으로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돌봄을 지원하는 사례에 주목하여 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사업별로 공개된 사업별 기본계획이나 운영 지침, 우수사례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고,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III-1. 분석 대상 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중앙 부처	다부처 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계부처 합동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농어촌교육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제 구축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단일 부처 지역사회 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학교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지역	지자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교육문화분과 등)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지자체-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역별로 사용하는 명칭은 상이)	
민간		(기관 지원)삼성꿈장학재단 지역네트워크 사업 (지역의 자발적 접근)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기관 주도-공공기관 연계)(사)청소년과 나란히,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학교 연계 사업	

2. 분석 결과

1) 중앙 부처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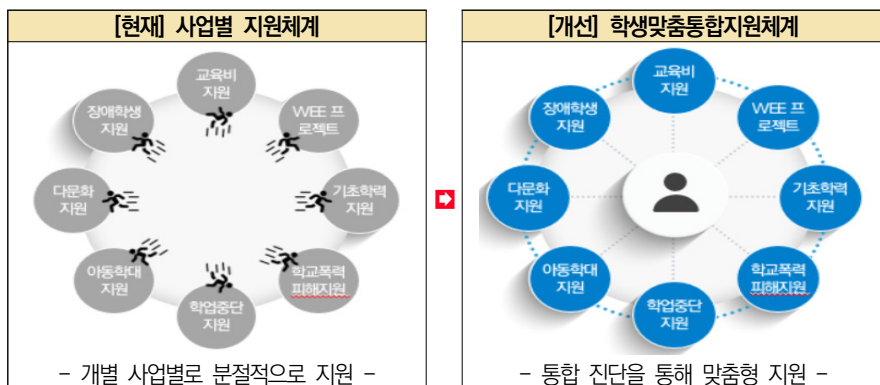
(1) 관계부처 합동 사업

①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교육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現,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Wee 프로젝트,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을 총괄·연계하는 제어탑이 없고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일상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 간 통합지원 체계 구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형식적 네트워크 운영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2).

이처럼, 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방식으로서는 학생들이 겪는 복합적인 양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 개편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간·전문 인력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근거법[(가칭)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둘째,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19개의 시범 교육지원청 및 96개의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구성원의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통합 가이드북을 개발·배포한다. 셋째,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형통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안).

그림 III-1. 학생 삶을 중심에 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이전까지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사업 대부분은 사업 확장을 위한 방법론으로 ‘연계’를 시도하였다. 예컨대, 후술할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부가 주도하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농림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런 방식은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교육에서 도시 활성화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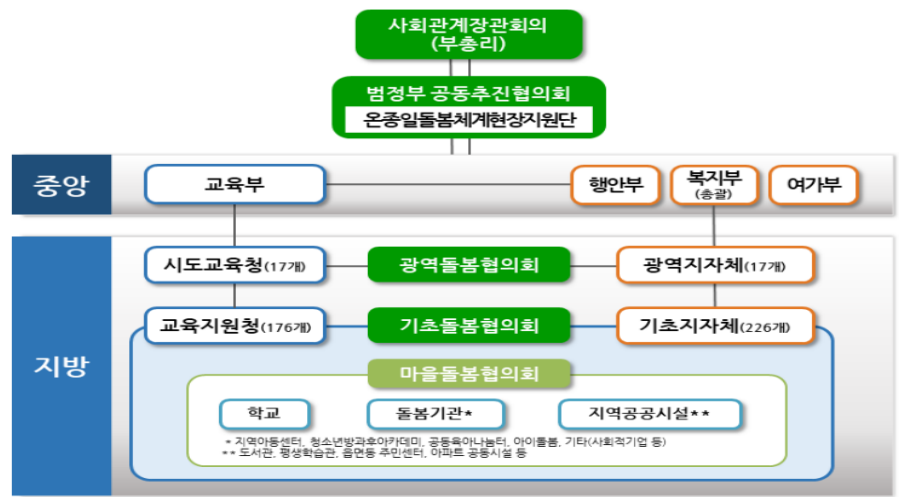
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춤 통합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실행의 핵심에 ‘연계’를 위치시킨다. 실제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연계·협력해야 한다. 또한 사안별로 운영 중인 각종 협의체를 학생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런 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기존의 부처, 부서 간 연계 사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②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사업),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등 여러 부처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의 문제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 부처가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상의 사업들이 부처별로 추진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이 감소 된다는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8). 온종일 돌봄체계란 관계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를 일컫는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를 통해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처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중앙과 지방정부 연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김은경, 최서린, 이희현, 2023).

이 사업은 지역 혁신을 통한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중앙·지방의 돌봄 협력 및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구상한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이희현, 김효정, 최형주, 김은경, 손호성(202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충청북도 :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III-2.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우선, 사회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범정부 공동추진단과 부처 합동 실무추진팀을 설치하여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지원조직을 설계하였다. 특히,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2017년 9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역할에서, 2019년 3월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협의회로 개편·운영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4. 11).

지역에서는 광역 수준의 돌봄협의회와 기초돌봄협의회, 마을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마을 내 학교, 돌봄 기관, 기타 지역의 공공시설(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등) 등이 협력하여 마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교육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기 돌봄체계를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부처 칸막이를 없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과 '선도사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9개 지자체(구체적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를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까지 지역에 특화된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하였다(관계부처 합동 교육부, 2018; 이희현 외, 2021).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학교와 마을 기관을 넘나드는 돌봄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다.

(2) 교육부 주도

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교육부는 2020년부터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기반 교육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 연계를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교육부의 유관 사업(예컨대, 평생학습도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학교자치 활성화 사업 등)과 타부처 사업(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안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농식품부 교육문화복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교육의 다양한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협업해 갈 것을 지향한다.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일반-교육행정 체계 간의 협력 시스템 부재, 일방적 소통의 한계 등의 문제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데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전신(前身)은 2018년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이다. 2018년 18개 지역, 2019년 4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지역별로 1억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당시 주력했던 사업 분야는 거버넌스 구축과 교육사업 협력이라는 두 가지로 사업으로 설명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2019년까지 유지되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은 2020년 부처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교육의 특화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지역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교육사업이 부처 간 연계 구조 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2. 2020~2021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의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명칭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
목표	-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협력 -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선도모델 개발
기본방향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체제 구축 - 삶과 배움이 일치 된 학교체제 및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 - 다양한 상상력을 더한 지역교육 기반의 특화 모델 개발

* 출처: 교육부(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체제 구축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세종: 교육부.

3년간 1~3년 차 미래교육지구가 선정·운영되었고 2022년 기준으로 총 33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까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실효성 있게 교육 의제가 논의되고 발전적 모델이 탐색 되었다는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지역 고유성에

기반하고 교육 공공성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을 통해 2023년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기존의 사업과 비교할 때, 학교 자율책임 운영제도를 통한 학교 중심의 지역 교육력 강화와 일반고 역량 강화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표 III-3. 2023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의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명칭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목표	미래형 교육자치 지역교육 협력모델 개발
추진방향	- 지방(교육)자치단체 협력체제로 지역교육격차 해소와 분권 강화 - 학교중심 지역 교육력 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촉진 - 지역교육공동체 참여와 협력으로 공간적 기회균등 실현

* 출처: 교육부(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세종: 교육부.

2023년부터는 사업추진 연차의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선정 평가가 진행되었고, 3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교육 거버넌스의 형성, 공동협력센터 구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타 부처와 지자체 내 유관 부서 등과 사업 연계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드러나는 연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타 부처에서 실행하는 유관 사업 간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역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된 타 부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문화, 복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전남 순천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초등학교의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세대 공감 비타민센터’를 개소하고, 마을교육자치회, 마을돌봄단,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 교육지원사업 등을 운영

하는 관련 센터, 마을조합 등의 입주를 허가함으로써 사업을 연계·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사업실무자들의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 사업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 주민, 마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민·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교육은 공동재(common)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가 공동체적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 지역의 교육 의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구상해 가는 등 스스로의 권한을 높여가는 활동이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강조해 온 민·관·학의 협력과 교육 주체화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을 중심에 둔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 간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다.

② 농어촌교육 지원사업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변화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시점은 1984년(양희준, 박근영, 이재준, 허준, 박상욱, 2022)으로, 정부는 그즈음인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의 쇠퇴로 연결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농촌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민 중심의 교육공동체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부 또한 농어촌교육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지원을 시작하였다.

2004년 이후 이루어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1군 1 우수교 육성사업(2004-2009),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2008-2009),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2009-20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2009-2013), 통합운영학교 육성 사업(2010-201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2013-2017), ICT 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2013-2018), 도서벽지 학교 화상 교실 구축과 운영(2019-2020),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2018-2022) 등이 있다(교육부, 2023).

그간의 사업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내용을 체험할 기회는 부족하고, 질 높은 예술교육 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2023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3개 교육지원청의 273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문제(학업, 문화체험, 돌봄 지원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내 타 부서 및 타 부처와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처 간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예컨대,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주거·생활 SOC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 가정의 주거생활을 함께 지원하기도 하고, 농림식품수산부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희망 포럼을 개최(농어촌 지역의 실태, 교육의 문제 공론화) 하였다.

교육부의 농어촌교육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어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학생 수는 적으나 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교육 지원의 문제야말로 단일 부처 혹은 부처의 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 관계자들은 여러 방면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정책은 삶을 구성하는 영역별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체화 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삶은 여러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상을 만들어 낸다. 이 점에서 삶의 영역별로 제시된 방안들은 중복되거나, 특정한 영역은 모두가 놓치는(결락) 상황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구감소, 열악한 주거 여건, 교육공동체의 쇠퇴 등이 일종의 순환 관계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인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농어촌교육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넘어서 부처 간, 부처 내 타 부서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낼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점에 주목하여 연계 사업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행정안전부 주도의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체제 구축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주도의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사업으로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이 있다. 지역의 일상에서는 자치, 복지, 도시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

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행정안전부, 2020).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중앙부처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조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의 방식으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사업은 '5개 부처(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현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행정안전부, 2020).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5개 부처와 업무협약('20.3.)을 맺고, 이 중 2개 부처 이상에서 실시하는 MOU 기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지역 내 시행 중인 다른 정책(5개 부처 MOU 사업 외)의 연계 방안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필수로 제안하는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그 이하 범위의 소지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 내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할 때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개 부처 간 MOU를 맺은 주요 사업으로 교육부의 '미래교육 지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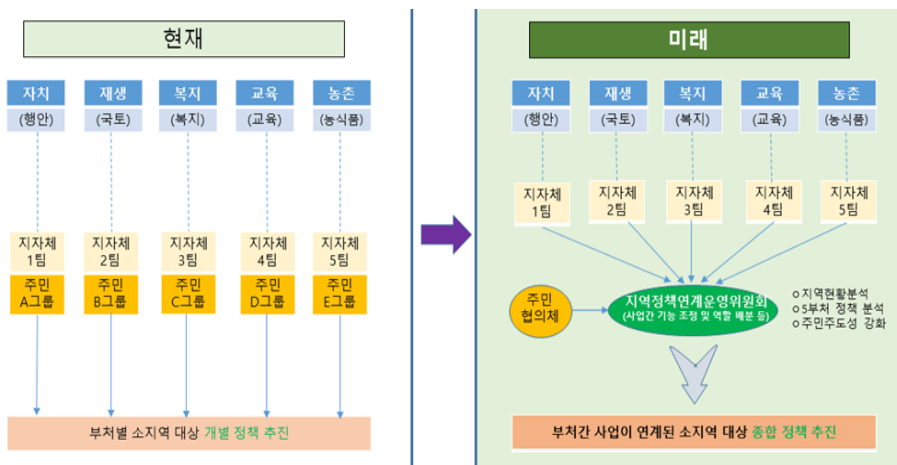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부처 연계 사업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다부처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가칭)지역정책연계운영 위원회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신규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유관 사업 지원조직을 개편·확대도 가능한 것으로 열어두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무국을 두고,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 사업 추진협의체를 지원할 것을 주요 역할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5개 부처 사업 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시행 중인 타 정책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체계 및 주민자치 개편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관계자 교육 및 자문 체계 운영, 협력 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다부처 연계 모델 확산 및 지속 가능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처: 행정안전부(2020).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제 구축 지원사업 공모계획. 세종 : 행정안전부.

그림 III-3.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 공모 및 추진 절차

추진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선정 이후 바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정책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된 부처별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출처: 행정안전부(2020).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제 구축 지원사업 공모계획.

그림 III-4.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 연계 체계 구축

2021년 경기도 화성시, 충남 홍성군, 당진시, 전남 순천시,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부처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부 사업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기획할 수 있어, 부처 사업 간 ‘연계’ 전략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들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주체들에게 부처 간 연계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4) 보건복지부 주도의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를 선정하였고,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82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이 사업은 단순히 센터 하나를 설치하여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유연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 마을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지원청,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 단체 등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원기구로 역할 하도록 설계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경남 거제시에서는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

봄센터 조성 및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센터를 설치하고자 5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공모를 통해 최적의 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거제향교, 거제시 체육회, 지역의 관현악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한편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20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공모를 통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였고, 공동주택관리소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학교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이음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진행하거나,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창의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이처럼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유관기관, 단체,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가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촌유학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촌유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2021)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 유학생의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학생들은 농촌 생활 및 학교 체험을 통해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촌유학센터에서는 농촌 아이들과 도시 유학생, 그리고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역에 존재하는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유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도시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지원한다.

농촌유학센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센터와 마을, 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해야 하고, 사업 기간 중 농촌 유학 운영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러한 조건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한 센터와 마을, 학교는 도시 유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공동체의 활력도 되살리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은 폐교 위기를 맞은 가곡초등학교 대교분교를 살리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한때는 마을 내 80가구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금은 48가구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가곡면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마을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유학 사업을 매개로 상당 기간 마을과 교류를 지속하다 농산어촌에서 생활할 준비를 마친 후 주거지를 옮기며 농촌마을의 인구가 증가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한겨레, 2022.11.7).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29개 시설이 농촌유학센터로 선정·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 유학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농촌유학사업은 단순히 도시의 아이가 농촌에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을 일정 기간 완전하게 변화시킨 상태에서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가 누군가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준비를 넘어,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날 갈등, 관계망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유학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학교와 센터,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해당 마을이 보유한 특색을 반영한 일과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교류하고,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에는 활기가, 학교에는 학생 수 증가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6) 여성가족부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3항, 5항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체험 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3). 2005년 9월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342개소 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연계·협력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에 방과후아카데미 개설을 요청함으로써 공간은 학교이지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연계를 시도한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전문 기관(상담 및 의료)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추진 체계 측면에서는 ‘지원협의회(또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하고, 지역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며, 자문,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지역사회 기관장 또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역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직접적인 지원과 자문이 가능한 관계자로 석수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석수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안양군포 의양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아름회,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상담, 급식, 사회참여활동, 귀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뉴스 피크, 2022).

서울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지역의 보건소, 도서관, 문화재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진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부산의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과 연계하여 청소년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금정희망의사다리운동본부와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②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여성가족부는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각 자원의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인재 외, 2020).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지역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자원 맵 구축 등 지역 실정 및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성장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 사업을 시행하고 혁신교육지구 등 유관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실천하여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연도별로 참여한 지역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2020~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구분	주요 내용
2020년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전라남도 완주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2021년	[지속]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신규]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2022년	[지속] 경기도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신규] 충남 논산시(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 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속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경우, 네트워크의 질적 측면에서 성장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GIS 기반의 협의체 분포의 변화나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회의 참여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참여기관의 지리적 분포 변화는 크지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는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회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기관 간의 교류 또한 활성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한 사업에 참여한 집단에게서는 유의미한 역량 변화가 포착되기도 하였다(최인재 외, 2020).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총 9개 지역을 선정하여 본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단체들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추진 연차별 로드맵도 제시되어 있다. 사업 첫해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협력 연계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2년 차에는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협의체 등 시스템 운영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연계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도 반영되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시범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의 특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학교 안팎 청소년정책 연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개정(청소년정책위원회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참여), 시·도 단위 교육청 조례 제정 권장, 우수 지역 포상 지원, 지역 청소년정책과 지역 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연계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청소년을 포함하는 형태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검토,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생활권 내 이동권 보장 지원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실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을 잘 보여준다.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체 간의 책임감 있는 논의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1) 지자체 주도의 주민자치회(교육분과 구성 중심)

최근 기초자치단체 내 주민자치회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2013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자치회’란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여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 관 운영, 다양한 자치 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 밖에 각종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학습과 돌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 대덕구 대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놀이 시설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대화동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합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 학습 및 돌봄 공간인 ‘꿈드린 방과후 배움터’를 2021년 하반기 동안 운영하였다. 마을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주민자치회 구성원 및 마을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로 돌봄을 실시하고,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주민자치회 안에서 마을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활동은,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구축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 교육(지원)청 주도

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IMP 외환위기 이후 더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비롯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8) 출처: 제20회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https://dev.juminexpo.or.kr/>에서 2023년 5월 17일 인출.

학습, 문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06년 본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011년에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명칭 또한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발굴(파악), 맞춤형 지원(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 환경 조성(협력체계 구성, 역량 강화 연수 등), 운영 지원(전담 조직 운영, 교육복지실 운영 등)의 네 가지 사업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계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를 망라한다. 우선 학교 내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며, 교육과정과 활동의 연계를 고민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단체뿐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과 폭넓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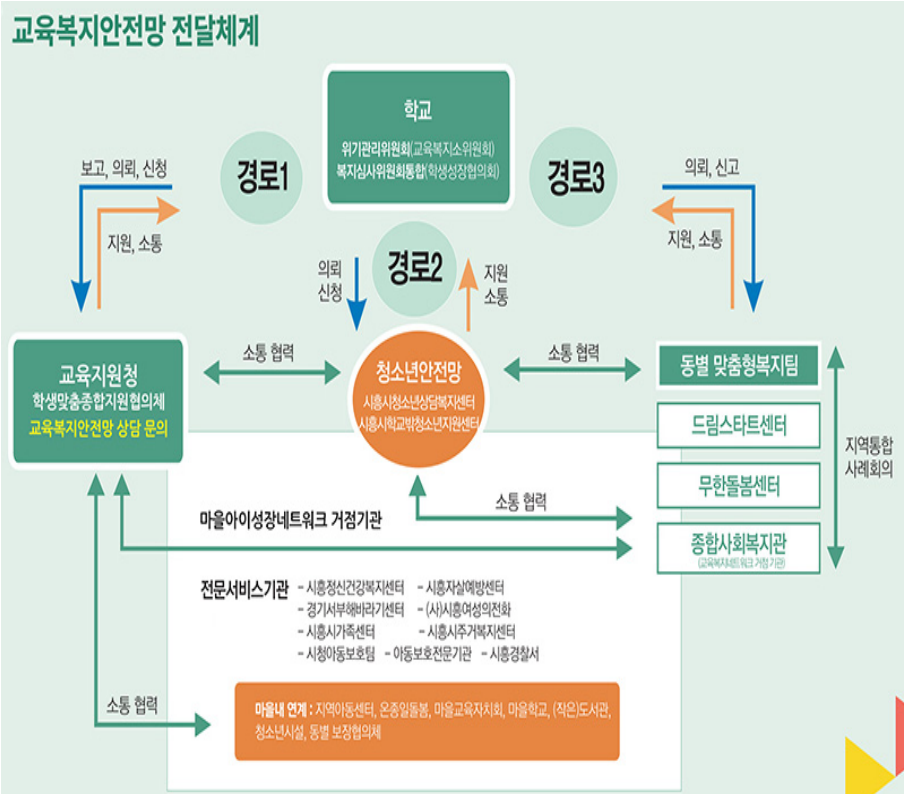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최근 발표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간 연계는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생 및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소득분배구조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경남교육청, 202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모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연계 기관을 확대하고, 지정 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

관리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한다. 대상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협력 기관·단체 역시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생계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재단, 지역 내 봉사 단체 등과 협력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놓고 있다. 실제로 상담 자체가 어려웠던 학생 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를 연계하고, 초록우산과 월드비전 등을 통해 생계, 주거 부분의 문제 해결을 연계·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sh.kr/base/contents/view?contentsNo=56&menuLevel=2&menuNo=74>)에서 2023년 5월 9일 인출.

그림 III-5.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전달체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돌봄, 안전의 공백이 발생하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때 참여했던 경기도 시흥시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그림 III-5]를 보면, 경로 1의 경우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교육지원청에 의뢰, 신청,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진단 및 필요 서비스를 판단하여 학교 내·외의 자원에 연계·조정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 2는 수시(연중) 혹은 정기(매월 셋째 주 수요일)적으로 학교에서 대상 학생이 발생하면 청소년안전망에 의뢰하게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경로 3은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사례를 연계하게 되고, 동별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드림스타트, 무한돌봄센터, 복지관과의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 지자체-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⁹⁾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김용련 외, 2020)을 말한다. 교육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종의 교육 운동이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후, 2013년 서울시 구로구, 2014년 서울시 금천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전개되었고, 2015년 이후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등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의 목표와 내용 또한 혁신 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보다는 지역 전체의 교육력 제고를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양병찬 외, 2019).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학교와 마을, 주민자치 조직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충북 충주에 사는 민관이 협력하여 충주 청소년 자치공간 및 문화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교육부,

9) 시·도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혁신교육지구가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본고에서도 혁신교육지구로 칭함

2021a). 첫 시작은 지역에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충주교육지원청은 2020년 8월 청소년정책 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20년 충주행복(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치 공간을 조성하였다. 시장 내 설치된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에서 ‘어울림 문화 배움터 다락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침체되었던 시장은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변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간과 즐길 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나아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어린이집터를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주지역 교육 의제 발굴과 교육 활동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충주교육넷 꿈꾸는 숲’과 행복교육지구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이 협력하였다. 이처럼 지역별로 선정된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1) 민간 기관 지원: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이 있다. 2006년 설립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現 삼성꿈장학재단)에서는 ‘배움을 통해 꿈꾸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고른 기회 배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빈곤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지원과 교육여건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배움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배움터 연대 교육사업, 네트워크형 통합 교육사업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2007).

2008년에는 프로그램 지원, 지역교육네트워크 지원, 민·관 협력 교육네트워크 사업, 대학-지역사회교육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원 유형이 세분화(양병찬, 이영재, 남기철, 정익중, 김민, 2009)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변화 과정을 거쳐 2023년 현재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이 지역형 교육복지사업과 주제별 교육복지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 지역형 교육복지사업이 2007년 배움터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5.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추진 개요

구분	내용	
2007 고른기회 배움터 지원 사업	배움터 프로그램 지원(단일 기관의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 연대 교육사업 지원(2개 이상의 기관, 협의체에서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 네트워크형 통합 교육사업 지원(기관, 학교, 협의체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직·간접적인 교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	
2023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	지역형 교육복지 사업	교육복지 개별 사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공동사업(3개 이상의 배움터 연계 기반의 프로그램 공유형, 교육과제 발굴형) 지역교육네트워크사업(면·동 단위 네트워크가 지역 내 교육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과제 발굴 및 해결)
	주제별 교육복지 사업	기초학습, 과학·IT,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젝트, 스포츠

* 출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7). 고른기회장학재단 사업계획 및 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sdream.or.kr/w/w eb35gV/>)에서 2023년 5월 12일 인출.

재단의 사업은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성장뿐 아니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참여 주체들의 공동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배움터 연대 및 네트워크형 통합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 소외 문제에 관심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연대하도록 촉진하고, 통합적 교육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교육네트워크사업의 경우, 지원 예산으로 네트워크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 내용으로 협의회 구축·운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교육기관·단체들이 공동의 과제 개발 및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추진하며 연대하는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도 광주의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에서 형성한 교육네트워크 ‘화월주’는 2007년 당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문화·청소년 단체 활동가, 배움터 실무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이 과정을 매개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결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양병찬, 한혜정, 2018).

(2) 지역의 자발적 접근: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¹⁰⁾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 옥천군의 행복교육네트워크가 있다. 옥천에서는 2015년 12월, 지역에서 지역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던 지역주민과 교사들이 모여 ‘지역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 모임’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대모임 구성 이후 2016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의 교육경비 문제를 토론했기도 하였다. 실제로 옥천군에서 교육경비는 2011년 기준으로 약 34억 규모로 지원되다 2015년부터는 사라지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청소년들이 구상하고 설계, 시공까지 맡아 진행하는 청소년 주도의 생태놀이터를 만들고, 충남 홍동마을, 완주 로컬에듀를 견학하였으며, 연말에는 두 달간 옥천행복교육지구(혁신교육지구)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옥천행복교육을 구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옥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출발하였고, 2018년 5월 18일에는 임의단체 성격의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정관에 명시된 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는 옥천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상호협력하면서 옥천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배우고 미래의 역량을 길러나가며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옥천지역의 교육 의제를 개발하여 지자체나 교육기관에 제안하고 요구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옥천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교육네트워크는 위에 제시한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한 자발적 회원(지역주민, 교사 등)들로 구성되었다.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사례 탐방 및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고, 연도별로 지역의 교육 의제를 발굴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헬기 위한 의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옥천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지역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교사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10)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2020, 2021, 2022)는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연도별 총회 자료집이 정리되어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함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청소년자치배움터’가 만들어지고, 마을카페 공간들이 조성되었으며, 옥천교육도서관 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자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에는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옥천군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옥천지회, 함께살이, Too, 옥천청소년자치배움터 징검다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이 연합하여 ‘우리가 바라는, 2022년 옥천교육’이라는 이름의 옥천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준비모임을 구성하였고, 이후 3개월간 4차례에 걸친 워크숍,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임의단체로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등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해 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성도 갖추고 있다. 이상의 조직화 과정을 토대로 형성된 행복교육네트워크는 관(官)의 예산 지원 및 이에 따른 관리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옥천의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하며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두 번째 특징은 꾸준한 학습(책 토론, 사례 탐방,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구성원 간의 성장을 시도하고 있고, 성장한 구성원의 힘으로 정책 제안, 교육 의제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구성원 개인 및 네트워크의 공동 성장을 추동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기관 주도의 공공기관 연계 : (사)청소년과 나란히,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최근, 지역의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가 학교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등장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과 결합하거나, 민간 기관이 주도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사)청소년과 나란히’의 교육복지네트워크사업과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의 학교 연계 사례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現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범지역이었던 서울시 노원구는 1990년대부터 빈곤 지역 운동을 해 온 실천가들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이다. 사업 초기부터 노원구는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민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며 활동하였다. 특히, 공적 자금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07년 5월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는 스스로를 가정, 학교, 지역을 잇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규정하며,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였다(김지선, 양병찬, 2019).

2023년 현재는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사람, 자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설 기관으로 노원교육복지센터, 청소년 아지트, 대안교육기관 창창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소외 학생 및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역 내 관련 기관 네트워크 사업, 진로 교육 사업, 학부모교육 사업,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지역교육 네트워크 조사 연구 사업, 연수 지원 사업 등이 있다¹¹⁾.

이 중, 노원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복지 통합지원팀에 참가하거나, 연수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지원,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내 공동사업 추진 등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노원 교육복지센터, 서울특별시거점1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주관하며, 노원구, 교육복지우선지원 거점학교, 노원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노원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등이 협력하여 ‘제17회 용감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교육취약 학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와 노원교육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한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기회의 장으로 운영되었다¹²⁾.

노원구처럼 여러 기관·단체가 연대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지역의 청소년시설이 학교나 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된

11) 출처: 사)청소년과 나란히 홈페이지, <http://naranhi.net/greetings>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12) 출처: 교육연합신문 기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제17회 용감한축제’아동청소년이 행사 직접 진행. <https://www.eduyonhap.com/m/page/view.php?no=67495>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

청소년의 삶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연속된다는 점에서, 전술한 청소년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기관·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된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 운영하였을 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활동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6년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역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진로 교육 및 체험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취미·인성 개발 활동,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인 특강, 직업 체험, 학과 탐방 등이 있다¹³⁾.

전술한 노원구의 사례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이 주도하여 청소년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의 사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관이 현행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노력에 공공기관과 학교가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 및 학교의 연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의 정책사업이 민간의 자발적인 연계 노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서 주도하는 정책사업과 민간의 자생적 힘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출처: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http://www.cayouth.or.kr/index.php>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3. 소결 및 시사점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단체, 조직 간의 연계·협력이 필수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다양한 교육 주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21b). 학교 교육 실천에서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 및 상호연계와 협력을 주요 실천 전략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주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조되긴 하였으나, 본래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지원 주체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정책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 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부처 간 MOU 체결,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 구성 등)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이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체제 구축 지원 사업 등은 기존에 수행하던 부처별 정책사업의 실효성, 접근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부처 간 정책 연계사업이다. 이런 방식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확(的確)하게 연계할 수 있어, 청소년이 경험하는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누적되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광역-기초-마을로 이어지는 협의체가 형성되는 등, 층위별 주체들의 소통 체계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별 주체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중심에 두고 연계,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 있는 분야별 주체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찾고, 협력하며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종의 교육 자치를 구현해 가고 있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회,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원들이 모여 지역 청소년의 활동을 함께 고민하고, 학교와 지역 이장단, 주민 중심의 마을학교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등

청소년의 학습과 돌봄, 일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과정은 서로 다른 분야의 구성원들이 지역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누적됨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주체들의 활동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부족한 부분(학습, 문화, 복지 등)을 지역사회 주체들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까지 폭넓게 구상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와 같이 최근 빠르게 확산된 정책 역시 지역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자치성, 주체성을 키우는 새로운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천 중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주체 간의 상호보완성과 협력관계가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며 실천 활동의 관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상의 특징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재단의 지원이 누적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부처 혹은 어느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와 관계없이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사업별로 사업 추진 체계를 별도로 구성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 유사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여러 갈래의 추진 체계(교육협력센터, 광역 및 기초 단위 사업별 협의체 등)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체들은 여러 체계 속에 중복참여하게 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추진 방식을 경험하게 되고,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별도 조직보다는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 추진 체계 구성을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별 협의체가 작동하고 있어 이 역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 사업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추진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서는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 중 유관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경북 의성군에서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평생교육팀에서 학교 지원, 미래교육지구, 장학금 지원,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평생교육 업무를 맡는 등 지역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지원청과 효율적으로 협업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사업 역시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먼저 제안하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떤 형태로 유사 사업과 연계하고 역할을 나눌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참여, 연계·협력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성장지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둔 협의체 운영을 강조하는 것처럼,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사업이나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지역사회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 온 사업과 결합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별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원의 대상이나 방법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사업 간 연계 방식을 찾고 부처별로 강점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협력 구상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 분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 1. 사례 분석 개요
- 2. 지역별 인터뷰 분석 결과

1. 사례 분석 개요

1) 사례지역 선정 절차 및 현황

이 장에서는 그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의 사업들을 평가해 보고, 본 사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 지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시범사업 지역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던 지역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총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지역 현황은 다음 <표 IV-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시·군·구 행정 단위별로 각 2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사업 운영기관별로, 재단 2곳, 청소년수련관 2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곳, 청소년문화의집 1곳 등 행정 단위별, 사업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 분석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분석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 중 경기도 부천시와 전라남도 곡성군 등 2개 지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2019~2021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이 수행된 지역이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재단 설립 이전 민(民) 중심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지역이다. 최근 재단 내 부천미래교육센터가 배치됨으로써 현재 재단과 센터 간의 사업 연계·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곡성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던 지역으로 특징적인 점은 곡성군미래교육센터를 곱

14) 이 장의 1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의 1)~3)은 김민 교수(순천향대학교)가, 4)~6)은 강영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성군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타 지역과 달리 재단 내에 청소년지원팀을 조직하여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한 지역이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완주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원시 진해구 등 4개 지역은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을 수행한 지역들이다. 먼저 성남시는 원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두 지역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지역의 중요한 이슈이다. 재단 내 성남시 교육지원단(현재, 미래교육실)이 배치되어 있어 교육 분야와의 연계·협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지역이다. 완주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친화 도시팀의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시범사업은 1차 년도 사업만 진행하였다. 수성구는 2년 차부터 사업에 참여한 지역으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담당하였다. 수성구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최근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도 선정되어 교육부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는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담당하였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사업 시행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마을 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이다. 진해구의 경우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 분석 지역

구분	지역	시범사업 담당기관	비고
시 지역	부천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재단 내 부천미래교육센터 배치, 시범사업 후 재단 사업으로 추진, 재단 설립 전 민(民) 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구역 상 중소도시에 해당하나 전체 인구규모 상 대도시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청소년재단이 PM기관으로 참여
군 지역	곡성군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당지역 수련관 없음,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선정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청소년지원팀 조직되는 성과)
	완주군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자체(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가 PM 기관, 1차 년도 사업만 참여
구 지역	수성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열이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지자체(교육지원과 청소년팀)가 PM 기관으로 참여. 2년 차부터 사업 참여, 미래교육지구 선정
	진해구	진해청소년수련관	인구수로 볼 때에는 대도시 1개 구 규모의 지역으로 진해청소년수련관이 PM 기관으로 참여

2) 분석 방법 및 질문 내용

분석 방법은 초점집단인터뷰(FGI)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을 구성해 자유로운 토의 과정에서 복합적이며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결론 도출에 이르는 질적연구 방법이다 (Morgan, 1997). 초점집단인터뷰는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른 각자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조직적인 과정이며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효율적이다(Creswell, 201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토의한 사건과 경험들은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연구자의 연구 결과로 나타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공동경험이 재구성되는 과정이 되어 질적 논거를 타당하게 마련할 수 있다 (Creswell, 2017).

사례 분석은 해당 지역의 담당자로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지역별 5~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취 스크립트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분석은 1단계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노트에 메모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단계로 자료를 읽어가며 무엇을, 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메모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3단계는 개념의 생성 및 범주화 작업을 수행한 뒤, 4단계로 개념과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제를 형성한 후 5단계로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대조해 가며 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최종 결과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크게 공통 질문과 지역별 개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공통 질문으로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성과(개인, 참여기관, 청소년 혹은 지역의 변화 등)는 무엇이며,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추진 방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을 질의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부처 사업 현황과 향후 본 사업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지역별 개별 질문은 연구자가 먼저 지역별 사업 성과물과 담당자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 사전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별 질문 내용은 지역별 추진 사업의 특성과 수행 과정 및 방식 등에 관해 질의하였고, 지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필요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IV-2. 주요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사업추진 동기와 배경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사업추진 전, 후의 상황 변화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시(군)는 청소년 등 성장세대가 살기에 어떤 조건을 갖춘 도시였나요? -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의 가장 뚜렷한 변화를 꼽으려면 무엇일까요(사업추진 성과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질문이 있음)?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와 추진 방향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요 추진체제와 역할	지역의 핵심 추진 주체와 주요 협력 기관, 각 주체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 주십시오.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2) 본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3)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거나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타 유사 사업과의 향후 관계 설정	현재 지역사회에서 추진 중인 1) 관련 부처(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농림식품부 등)의 유사 사업(미래교육지구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안전망,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농촌유학사업,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도시재생, 다함께돌봄사업, 방과후아카데미, 늘봄학교 등) 혹은 2)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관련 유사 사업과 본 사업과의 향후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사업은 청소년과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 이해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제도적인 보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법적 근거, 인력 배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 또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만족 수준과 지속추진 의지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울러 성장지원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지, 또 계속 추진된다면 계속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3) 인터뷰 대상

인터뷰 참여 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사업의 시범지역 담당자를 통해 추천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로 5~7명(성남시의 경우 담당자의 전출 등으로 2명으로 진행)을 최종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문항은 순서대로 질문하되, 중복 시 생략하거나 필요에 따라 세부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다.

표 IV-3. 인터뷰 참여자

지역	구분	소속	직책
전라북도 완주군	참여자 1	완주군청 00과	팀장
	참여자 2		주무관
	참여자 3	사회적협동조합 00네트워크	국장
	참여자 4	00청소년수련관	관장
	참여자 5	00대학교 휴학중	청소년
	참여자 6	00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선생님
	참여자 7	완주군청 00과	팀장
전라남도 곡성군	참여자 1	곡성군청 00과	팀원
	참여자 2	곡성00초등학교	전문상담사
	참여자 3	곡성군00센터	센터장
	참여자 4	곡성00회의	집행위원장
	참여자 5	곡성군00재단	이사
경기도 부천시	참여자 1	부천00재단	차장
	참여자 2	부천00재단	관장
	참여자 3	부천00재단	센터장
	참여자 4	위기청소년의 00	이사장
	참여자 5	부천시청 00과	주무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여자 1	수성구청 00과	공무원
	참여자 2	00청소년수련관	부장
	참여자 3	00청소년수련관	센터장
	참여자 4	수성구청 00과	공무원
	참여자 5	수성구00센터	센터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참여자 1	00청소년수련관	관장
	참여자 2	경남00센터	센터장
	참여자 3	00연구회	연구위원
	참여자 4	00진해생협	이사장
	참여자 5	00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성남시	참여자 1	성남00재단 00실	실장
	참여자 2	성남00재단 00센터	센터장

2. 지역별 인터뷰 분석 결과

1) 전라북도 완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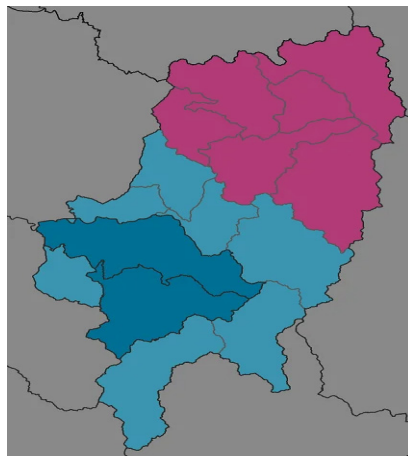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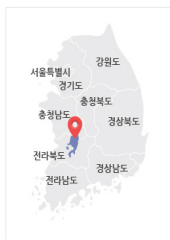
(1) 지역 현황과 특성

완주군은 3개의 읍(삼례읍, 봉동읍, 용진읍)과 10개의 면(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으로 구성된 곳이다. 노령산맥 서쪽 사면과 호남평야 북동 연변부를 차지하며 지금의 전주시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완주군의 완주(完州)란 명칭은 예로부터 완산주(完山州)-원산(圓山)-전주(全州) 등의 지명과 서로 얽히고설키며 오늘에 이른다. 지명의 유래에 따르면 풍수적인 의미에서 큰 산이 지녀야 할 모든 특성을 가진 곳이란 의미에서 이 지역을 ‘완주’라 부르고 또 그래서 근방의 큰 고을인 전주 역시 ‘온고을’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한다(전북도민일보, 2019.08.01.).¹⁵⁾

역사적으로 완주는 삼한시대에는 원산이란 이름으로 마한의 영토였다. 서기 555년 삼국시대 무렵 백제 위덕왕 2년 이 지역에 완산주가 설치되었고, 이후 565년 폐지되었다가 백제가 무너진 후 신라에 병합되어 685년 신문왕 5년에 완산주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전라 북부지역 지방행정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기 757년 경덕왕 16년에 완산주는 전주로 바뀌었고 군사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이 지역의 명칭이 안남도호부에서 전주로, 그리고 다시 안남도호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주로 부침이 이루어지다가, 조선 건국 이후 1392년(태조 1년)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고, 1403년(태종 3년) 다시 전주부로 개칭되어 조선말까지 변동 없이 이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고산군이 통합되어 전주군이 설치되었고, 1935년에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1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처럼 완주군과 전주시는 같은 지역을 서로 쪼개고 붙이면서 역사의 궤를 같이해 왔다. 일제강점기 때 도농 분리 정책으로 인해 도시지역인 전주부와 농촌지역인 완주군으로 행정 구역이 분리되었는데, 이와 같은 분리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생활권역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은 매우 밀접하다.

15) 전북도민일보. (2019.08.01.) 전주(全州), 지명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540>에서 2023년 8월 2일 인출.



* 출처: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
<https://reman2000.tistory.com/10692905>에서 2023년 8월 13일 인출.

* 출처: 나무위키. 완주군과 전주시. <https://namu.wiki/w/%EC%A0%84%EC%A3%BC%EC%8B%9C>에서 7월 25일 인출

그림 IV-1.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

그림 IV-2. 완주군과 전주시

완주군이 전주시의 주변부, 즉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도시지역인 전주시로의 통학·통근이 수월하고, 전주시 역시 완주로의 이동과 통행이 수월하다. 즉 생활권역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같은 생활권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주시와 맞닿은 이서면, 삼레읍, 용진읍, 소양면, 상관면, 구어면은 전주시와 생활권역이 같고 봉동읍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봉동읍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전주시에 주거를 가진 시민들이 완주군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전원생활 붐이 일어나며 직장을 둔 전주로 출근하되 주거문화는 완주군에 두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생활권역이 전주시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지리적 특성은 완주군이 청소년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근거리에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곳과의 이동이 수월하다면, 인근 도시 인프라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당해 지역의 교육·문화적 특성화를 노려볼 만하기 때문이다. 즉 농어촌 지역이 갖는 인프라 구축에 크게 힘쓰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식 각성화(성장세대를 중요한 시민으로 생각하는 의식 등)에 기초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성장 세대 중심의 특성화를 전략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런 전략은 후술하겠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외화(外化)된다.

완주는 1995년 전체 주민 인구 86,461명에서 2000년 83,651명으로 약간 감소하다가, 2010년 85,119명, 2015년 95,303명, 그리고 2023년 7월 현재 96,338명으로 점증하는 추세다.¹⁶⁾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이 인구감소, 인구절벽 및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도드라지는 인구 사회학적 특징이자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전체 인구 96,338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2023년 7월 현재 13,151명(13.7%)이고¹⁷⁾,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18,606명(19.3%)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전주란 배후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징과 함께 전주와 생활권을 함께 하는 완주군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완주군의 3개 읍, 10개 면 중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삼례읍, 이서면, 용진읍, 소양면, 구이면의 인구 비중이 높고 - 이들 읍면과 비교하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읍면 중 하나인 상관면의 인구수와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작은 편이다 -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봉동읍이 이중 가장 많은 세대수와 인구를 갖고 있다. 반면 경천면이 인구·세대수가 가장 적고 동상면과 비봉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구수와 세대수는 청소년의 인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읍면으로 구성된 군 단위 행정 지역의 경우, 지역의 면적은 넓는데 성장 세대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게 되어 청소년 관련 인프라의 집중과 상대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완주 역시 다르지 않다. 인구가 밀집된 봉동읍, 삼례읍 등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및 기관, 청소년시설과 기관이 밀집되어 있다(최인재 외, 2020: 197~198).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적고 전주 혹은 인구 밀집 지역과의 이동도 수월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청소년 성장환경에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략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즉,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구성원 간의 중지를 모아 정책적 배려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6) 2020년에는 91,609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17) 아동 인구는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wanju.go.kr>)에서,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는 통계청 완주군 읍면별 현황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각각 인출 시점은 2023년 8월3일).

표 IV-4. 읍면별 세대수와 인구현황

구분(읍면)	인구수(명)	세대수(세대)
삼례읍	19,692	10,227
봉동읍	24,697	10,912
용진읍	9,385	4,742
상관면	4,092	2,070
이서면	14,436	6,931
소양면	5,792	2,694
구이면	5,581	2,944
고산면	4,394	2,338
비봉면	1,800	1,020
운주면	1,897	1,159
화산면	2,543	1,355
동상면	1,062	597
경천면	967	557
합계	96,338	47,816

* 출처: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s://www.wanju.go.kr>에서 2023년 8월 12일 인출.

(2) 지역 내 정책사업의 현황과 변화

완주군은 2016년 1월 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서울시 성북구가 2013년 11월에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이다. 특히 군 단위에서는 처음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이하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또는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적 원칙(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등 4가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10가지의 구성요소¹⁸⁾를 갖춘 지역 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또한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18) 10가지 구성요소는 1. 아동권리 전담조직,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의 참여체계, 4.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옴부즈퍼슨), 5.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6.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7. 정기적인 아동권리현황 조사, 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9. 아동영향평가,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정요소) 등이다.

파악·평가하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데 그 일환으로 상위단계 인증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4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2020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까지 인증을 받았다. 상위단계 인증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지역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협업하는 구조로 추진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업 초기부터 완주군청 행정복지국 내 교육아동복지과를 주축으로 군내 민간 부문의 전문 인적 자원 및 시설 자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의 성격을 일신하고 아동친화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2022년)에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에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도 조성하였다. 참고로 전주시 역시 2017년 6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2월 상위단계 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다.

완주군은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사업(이하 성장지원 사업)'에 「농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모델」로 참여하였다. 당시 1년 차 선정 지역은 시 지역-구 지역-군 지역으로 나뉘어 총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시 지역으로는 대도시형(성남시)과 중소도시형(구리시) 각각 한 곳, 구 지역으로는 중소도시형(창원시 진해구) 한곳이 선정되었고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선정된 것이다. 당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들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추진해 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 사업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완주군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시설(학교)과의 협력을 위해 완주군청과 완주교육지원청 간의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지자체 산하에 허브기관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교육 주체의 발굴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통합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적용 운영」, 「인적/물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설립 이래 기관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군청-교육청 등 관 중심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0여 개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최인재 외, 2020: 115).

하지만 완주군은 성장지원 사업 2년 차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다른 시 지역 및 구 지역의 지자체들, 즉 성남시와 구리시, 창원시 진해구가 2차 년도에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1년

성과 평가에서 탈락하여 2년 차 진입에 실패하였다. 이유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완주군이 추진해 온 모델이 너무 아동친화도시 성격에 치우쳤다는 평인데, 이는 사업 대상이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보다 여성가족부 사업모델이 도농복합지역이자 농촌지역, 군 단위의 모델 특색을 담기보다 아동친화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주군은 성장지원 사업 2년 차 진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성장지원 사업, 두 사업을 통해 다진 사업 기반 인프라와 지역 네트워크를 토대로 삼아 ‘완주형’ 성장세대 중심 지역 네트워크 모델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3) 인터뷰 분석

완주군의 어제, 그리고 그 시작

완주군은 현재 아동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수범 지역이라고 평을 받는 곳 중 하나이다. 참고로 아동친화도시는 2023년 5월 현재 74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19개가 있다. 이 중 이번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 지역이 6개 지역이고 이중 군 단위가 완주군과 곡성군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완주군은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러면서 도시의 성격을 성장 세대 혹은 다음 세대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성장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가 성장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였다.

“말씀대로 완주군은 두 개의 사업이 포개진 상황이에요. 아동친화도시가 어찌 보면 거름 역할을 했다고 (하면) 성장지원 사업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중략)... 두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의 10개 사업 영역 중 성장지원 사업이 아동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갖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뭐든지 할 때마다 프로그램 기획 등에 아동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아동친화사업과 성장지원 사업을 별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성장모델사업을 하면 아이들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박사님과 정책에 녹여보자 해서 한 거라.”(참여자 1)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공공기관 중심의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2020년부터 상위단계 인증, 즉 아동친화도시 2.0은 우리 지자체 중심이 아니라 민·관·학이 함께 하는 생태계 확산의 기간으로 삼자고 해서 조금은 우리 관에서 힘을 빼고 주민들, 청소년들이 더 참여해서 힘을 기르고 지역사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자는 게 여러 가지 방향 중 한 가지였어요. 2020년에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청소년성장지원 사업 공모가 떠서 그때 계장님과 고민하던 차에 한 번 해보자고 했죠.”(참여자 2)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전의 완주군은 여느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동청소년 보다는 노인 세대에게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졌었고 성장세대 정책은 지역교육지원청의 몫으로 생각했던 것도 여느 군과는 다르지 않다. 군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교류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군수가 아동친화도시를 선거공약의 하나로 삼게 되면서 도시는 자연스럽게 성장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군청이란 공공기관이 아동청소년정책에 앞장서게 되었다. 관 주도의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될 즈음 완주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졌다. 고산면에서 진행된 고산향교육공동체와 순가락 공동육아 프로젝트가 바로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마침 관 주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연계되며 일종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친화(사업)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등한시되고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 한쪽으로 제쳐 놓은 상태였는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그 당시 군수님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오시며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가고 그게 눈에 보이고 그 뒤에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 박소리가 나다 보니 자연히 완주군민들도 아동친화도시가 이런 건가 하면서 관심이 모여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참여자 1)

“저도 2016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실 역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보면 조금은 지역의 풀뿌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관 중심 추진 체계가 강하지 않나 생각해요. 완주군에서 공공 중심의 추진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는 민간에 이전해 버리는 단계로 가고는 했는데 아동청소년 사업들은 관에 집중되어 끌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동친화도시, 성장지원 사업도 저희가 끌고 가는 사업들이었거든요.”(참여자 2)

“2016년 이전, 완주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고산지역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의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산동초를 폐교하고 삼호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 혁신학교가 되고 혁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도시 인구가 생기며 농촌 유학생들이 만들어지고 다음에는 아예 직접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삼호초등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는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세우는 약속 프로젝트에 따라 고산면에서는 교육 관련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어요. 당시 …(중략)… 고산 학교 4곳 교장선생님들이 발표 자리에서 우리학교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만들어진 게 고산향교육공동체였고 그때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퍼져나갔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교육으로서의 문제도 있고 돌봄도 문제인데 교육공동체는 교육청과 보통 연계돼서 많이 움직이고 그런 기반이 되었고, 손가락 공동육아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그게 씨앗이 되고 그걸 완주군 전체로 파급시키는 건 그때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시며 했다고 보는데 처음 뿌리가 되는 건 아마 고산지역의 초등학교들, 고산교육 공동체가 파급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참여자 3)

당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심이 많았던 군수의 생각과 정책은 교육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현실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수는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청년참여 예산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차세대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공동체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군정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군과의 연계점 역할을 선뜻 맡았다. 실제로 고산향교육공동체에서 제안한 로컬 푸드를 학교급식 방식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기능하게 된 것은 당시 군과 군수가 고산향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군이 움직이자 교육청도 협력하게 되었다. 지역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약속 프로젝트와 그에 기반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였던 분들은 로컬푸드나 이런 활동을 하신 건 당시 군수님과 당시의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셨고 그 문제가 교육 문제로 아동청소년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 건 사실 이미 고산에 모여있던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이게 고산면의 의제라고 결정하시고 난 후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저희 센터의 전신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했어요. 고산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태가 만들어졌고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공동체 사회적 경제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정책적으로 역할을 누가 했냐고 하면 교육청의 당시 교육감님도 긴밀하게 관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전북 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지셨는데…(중략)…초등학교, 중학교가 혁신학교 되고 공립형 대안학교로 고등학교까지 된 건 교육청이 긴밀하게 결합해서 가능했던 거고요.”(참여자 3)

성장 세대 중심으로의 전환, 마중물이었던 아동친화도시

이후의 완주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지역사회에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 완주 내 청소년수련시설 중 한 곳은 2006년에 개관했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변화를 타고 2016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덩달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의 수혜는 고스란히 지역의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아이들이 참여기구를 알게 되고, 참여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볼 줄 알게 되었다. 전주란 도시권을 막연히 동경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완주에서도 제대로 세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아이의 생각이 자라났다.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에 개관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2017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 프로그램들은 단조로운 면이 있었어요. 2021년 제가 왔을 때는 성취포상프로그램이나 인증프로그램도 전무했죠.”(참여자 4)

“세 살 때 전주서 완주로 이사 와서 삼례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전북대로 가서 로컬이에요.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꼭 완주에 산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건 중학교 때 (아동친화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긴) 청소년의회부터니까...(중략)...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주를 동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자녀가 전주로 가면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듯해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농어촌에 주소지를 중학교 때부터 두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발 가지 말고 한별고나 완주고를 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대학) 가기 편해요. 돈도 안 들고 인재를쿨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착각을 하시죠. 무조건 전주를 가야한다고.”(참여자 5)

확실히 완주는 아동친화도시가 마중물이 되었다. 한 바가지의 물이 지층 깊숙이 모아둔 지하수 본류를 끌어내듯,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을 도시 성장의 핵심으로 생각하게 한 의식을 불러온 마중물이었던 셈이다. 성장지원 사업은 아동친화도시로 도시의 성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만난 더하기(+) 사업이었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 주도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에 흥미로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익산에 살았고 송○○와는 반대로 청소년시설을 일체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가...(중략)...졸업 후에 교수님 통해 이 일(아동친화도시 사업)이 흥미롭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었어요. 저는 성장지원

사업이, 아동친화도시라는 텃밭에 좋은 비료가 된 것 같은 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익산의 어떤 수련관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사업이냐고. 성장지원이 궁금하다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니, 지역사회에도 여파가 있구나 싶어요...(중략).... 저는 바깥 입장에서 익산과 완주를 비교하면 아이들의 주체성을 끌어올리는 거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올려서 유지하게 하는 데는 좀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참여자 6)

완주는 성장지원 사업 2차 년도에 떨어졌다. 그 이유는 “아동친화도시의 결과물이 부각이 돼서, 아동에 너무 치우쳐서. (성장지원) 사업 자체가 이 사업(아동친화도시사업)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런 평가는 계속 이어졌는데, “아동친화에 청소년들이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을 완주군이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그쪽에서 많이 걸었고 그러면서 다음 연도에 연속적으로 하려 했는데 완주군만 떨어뜨렸죠.”(참여자 4)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에는 성장지원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성된 실무협의회는 성장지원 사업의 네트워크 핵심이 되었는데, 이 조직이 지역의 청소년 중심 네트워크 기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2년 차 공모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기를 잃지 말자고 추스른 곳은 군청이었다. 군청이 주체가 되면서 지역 민간협력 네트워크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대학 등이 더욱 공고하게 결합하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체제를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동친화도시 사업도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실무협의회 조직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갖고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끌어보자 했어요.”(참여자 2)

“누가 중심이 됐어요? 군청이에요?”

“네, 교육아동복지과.”(참여자 2)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비록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에는 탈락했지만, 성장지원 사업은 ‘완주군형 청소년 성장지

원 사업'으로 진화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토대로 삼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실무협의회 내 6개 분과에 5명씩 총 30명이 분과별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해 2021년에 발표하고 이듬해 이 사업들을 고도화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사업 추진은 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내 아동청소년팀이 주도했고, 같은 과의 인재 양성, 평생학습, 여성가족, 보육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등의 6개 팀이 협력하게 되었다. 흔히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사회가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의 경우, 역량을 갖춘 민간의 카운터 파트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약점이 있다(최인재 외, 2022). 그런데도 완주군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상담복지기관, 교육공동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활발하게 기능을 하면서 이런 약점을 잘 메꾸고 있었다.

관(군청)이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원(動力源)이 되면서 시민과의 협력에도 신경을 쓰고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실상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은, 관을 시민사회가 일정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동시에 반대편에서 보자면 일정한 힘을 관이 민간에게 할양(割讓)하는 거버넌스의 원칙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의 대체적이고 보편적인 거버넌스 형태라 한다면,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즉 '참여 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관이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김석준 외, 2023). 그런데 그런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완주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완주군은 청소년의 자치와 참여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예로 완주군은 2018년부터 청소년참여에 사용하는 예산을 연 2억으로 편성하였다. 물론 나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예산의 규모가 감소는 했지만 2억이란 청소년참여 예산액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가장 큰 예산 규모였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는 아이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린다. 교육을 매개로 아동 및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로의 성격 변화는 관과 민의 공동의제가 되었고, 아동친화도시 및 성장지원 사업과 같은 민간과 정부의 지원 사업은 이런 의식의 각성에 적지 않은 촉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성장세대 친화적으로 변모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식, 그중에서도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공동체 의식도 훌쩍 커져 나갔다. 나이가 완주군으로 들어오는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 저희는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든 교육소비자로서의 학부모활동이든 사회적 경제지원조직,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계속 해 왔고 그게 잘 된 쪽에서는 카운터 파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고산에는 고산향교육공동체가 있고 소양에는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요…(중략)…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민간 역량은 여러모로 완주군이 경험 면에서든 숙련 면에서든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군에서 직접 거버넌스를 조직했을 때 민간과 충분히 할 만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여기에 머물고 성장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역의 풀뿌리 교육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고산의 경우 고산면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구축되고, 소양 쪽과 상관 쪽도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 업그레이드되며 교육지원청이나 지방정부에 계속 네트워크, 돌봄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정책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며 정책으로 담아가다 보니 주위에서도 완주군에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례로 전주 인근에서 완주 쪽으로 초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참여자 4)

하지만 완주군도 풀어야 할 문제는 있었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높은 의식과 그에 따른 요구의 이면에는 격차와 차별이 존재하였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득과 소통의 대상이 따로 있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문제1: 세대 간·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인프라 사각지대

성장세대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도시의 상당한 예산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었다.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혹은 청소년정책 및 사업 예산의 몫과 비중이 높아졌고, 이런 예산의 지출은 점차 ‘사회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겨졌다. 새롭게 지어진 도시의 아동친화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인프라를 보고 많은 이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완주로 오게 되었다. 반면, 원주민들은 자녀 농사를 벌써 짓고 난 노인세대가 많았다. 이주민들은 젊었고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응당 노인세대와 성장세대,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골이 깊어졌고 갈등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완주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꼽으라면 이런 갈등의 골을 지혜롭게 메꾸고 좀 더 세대 간, 주민 간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원주민을 향한 더욱 많은 설득이 필요해 보였고, 이주민 역시 그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해 보였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다. 참여 주의와 공동체주의란 시민 중심 거버넌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완주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방향을 잘 가늠 짓고 성장세대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아직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할 말이 많은데…(중략)…젊은 세대와 아이 세대에 투자하면 그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중략)… 바로 성과는 안 보이죠. 그러나 5년, 10년, 15년 후에는 그 친구들이 고마움을 알아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선순환되면 완주는 어떤 지자체보다 발전돼 있을 거고.”(참여자 5)

“지금 용진, 이서, 삼례, 봉동과 같이 도시화 된 지역을 제외하고 거점시설들이 지어지는 경우나 주민단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보통 양상이 아이들 문제, 어른들 문제가 아니라 보통 원주민과 이주민 집단으로 나오게 되고 보통 이주민 집단이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는 비교적 젊은 층이고 원주민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집단이다 보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그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긴장 상황이 여러 경우 있고, 어떤 곳은 적당히 서로 무관심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어떤 곳은 충돌이 크게 있기도 했어요.”(참여자 2)

“원주민들은 먹고사는 게 급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급급하고, 이주민들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요. 완주군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원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참여자 1)

“기존의 네트워크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아주 특수하고 적극적인 이주민들이 여기 들어가 계시고 교육간담회, 교육공동체 쪽은 젊은 이주민들이. 이게 읍면에서 통합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 할 때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과제이기는 합니다.”(참여자 2)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완주군의 이주민들은 군에서도 교육공동체가 잘 발달한 고산이나 소양으로 이주하는 편이다. 전원살이에 대한 로망이 현실로 이어지면서 전원주택 붐도 이곳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어진 인프라는 인구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즉, 인구가 많은 곳, 용진, 삼례, 봉동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도 없고 청소년 인구도 적은 곳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다. 인구·세대수가 가장 적은 경천면과 동상면, 비봉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주면도 그렇다.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해도 정작 이용할 청소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도 분명 아이들은 있다.

“인프라는 주로 어디 있어요?”(연구자)

“용진, 삼례, 봉동. 아무래도 인프라는 인구 따라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5)

“인구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많은 편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고,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이고, 낙후되어 있는 곳은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학교가 많은 곳에 청소년시설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애들은 바로 그 학생들이라는 거죠.”(참여자 1)

“진짜 공백지대는 인구도 적은 다른 읍면들 있죠? 교통도 좋지 않고 소양이나 고산처럼 주민조직으로 무언가 움직임이 없는...(중략)...주민조직을 못 만들었고, 경청, 운주 이런 곳들은 인구도 적고.”(참여자 2)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 곳곳에서 진행해도 군 안에서의 이동과 접근성이 나쁘다는 점도 문제이다. 도시권역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공간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다.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녹록지 않은 군 지역 실상이다. 그런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아동참여 예산으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수련관에서 해요. 완주군 전체를 다 열어놓아도 막상 오는 아이들은 그 지역 아이들이어서. 그 혜택을 똑같이 보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 혜택을 못 받는 쪽에서는 계속 못 받고 서투를 운영해준다고 해도...(중략)...지금 이서에서도 영상만들기 프로그램을 아동참여예산으로 하고 고산에서도 운동회 같은 것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삼례에 있는 애들이 고산까지 가지는 않아요.”(참여자 4)

완주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통상 미래교육혁신지구사업에 선정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해야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원래는 군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서로 협력하여 중간 지원조직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완주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중간조직이라고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중략)...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해서 중간조직으로 해서 나가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노 해서 반쪽자리로 운영 중이기는 해요. 이걸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저희 팀에서 고민이에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비율로 예산 확보하고 인력 투입해서 거기서 공동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교육청의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 중으로.”(참여자 1)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학교는 물론이고 마을마다 추진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이어 나오는 곡성군의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군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서로 잘 협력하면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성장지원 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 활용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즉 마을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아동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교육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센터가 맡고 있다.



* 출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jedu.or.kr/sub01/sub01_02.php에서 2023년 8월12일 인출.

그림 IV-3. 지역별 교육자원 유형

완주군은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196호)를 2012년 4월 25일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교육자원 활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교육통합모델을 창출하고자 2014년에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완주군 3개 읍 10개 면을 작은 학교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자원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2: 교육지원청과의 소통과 협력

그런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마련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여전히 반쪽이란 점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군이 주도하고 시민사회 및 민간 단체의 자원들이 잘 협력하고 결합 되는 이 지역에서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왜 반쪽이 되었을까?

이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 갖는 어려움을 거론하였다. 주무하는 부처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과 형태도 다른 데다가 무엇보다 사업을 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하였다. 군은 교육경비를 통해 현재 학교에 1억 원, 교육지원청에 1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경비는 창의적 교육특구사업과 무상교육사업,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사업 등에 지원되고,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은 기숙형 학교 급식비 지원과 예체능장비 지원, 학교와 농촌유학센터 협력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농촌유학센터 협력 사업은 올해 학교가 거절하여 농촌유학센터로 직접 지원하는 데 그 지원 규모가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 3억 원 정도라 한다. 군은 이런 사업들과 예산이 교육통합지원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도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사업은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되었지, 사업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것은 간섭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건 마치 공적 기관들끼리의 힘겨루기 같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도 보이기도 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학교와의 사업 이해는 넓어졌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실천의 장면에서는 여전히 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였다.

“만약 10억 사업이다. 하면 군과 교육청에서 5억씩 부담을 번번히하고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는 운영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우리 맘 같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휘두르려 하고 우리는 우리 조건에 맞춰라 하는 거죠. …(중략)…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략)… 이런 사업들은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중간조직에서 해야 해요. 우리가 지원해서 여기서 계획하고 학교로 지원하고 이런 게 이뤄져야 하는데. …(중략)… 제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협력이니? 지자체에 돈 달라고 하면 예스하면서 (돈만) 주는 게 협력이냐고.’ 그래서 한동안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 안 주지, 까랑까랑 따지지. ‘사업에 관해 우리를 믿고 해야지, 왜 너희들이 자꾸 못 믿게 보조금 정산하라 그러고 어디에 썼는지 결과 보고 하라고

하나,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기관 대 기관이면 믿어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보조 결정할 때 이런저런 사업에 쓰라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참여자 1)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 사업 : 조례 제정과 네트워크의 실효성 제고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성장지원 사업을 거듭해 오면서 완주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도시의 조건들을 열추 갖춘 것으로 보였다. 비록 원주민과 노령세대, 교육지원청에 대한 설득과 일부 구성원들의 부족한 사업 이해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너른 이해는 확실히 확보되었고 또 공감대 역시 확산하는 중이다. 지역사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의 공약과 군의 실천 의지, 민간 전문가의 행정공무원으로의 입직,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호응, 자생력 있는 풀뿌리 시민교육운동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속도를 붙여왔고 청소년과 시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참여경험의 확산,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이 적절한 사업의 성과로 환류되면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게 되었다. 이제 완주군이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여 이런 기반과 의식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안과 함께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인적 자원의 확대 등이 대두되었다.

특히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유관 조례 중 어느 하나의 조례를 선택해 독립된 장으로 분리하거나 항을 삽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은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만큼 이미 성공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지속할 수 있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차에 제안드린 게 조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독일에 있을 때 아동보호 쪽에 아동보호협력법이 있어요. 완주에도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역량 있게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조례를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중략)...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워낙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조례에 들어가도 되는데 좀 상징적으로 완주에서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협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보면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참여자 2)

네트워크도 대상과 의제에 따라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보통 군 단위 지역사회에서는 활동하는 인적 자원이 한정된다. 원래는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할 수 없지만, 좁은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다 보면 인적자원의 중복은 물론이고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중복마저 쉬이 겪을 수밖에 없다. 완주군만 해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비롯해 관련 네트워크를 꼽으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아동보호심의위원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농촌유학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대상이나 의제에 따라 포괄적으로 묶어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하는 사람만 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열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여러 갈래 사업들이 각자 다 소집하잖아요. 인적 구성도 상당히 겹치고, 이런 문제가 아동청소년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도시, 사회적 경제 협력네트워크 등 핵심의제 단위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청소년과 교육 문제, 혹은 돌봄 문제까지 하나로, 노인과 노인 일자리, 노인 돌봄문제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가능하면 주도성이 민간 쪽으로 계속 이익이 돼야. …(중략)… 이게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의제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주도성이 민간 쪽으로 더 가서 민간들이 일상적으로 네트워킹이 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완주군 전체 의제를 한 군데에서 다루면 지역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 최소한 면 단위에서의 교육 관련 상시적 네트워크가 있는 곳은 그걸 바탕으로, 없는 곳은 그런 게 만들어지는 쪽으로.”(참여자 3)

“한 분이 여기저기 관련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이상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읍면에서 가장 큰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기도 하고, 거의 70~80%가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사업들도 겹치고, 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나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나은가 해서 후원도 나누죠. 서로 알력과 이권이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주민자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면서 주민자치 활동 실적으로 넣는다고 하거나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워요, 분과를 아무리 운영한다고 해도, 작은 곳에서 일하려니 하는 사람이 계속 활동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이 열 군데의 조직에 다 들어가 있고.”(참여자 1)

(4) 소결 및 시사점

완주군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주군의 경우, 지역사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의 공약과 군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실천 의지가 바탕이 되어 지역사회를 전환하고 도시의 성격 역시 성장세대 친화적인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리고 공공조직이 갖는 사회변화의 큰 힘을 순기능적으로 발휘를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수는 차세대 즉, 아동과 청소년 등 성장세대는 물론이고 지역 내 차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서도 평소 상당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공약으로 만들고 정책화·사업화하면서 군청의 공공조직과 긴밀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내 시민사회단체와도 소통이 활발했고 그들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했다. 이런 태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인증 이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서의 공무원들도 개방적인 관점과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성장세대 중심 사회변화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최인재 외, 2022), 완주군은 이의 수범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민간 전문가의 행정공무원으로의 입직과 활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군수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란 정책공약이 점차 고령화되는 지역사회를 아동 친화적 성격으로 변모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면,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공공조직에 입직시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점과 네트워크를 마련하게 한 것은 ‘신의 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였던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소통과 협력도 “OOO 같은 이가 그쪽에만 있었어도”(이)란 말을 하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완주군은 상당한 주목성을 갖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6년 공직에 들어와 올해까지 만 7년을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가 유의해야 할 것은 관료화와 소진(burn out)이다. 그간 소진과 관료화로부터 다소 벗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사업에 따른 성과와 그에 의한 성취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지지하는 대목이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지역 내 자생력 있는 풀뿌리 시민교육 운동은 군이 아동친화도시 사업,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원의 발굴과 공유,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력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을 한 경험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비록 과정 중에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도 변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 갈등을 메우고 함께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비전과 전략을 갖추게 된 것은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완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된 곳으로 꼽히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로컬에듀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오마이뉴스, 2018.6.28.)¹⁹⁾.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해 왔거나 운영하는 교육공동체는 고산향교육공동체를 비롯하여 순가락공동체(순가락 공동육아사업에서 발전된 육아교육공동체), 안의마을사랑공동체, 가천교육공동체, 운주교육공동체 등이 있고 그 산물의 하나인 청소년센터 고래가 있다. 청소년센터 고래는 고산의 미래를 뜻하는 말로 기존 100평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청소년센터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상적이었던 네 참여자의 이야기를 여기에 남긴다. 그들이 생각하는 완주의 청소년 상과 미래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하는 미래의 완주 청소년 상이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꿈꾸는 지역의 청소년은 자생성과 주도성을 가진 아이였고, 완주에서 벌인 여러 사업은 결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꿈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의 핵심이자 목표라 여기고 있었다.

“완주의 청소년이 완주군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아이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시민교육을 받고 참여하며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할 거니, 완주군이 그렇게 되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생각들이 나중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시 40~50대가 되면 완주가 어떤 점이 개선되고 어떤 것을 정책에 반영하면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 의회를 하며 아이들 13명과 독일을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면서 이듬해에 보니 뒤로 빠졌던 아이들이 다 성장한 모습을 보고 놀랐었어요. 스스로 만드는 정책... 그러면 완주군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참여자 1)

19) 출처: 오마이뉴스 (2018. 06. 28.). 교육공동체운동의 중심, 완주를 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9425에서 2023년 6월 20일 인출.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예산이 떨어지거나 군수나 담당자가 바뀌면 사실 정책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국가사업이 아니면 자체 사업들은 누가 바뀌면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동친화 도시도 결국은 공동체 중심,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역량을 갖춰서 끌고 가는 힘을 부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균형이 필요해요. 공공의 힘이 너무 강해서 공공의 말만 잘 듣는 시민이 아니라, 공공과 겨뤄서 청소년들도 힘이 세져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안해도 이게 필요하다고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말하는 힘을 갖춘 주체적인 청소년이 되기를 희망해요.”(참여자 2)

“저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예요.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을 갖고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더군요. 그건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없었어요. 고3이에요. 대학에 간 아이는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진취적으로 살아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는데, 새만금 도로를 새벽에 일어나 두 번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느껴요. 근데 꿈이라는 건 부모가 심어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의 꿈을 만들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아이를 보며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두 아이를 두고 꿈을 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겠구나, 피부로 체감합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수많은 경험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거로 생각해요”(참여자 3)

“교육 이주를 통해 완주로 온 1세대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거나 졸업 후 다시 청년세대가 됐어요. 그 사이클이 다시 완주에서 이어지려면 사회적 조직에서 관찮은 일자리가 나와야 하고 사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서 사이클을 한 번 더 이었으면 해요. 앞으로 10년 정도의 과제가 될 텐데 당연히 대학은 대부분 타지로 가기에 그중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 하겠지만, 돌아온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면 20, 30년이 지나면 또 고향으로 다시 정착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요즘에는 다른 생각들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왔고 교육이 주 했을 때도 좀 다른 교육을 원했던 분들이 많이 왔고. 여기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친구들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이어준다면 하나의 (지역) 선순환이 완성될 수 있겠죠.”(참여자 3)

2) 전라남도 곡성군

(1) 지역 현황과 특성

곡성군(谷城郡)은 곡성읍과 함께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1읍 10면(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의 지역이다. 전라남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전라북도 순창군·남원시, 동쪽으로 구례군, 남쪽으로 순천시, 서쪽으로 화순군·담양군과 접하고 있다. 곡성군 북동부에 위치하는 섬진강 유역의 넓은 평야와 순창군과 접해 있는 옥과면(玉果面)의 구릉성 평지를 제외하고, 동·서·남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지맥이 지나가는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형 도시이다. 평지로 구성된 곡성읍과 옥과면에 주거지와 함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곡성군의 지역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곡성군은 서기 475년 문주왕 시절 군 명을 욱내군(欲乃郡)이라 칭하였다. 당시 읍은 현 죽곡면 당동리에 두었다. 통일신라 시대인 757년(경덕왕 16년)에 욱내군의 이름이 곡성군으로, 과지현은 옥과현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곡성군의 한자명은 지금의 곡성군(谷城郡)이 아닌 곡성군(曲城郡)이었다. 고려 초에는 승평군(昇平郡) 즉, 현 순천시에 속하였다가 서기 1018년 현종 9년에 나주목의 속군으로 이속되었다. 조선 초기 1413년(태종 13년)에 현으로 개칭하였으나 1597년 정유 재란 시 남원 도호부에 합속된 후, 1609년 광해군 원년에 다시 분리하여 곡성현으로 복설되었다. 그러다가 1899년(광무 3년)에 행정구역 명칭을 곡성군으로 개칭하였고, 1914년에 담양, 구례, 순천, 남원의 일부를 편입하여 11개 면 126리로 개편되었다. 해방 이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곡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을 1읍 10면 125개 법정리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²⁰⁾

20)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subPage.do?menuNo=101001001000>,에서 2023년 8월 1일 인출.



* 출처: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kr/subPage.do?menuNo=101001001000>에서 2023년 8월 1일 인출.

그림 IV-4 곡성군 행정구역 현황

곡성군의 인구는 2023년 7월 현재 15,512세대 27,03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457명(38.7%)에 달한다. 반면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171명(8%),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는 3,646명(13.4%)에 지나지 않는다(통계청, 2023). 인구비로 살펴보면 곡성군은 전형적인 초고령 도시이다. 읍면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곡성읍이 3,965세대 7,612명으로 가장 많은 세대·인구가 살고 있고 이어 옥과면(2,217세대 4,053명), 입면(1,380세대 2,361명), 석곡면(1,345세대, 2,225명)의 순이다. 반면, 고달면이 699세대, 1,140명으로 가장 적고, 이어 목사동면(845세대 1,318명), 오산면(881세대 1,419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때 곡성군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였다. 1966년 109,739명이었고, 1970년에 들어와 인구 9만여 명의 도시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 75,090명, 1985년 63,815명, 1990년 49,704명, 2005년 34,157명, 2020년 28,039명으로 2만여 명의 소도시로 급감하게 되었다. 현재 생활권은 곡성읍권, 옥과면권, 석곡면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청소년시설은 대체로 곡성읍권과 옥과면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석곡면권이 가장 부족한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지역 내 정책사업의 현황과 변화

곡성군은 완주군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즉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이 아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범사업,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다. 두 사업의 성격은 누가 사업 지원 주체인지에 따라 전자는 여성가족부, 후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란 점만 빼고는 실상 크게 다르진 않다. 따라서 여기서도 후자의 사업을 약칭 ‘성장지원 사업’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은 시 지역(대도시형)과 군 지역(도농복합지역), 구 지역(중소도시형)으로 나뉘어 각각 부천시, 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선정되었다. 각각의 사업담당 기관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이었고, 각 지자체 담당과 담당자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자원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인재, 2020). 1년 차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의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협의체 내 자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년 차 사업에는 1년 차에 구축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협의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협의체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체 내 하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인재, 2020: 243). 3년 차에는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황세영 외, 2021: 7).

곡성군은 성장지원 사업 외에도 2020년부터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이하 미래교육지구)’에도 선정되어 동 사업을 올해까지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출범 배경은 혁신교육지구, 나아가 혁신학교와 밀접하다. 다시 말하면 혁신교육지구의 시작은 혁신학교를 모델로 하고 혁신교육지구를 모델로 삼아 확대된 교육부 지원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이다.

여기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를 말한다. 2000년대 초 경기도 남한산초(광주시), 조현초(양평군), 덕양중(고양시) 등에서 시작된 자율적인 교육혁신 운동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확산한 상향식 교육정책이었다(최창의, 서용선, 김혁동, 홍섭근, 김용련, 2016). 2009년 경기도에서 출발한 혁신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온 효율성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학습 다양화, 학습복지, 학생 인권 등)으로 교육 방침이 바뀐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즉, 서울형 혁신학교, 경남형 행복학교, 인천형 행복배움학교, 전남형 무지개학교(곡성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형 행복더학기학교, 충북형 행복씨앗학교, 부산형 다행복학교, 제주시교육청 다혼디배움학교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고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교육정책이 혁신교육지구이다(김소현, 백병부, 이한섭, 김진영, 김병준, 2021).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모델이다. 2011년 경기도 6개 지구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는 ① 교육자치(교육청)와 ② 교육기관(학교), ③ 일반자치(시·군·구) 및 ④ 지역단체들(시민단체,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및 기관·단체, 진로교육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등)이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역·교육협력사업이다. 2020년 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167개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밖 학습 돌봄, 지역 특색교육 실현, 지역연계 교육과정 및 체험·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창출하였다. 반면에 한계도 지적되었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비롯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한 형태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지는 못하다는 평가(백병부, 이혜정, 서용선, 심재휘, 2019)와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주민이 다른 집단(공무원·교원, 사업참여기관·민간기관)에 비해 낮다는 평가,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로 사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평가가 그것이다(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19). 그밖에 담당조직이 상설화되지 못하는 사업의 지속성 문제, 마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문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충돌로 인한 제도적 모순점 등도 지적된다(최창의 외, 2016; 양병찬 외, 2019).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0년 교육부는 기존의 혁신교육지구의 심화 모델을 개발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을 구상, 운영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① 거버넌스 구축(공동의 협력센터

구축 및 중간조직으로 마을교육자치분과 설치), ② 지구 내 학교혁신(학교의 교원 인사, 교육과정 혁신 선도),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화 특색사업 개발이 그것이다. 특히 첫 번째 사업 내용인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공동 협력센터가 지자체-교육청, 학교-마을을 잇고 다양한 사업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와의 협조를 통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확대해 나가고, 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혁신교육협의회가 실제적인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손성호, 2020). 참고로 현재 곡성군은 미래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곡성군은 성장지원 사업과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즉 두 사업을 축으로 하여 각각의 협의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체와 미래교육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전자의 협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6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최인재 외, 2020: 260-266), 후자의 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성장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이다. 이 재단은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전신으로 해 그것의 확장 모델로 설립된 것이다. 성장지원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공동협력센터로서의 기능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교육재단을 눈여겨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교육재단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 27일 곡성군 기획실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동년 9월 28일 곡성군 미래혁신과 미래교육팀이 신설되어 군내 교육과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가 통합되었다. 동년 12월 11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 12월 27일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2019년 3월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가 개소되었고, 2020년 6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 군과 곡성교육지원청,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수련시설이 미래교육협력센터 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년 12월 27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미래교육재단이 지역 내 청소년교육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민·관·학 거버넌스 중심기관의 위치를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0년 5월 6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동년 12월 15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범하게 된다. 당시 재단 조직은 3개 팀 15명으로 시작되는데, 군에서 9명, 교육청에서 3명, 민간 채용으로 3명이 일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3개 팀 15명이 4개 팀(행정운영팀, 혁신교육팀, 지역교육팀, 청소년지원팀) 20명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특히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지원팀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혁신교육팀과 지역교육팀이 담당하게 된다. 2022년 3월 4개 팀 20명에서 5개 팀 24명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기존의 4개 팀에서 평생교육팀이 신설되고 이 팀에 청소년 진로사업 및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동년 7월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진로교육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였다. 즉, 군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진로교육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지역사회 교육 관련 모든 업무를 재단이 총괄하게 되었다.

2023년 7월 현재 이사장 산하 본부장, 3개 팀 21명 재직 중(행정운영팀 8명, 평생교육팀 7명, 청소년지원팀 6명)이다. 현재 장학사업, 교육생태계 구축, 교육활동 지원, 꿈놀자학교, 진로진학교육, 청소년 성장지원, 꿈키움 마루 등 7개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자기 주도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역량을 갖추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청소년의회, 곡성청소년꿈키움학교, 곡성군 청소년축제, 귀가 지원, 청소년 자기도전 프로젝트, 자기 주도 창업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사람이 모이는 곡성의 행복한 성장				
비전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핵심 가치	창의혁신 곡성형 인재양성	연대와 협력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함께 성장 소외없는 교육기회	지역활력 교육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9대 전략	공간과 참여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기반 조성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교육활동 지원 / 배움이 즐거운 곡성, 변화를 이끄는 시민교육 숲에서 뛰놀며 배우는 자연 속 창의교육 실현 / 예술로 화합하는 미래인재 양성 미래시대를 주도할 진로 진학교육 강화 / 청소년 자기주도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edu/menu.es?mid=a501010300000 에서 8월20일 인출 및 재구성			

그림 IV-5.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전략체계도

(3) 인터뷰 분석

곡성의 어제와 오늘 : 노인들의 도시에서 청소년의 도시로

곡성은 노인을 위한 노인들의 도시다. 지역 및 인구 현황에서도 언급했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38.7%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에게 맞춰진 문화가 보편적이고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는 불리하고 또 불편하다. 대중교통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운행이 종료된다. 곡성에서도 오지라고 하는 죽곡면의 경우, 읍으로 향하는 버스는 오후 4시 반이면 종료된다. 방과 후 개인 시간도 갖고 싶고 친구와도 어울리고 싶은 아이들에게 도시의 어둠은 장애물이다. 무엇보다 발을 묶어 이동을 제한한다. 저녁이면 서둘러 귀가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맞춤’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답답함’ 그 자체다.

곡성군은 원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너무 외져서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역사가 짧고 규모도 크지 않다. 이주민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국내의 경우 귀농 귀촌과 농산어촌 유학을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외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인 그나마 국외 이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와 국외 이주민의 배경과 이유가 확실히 다르다. 다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는 이주민들이 최근 들어 늘었다.

“이주민의 특성상 다르죠. 특히 결혼 이주여성 분들은 경제적 생활 문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안정도 찾고 자기 삶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교육으로 오는 것은 어떤 정책에 의해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서울과 농산어촌 유학이랄지, 지역의 조리와 학교 입학률 위해 오시는 분들도 약간 있고.”(참여자 1)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겉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무래도 곡성의 경우 성장세대 친화적 도시 성격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2019년 성장지원 사업과 2020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이후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란 점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지역사회의 미래 등 주민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출발했다는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저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만 곡성에서 자라고 대학, 직장 생활하며 도시로 나갔다가 도시에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귀촌한 케이스예요. 저희 아이들 혁신학교에 저와 비슷한 세대의 다섯 가정이 귀농했는데 그들 역시 아이들 교육문제로 변산공동체라든가 서울에서 교육운동을 하였던 분들이 감사하게도 같은 시기에 내려온 거죠. 그때 그분들 중심으로 학부모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던 베이스가 됐죠. 지금도 곡성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원주민들보다는 …(중략)… 도시출신이, 그분들이 도시에서의 너무 힘든 상황들을 경험한 후 곡성이 가진 자원적 가치에 공감하시고, 아이들의 생태적 삶에 대한 마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더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 하셨는데,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은 저는 경험을 많이 못해봤어요. …(중략)…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저는 되려 고맙죠.”(참여자 2)

그러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학부모의 견해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이주민의 주도와 그들이 주도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원주민 학부모들이 마냥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지향하는 바도 높고 지원요구도 강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이슈 자체는 동의하지만 추진하는 사업 단위와 각각의 사업 과정에서는 약간의 갈등도 있다. 아이들의 학력 차이도 있다 보니 교육청과 군청도 꽤 신경을 쓰는 눈치다. 특히 성장지원 사업이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게 될 때 인프라 구축이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혜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불특정 다수나 외부 아이들까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일부(원주민) 부모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들을 위한 설득의 과정이 아직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주 오신 분들의 교육에 바라는 지점이 원주민들보다 걸음이 앞서가요, 확실히.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정책사업 하나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향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는 조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곡성교육희망연대나 곡성교육회의도 구성원들 안에 다 섞여 있어요. 원주민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온 (이주민)분들이요. 그 안에서도 늘 조정이 되죠. 의견을 얼마든 이야기하되 최종 선택할 때는 걸음을 조정해서 합니다.”(참여자 3)

“그렇지 않은 면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농산어촌 유학을 지향해 자녀들을 데리고 이주한 분들의 입장과 원주민 학부모의 입장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원주민들에 대한 여러 교육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중략)… (이주민) 학부모들의 교육참여나 교육지향 수준이 높고 활동적이라서, 그렇지 않은 원주민 학부모들과의 갈등과 아이들도 학습력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에 대한 갈등이나 소외감. 예를 들어 작은 학교서 주로 나타나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왜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통해 외부 학생들을 끌어들이어서 저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하는 오해들이 상당히 많고,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현실.”(참여자 1)

곡성군은 언제부터 성장세대 중심으로 도시 성격을 바꾸게 되었을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들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자못 궁금해졌다. 어쩌면 지역주민들은 혁신학교(무지개학교)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곡성지역 교육자원의 연계가 함의하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들을 새롭게 주목하고 재발견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이주민들의 교육 이주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운동이 움트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변화의 주요 계기가 된 것일까? 사실 혁신학교나 성장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들의 추진과 이주민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성장지원 사업에서 그 계기는 의외의 곳에서 출발하였다. 그건 바로 정○○의 당시 중학생 아들의 하소연이었다.

“사업 공모가 나왔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전에도 (지역에서) 네트워크는 산발적으로 존재하였는데 …(중략)… 저희가 그 사업을 한 시점에 노선 없는 버스(지원 사업)를 시작했어요. 귀가지원 버스사업. 시내버스가 빠른 건 4시 반에 끝나는데, 여섯 시 반이면 죽곡 같은 데에는 귀가할 방법이 없어요. 차가 도시와 다르게 일찍 끝나잖아요. …(중략)…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한 아이와 같이 모둠이 된 걸 제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조가 됐다고. 학교에선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팀별로 아이들이 작업하는 걸 훈련시키고, 그걸 교육과정에 집어넣어 하는데, 죽곡에 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자기 모둠에 오는 것만으로도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찍 가야 하니 참여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죽곡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이것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거예요. 귀가 지원 사업을 담당 주무관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해서 여덟 시 반에 집에 데려다 주는 버스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게 좀 더 확장돼서 고등학생 귀가 지원 사업으로 확장된 거죠.”(참여자 3)

죽곡면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배제 경험을 받는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다. 그 아이가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집에 갈 수단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찍 끊어지는 버스 탓이다. 그러나 배제의 경험은 오히려 아이의 몫이다. 죽곡면에 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했지만 곡성은 노인을 위한 도시다. 아이들에게는 불리하고 불편한 도시다. 그걸 부모가, 어른들이 알게 된 것이다. 알았지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관을 찾아 담당 공무원과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혼자로서는 그리고 하나의 기관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성장지원 사업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창에는 지금도 청소년 귀가 지원 서비스가 올라와 있다. “친구들과 놀다 보니 벌써 저녁 8시...버스는 끊겼는데, 집엔 어떻게 가야 하지?”라는 문장과 함께 “클릭하면 노선 없는 버스가 해결한다.”는 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곧바로 곡성교육포털(<https://www.gokseong.go.kr/edu/>)로 연결된다. 곡성교육포털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방위적인 포털이다. 이곳에는 미래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기관·마을배움터 교육, 학교대상 교육 등 수 십 여개의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곡성군 내 청소년시설 및 재단의 시설과 공간, 문화시설 공간 등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작은 이유’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 신청의 배경이 된 것이다. 흥미로웠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갖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쉽게 알 수 없는 사연이자 배경이다.

민(民)이 발의하고 관(官)이 지원하는 곡성

하지만 성장지원 사업 공모 신청 이전에 교육자원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고민과 토론의 역사가 있다는 의견도 곧 개진되었다. 즉, 곡성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왔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런 사업들(성장지원 사업,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나뉠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자 자양분이었다고 보는 관점이었다. 이런 움직임은 2011년 3월 곡성교육희망연대를 출범시켰고, 2016년 곡성교육 200인 원탁토론회를 성사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미래교육재단에서 2016년에 있었던 원탁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다소의제의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곡성군 미래교육환경에 대한 시민의 고민 지점들은 명확해 보였다(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2016).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곡성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중략)… 이런 힘들이나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했을까에 좀 더 집중하려고요. 그 원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시민사회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에서 2011년부터 교육희망연대나 이런 단체들이 끊임없이 교육계의 미래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활동들의 힘, 여기서 저는 출발했다고 보고요. 2016년도에 시민단체 주도로 곡성에서 곡성교육 200인 원탁토론을 했는데 정말로 200인이 모여어요. 그때 곡성 인구가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그중 200명이 모인 건 엄청난 거죠. 원탁토론은 5개월간 준비했어요. 시민사회와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에 관여하는 분들, 군청,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서. 예산도 군청이 50% 교육지원청이 50% 준비해서 200인 원탁토론을 했어요. 거기 참여한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참여자 4)

확실히 곡성군은 민(民)이 이슈를 발의하면 군과 교육청 등의 관(官)이 이를 받아 의제화하고 정책사업 추진 주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주와 비교하면 - 사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각자의 사회 환경적 특성과 함께 맥락 면에서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 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곡성교육희망연대와 같은 시민자조모임과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곡성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이런 민 주도의 자생력과 자발성은 성장지원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를 꾸리고 이를 유지·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장지원 사업의 연차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년 차 사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축이 목적이라면, 2년 차는 1년 차에 구축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양적·질적 성장의 도모와 함께 협의체의 정체성 확립이라 할 수 있다. 3년 차는 이런 협의체 및 교육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1년 차와 2년 차의 사업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 그리고 협의체의 성장과 발전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곡성의 경우, 성장지원 사업 전에도 산발적인 네트워크들이 지역 내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가 일정한 체계를 갖추며 구축되고,

이어 상호 연계되고 협력하는 수준에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점차 안정화되었다. 처음에는 청소년시설과 기관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본격적으로 지역 내 관은 물론이고 청소년 유관 민간 시설과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처음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고 네트워크마다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었어요. 전문성이나 하나의 주제를 갖고 운영이 되다 보니 (이들을) 광범위하게 엮을 수 있는 (포괄적인) 네트워크가 없었던 겁니다. 교육청에 있던 무지개학교 사업이 있어서 기반이 됐는데 그 준비가 사실 지역 안에서 적은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 청소년기관은 한 개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 2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이 네트워크를 계속 해 왔어요..” (참여자 3)

“첫 회의에는 군청, 지역교육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및 센터장님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BBS(Big Brothers and Sisters), 법사랑위원회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저희가 노크했죠. 수락해 주신 기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원탁토론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운영위원을 조직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기법을 통해 지역의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3년을 지속적으로 기관 간 협력했죠.”(참여자 2)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성장지원협의체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다양한 협의체나 네트워크들이 지역에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혹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네트워크였다면, 이 성장지원협의체는 민이 중심이 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배경으로 한, 민이 주도한 사업 네트워크였다. 응당 관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식이지만 그간 군정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청소년 성장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사업이었다. 관은 그간의 발상과 관점을 달리해야 했고, 곡성교육희망연대와 같은 민 주도의 시민자조 조직은 교육이란 영역의 범주 확장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처음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르게 된다. 곡성군 청소년 성장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다.

성장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을 따로 두지 않았다.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락 실무를 맡는 간사만 두고, 간사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되 각자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장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다. 특히 청소년 성장박람회는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 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함께 청소년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복돋고 지지하며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저희가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했어요.”(참여자 2)

“박람회는 결과물이고 성장박람회를 목표로 삼은 것은 청소년 유관 모든 기관이나 학부모나 마을학교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경험, 서로를 이해할 기회로서 박람회를 구상한 거고, 저희 성장지원협의체의 특징은 다른 협의체와 달리 사업을 진행하는 간사만 있고 협의체 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협의체 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협의체 장을 만드는 순간 그를 중심으로 상황이 바뀌어 가는 순간들이 있을 거로 생각했기에 협의체 장 없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모든 참여자가 말할 수 있도록, 말하면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중략)… 그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허○○ 교육장님이 두 번째 회의 때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오더라도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교육장님께서 끝까지 들으셨어요. …(중략)…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곡성에 가장 필요하다, 주체라고 말만 하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했어요. 보통 박람회를 하면 축사나 인사말을 군수님이나 교육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육장님이나 군수님의 축사를 뺐어요. 교육청에서는 당시 장학사님께서 계속 요구하셨죠. 그때 축사 대신에 성장박람회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했어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아이들이 축사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하고 주체성을 갖기 위해 처음 시작했어요.”(참여자 3)

성장지원 사업의 성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3년 차 사업의 목적은 “성장지원 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무엇이나?”이다. 즉, 성장지원협의체란 네트워크와 지역 내 교육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과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3년 차의 목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있어서 단연 두드러져 보이는 중요한 성과이자 산출물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지금은 물론이고 곡성의 미래에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動因)이다. 민이 제안한 여러 교육적 혁신을 담아내기 위해 군이 앞장을 서서 미래교육협력센터를 만들었고, 여기에 지역교육지원청과 청소년기관, 지역 내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이어 미래교육협력센터는 미래재단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성장지원 사업을 포함해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핵심 조직이자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례에 따라 군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안정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연 67~68억 원의 군 출자금을 통해 다양한 학교(방과 후) 교육 및 청소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고 0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인구가 4천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에서 67여억 원의 출자금을 내서 재단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학교교육, 학교 밖 교육, 청소년교육 및 지원사업, 진로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교육관련 사무는 물론이고 마을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사업과 기능을 총망라하는 지원조직으로 미래교육재단을 세웠다.

사실 지자체에는 기존의 교육경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러 교육경비라 한다. 교육경비는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학교급식,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학교교육 위주로 사용한다. 반면 곡성은 교육경비가 아니라 출자금을 내서 미래교육재단을 만들고 교육경비 이외의 재원으로 학교교육, 청소년교육 및 지원, 학교 밖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 마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의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성장세대를 위해 이만한 출자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출자금으로 대신하면서 바뀐 것들이 많다. 우선 교육경비는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위주로 지출이 되는데, 재단으로 출자금이 지급되면서 지원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학교 기관은 물론이고 지역 내 마을배움터, 청소년시설 및 기관, 유관 문화시설 및 기관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대신 출자금이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하고 책무성도 그만큼 커졌다.

“지금 재단이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거라, 재원이 부족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재원이 자체적으로 (안정되게) 확보돼 있어요.”(참여자 3)

“(재단 출범 전까지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각자도생, 모든 기관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서로가 몰랐던 거죠.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학교협의회를, 그러면서 서로 사정들을 듣다 보니 이해가 생겼어요.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하나 둘 찾기 시작했고 지역 내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개방된 공간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관계가 이어지며 또 다른

현장에서도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중략)… 미래교육재단에 너무 감사한 게 어떤 플랫폼으로서 모든 아동청소년정책과 실행을 이것들을 함께 실행 역할을 해주셔서.”(참여자 2)

“(성장지원 사업이) 재단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군수님께서 큰 틀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갖고 계셨고 지역사회에서 공유해주셔서. …(중략)… 같은 철학을 (지역사회가) 공유하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기도 했고 사회 네트워크나 가치관이 들뜨는 시기였잖아요. 그걸 청소년 쪽에서도 이렇게 표출이 됐고, 이런 새로운 철학들이 구축되면서 저희 재단이 같이 시너지를 내는 굉장히 압축된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서로 끌어주고 영향을 주고, 철학이 공유되며 나중에 만나고 시작할 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군청 공무원 소속이면서 현재 미래재단 행정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조〇〇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직위에 거의 전담 공무원처럼 근무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9년째다. 미래협력센터와 미래재단의 준비과정과 출범을 같이 했다. 사업을 같이 했던 민간인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군청 내 다른 데로 발령나지 못하게 민원을 할 정도란다. 개인적으로 승진이나 다른 업무에 대한 욕구도 있을텐데 한결같이 9년째 미래재단 관련 일을 보고 있다. 다행인 것은 미래재단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최근 승진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곡성군이 밝은 미래성장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있다.

곡성군의 변화, 농인 과제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곡성은 확실히 변화를 거듭했다. 기존 노인 중심의 사회에서 아이들도 품을 수 있는 지역사회로 변신하는 데에는 확실히 성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있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엄청난 변화다. 인구 5만 명이 되지 않은 군 단위 지역에서, 농산어촌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는 많은 지역에서, 선거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성장세대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참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는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참여자들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서로 엮이고 연결되며 또 협력하는 삶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함께 지역문제를, 아이들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는 자신과 경험을 얻었다. 그런 자신과 경험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성’으로 돌아왔다. 기존의

관성과는 전혀 다른 관성으로 지역의 삶이 바뀐 것이다. 함께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로써 서로 간에 신뢰와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해서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 중심의 시민사회 활동’이 기반이 되어 이와 같은 네트워킹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고 …(중략)… 그렇게밖에 안 했었죠. 그래서 당시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센터가 해야 할 이유를 적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기술이 돼 있었는데 지금의 계획서와는 좀 달라요. (지금은) 협력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 기관 사업계획서에는요. 예를 들어 아웃리치를 해야 한다, 홍보해야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할 수 있지?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는 지점이 사업을 계획할 때 생겼다는 거죠. …(중략)… 전과 다른 관성이 생긴 거죠. …(중략)… 단순히 사업계획서에 협력 기관이라고 한 줄 들어가지만, 그 한 줄이 갖는 의미가 (기존의) 관성을 수정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전과 후의 성과라고 한다면 저희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학폭 예방교육 아웃리치 할 때 최근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더라고요. 시민단체들도, 법사랑 위원회, 기자협회, BBS, Wee센터, 이렇게 다 홍보하는 데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최소한 지역 분위기가 예전보다 함께 하는 것에 좀 더 진일보한 것 같아요.”(참여자 3)

“관계가 회복되니 일로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게 된 거죠.”(참여자 2)

“시민사회 활동이 활동가 중심으로 있었기에 이 사업출발도 가능하고 정○○ 선생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활동 중이지만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활동가예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게 가능하고 공모 결과 선정됐을 때 네트워크 사업출발도 가능했다고 봐요. 활동가 중심의 시민사회 활동이 기반이 돼서 네트워킹 사업이 가능했고 이 네트워킹 사업의 효과는 이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5)

문제는 이제 주민이다. 이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길러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앞으로 곡성의 이런 변화를 지속할 수 있게 이끄는 핵심이다. 특히 학부모가 중요하다. 흔히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아이가 졸업하는 순간 그 관심이 약화하거나 사라지기가 쉽다. 또 학부모는 교육지원과 서비스,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 등에 수혜자로 머물기 쉽다.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변화를 이끄는 파트너로서의 몫을 하는 데에는 다소 인색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부모로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기 아이만이 아닌 마을 아이들 모두를 키우는 온부 모²¹⁾의 마음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살펴야 할 때이다.

“사실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킹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네트워킹 사업이 지속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보면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생각합니다. 곡성 사람들의 자체 역량이 올라오지 않으면 기관 간 연대로 끝난다는 거죠. 그 정도 효과에서 끝날 거죠. 이제 공은 활동가, 기관 대 기관의 연대에서 주민들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중략)… 제가 좀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주민참여는 미래교육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정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무언가에 참여해서 성장의 기회가 온다 이런 식의 혜택에 집중하는 수준이에요. …(중략)… 아이는 각자 키운다, 이 개념에서 전혀 안 벗어난 상태죠. 아이를 각자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크게 하는 방법이, 함께 키운다로 사유가 이행되지 않아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요. 곡성아이들을 곡성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요.”(참여자 5)

그래서 요즘은 이게 고민이다. 주민의 참여를 진작하고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주민참여나 의식의 전환은 결국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넌 왜 참여를 안 하나며 주민들 개개인을 타는 방식은 도움이 안 돼요. …(중략)… 참여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설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군청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은 군청이 하고, 평가할 때 다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참여자 5)

군과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 일하는 미래교육재단의 일하는 분위기도 궁금했다. 바로 어제 완주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곳은 끊임없는 이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시간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과 관, 민과 관 간의 이해와 소통, 협력의 과제는 여전히 필요해 보였다.

21) 여기서 온부모는 연구자의 조어다. ‘전부 혹은 모두의’란 의미를 갖는 온과 부모를 합친 조어다. 즉, 의미상으로 보면 어느 특정 자녀의 부모가 아닌 모든 아이의 부모란 뜻으로 온부모라 칭했다.

“군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양 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이 같이 일하다 보니 협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무실에 모여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교육청 공무원들은 퇴근 무렵 제게 와서 하소연해요. “군청 공무원들 왜 그래요?” 군청 공무원들은 퇴근 후 저녁에 저를 만나면 “교육청 공무원들 왜 그래요?” 하고 하소연해요....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다른 걸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생각한 게, 이게 재단 사무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성숙하는 것으로 가려면 주민과 관 간의, 또 관 안에서 부서와 부서 간의 끊임없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할 텐데, 어떻게 넘어서야 할 건가...**(중략)**... 교육청이 평소에 애기가 잘 안 되면 결국 군수님 통해 해결해요. 그런 식의 해결은 연대의 질을 못 높여요. 그냥 그 사업 관련된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죠. 연대의 질은 여전히 떨어집니다.”(참여자 5)

하지만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씨앗이 뿌려졌다. 아이들에게 유용한 교육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프로그램과 사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경험을 통해 당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들을 위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참여가 다시 쌓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단위 안에서 네트워킹이 가능한 자원들이 청소년성장지원을 주제로 네트워킹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축적돼야 주민자치가 되죠.”(참여자 5)

마지막으로,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곡성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사람의 중요성이다. 일을 열고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한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특히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교육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고, 그런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의 유무와 핵심 인력의 헌신, 그리고 전문성·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역량이 있는 실무인력을 만나 사업이 지난 3년간 나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가 되려면 이런 인력을 지역에서 얼마나 잘 키우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곡성 안에서 지속해서 뿌리내리려면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네트워커로서 곡성의 공통의제가 상황마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기관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어떤 기관에서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참여자 2)

(4) 시사점

곡성군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곡성군은 지역과 지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자양분으로 삼고 성장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오늘날 곡성교육포털, 미래교육재단과 같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토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장지원 사업 이전, 각성한 일부 시민의 의식과 참여 등이 중요한 촉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1년 3월 결성한 곡성교육희망연대와 같은 교육 관련 시민자조조직의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설사 성장지원 사업이 출범을 하더라도 오늘날만큼의 성장과 변화를 거두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가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주도성이다. 물론 곡성의 경우 아직은 지역 구성원의 풀뿌리 주민자치 수준이 ‘완숙의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시민의 각성과 참여는 지금의 변화를 이끌고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 그 요구에 응답하는 군과 주민들이 있으므로 인해, 한낱 메아리로 그칠 수 있는 아이의 요청이 귀가 지원 버스 서비스로 환류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지원 사업은 이런 아이들의 요청을 지역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한 계기였으며 성장지원협의체는 이런 아이들의 요청을 지역 기관과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협의체였다.

둘째, 민의 자발성을 군이 지지하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재단까지 출범을 시킴으로써 지역의 분위기는 확실히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민과 관이 지역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이끄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지역의 특성과 밀접하다. 즉, 첫 번째로 언급한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간섭이나 터무니없는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생각한 군의 관점과 함께, 성장세대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군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민의 관점이 지역 특성에 함께 깃들어 있다. 나아가 군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협력파트너로 미래교육재단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엇박자를 내기 쉬운 두 주요한 성장세대 지시기관들의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관 주도적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의 특성과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은 매우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군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인적 자원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민간 인적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청소년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은 다른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남달리 크다.

셋째,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그래서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는 핵심 인력은 성장지원 사업의 출범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동력이다. 특히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아이들 삶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어른들,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민관을 가리지 않고 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 사업의 방향과 열개를 세우고 핵심 실무인력들을 지지하고 격려한 어른들,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이 아닌 예도 불구하고 일부 전담 공무원보다 열성인 공무원들은 성장지원 사업이 곡성에 착근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한 힘의 원천이었다. 이제 이들을 대신하여 계속 이런 작업을 이끌 다음 세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필요성을 참여자들도 잘 알고 있다. 어찌면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등장하느냐가 미래의 또 다른 과제가 될 터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상적이었던 두 참여자의 이야기를 아래에서 남긴다.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 모두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들은 성장지원 사업을 곡성에서 키워낸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소 애 가지고 있던 가치와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동시에 성장지원 사업이 4년 전 곡성에 어떻게 착근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 일종의 리트머스였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에 따라 곡성군의 미래 성장지원 사업-이를 일러 성장지원 사업 2.0이라 한다면-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다.

“같은 수준이 높다는 것은 협력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과 연결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협력하지 않았으면 사실 갈등도 일어나지 않으니깐요. 이 사업을 하며 어려웠던 건 저희 생각만으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요구가 있고 …(중략)…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저희 곡성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이 보편적인 우리가 되어서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하고 곡성의 앞으로 기대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자리하신 분들도 개인으로 여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우리의 측면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중략)…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을에서는 고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000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뀐 거죠.”(참여자 3)

“미래교육재단에서 당시 군청과 교육청이 합의했던 미래 사회상 중 하나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야만 인구가 감소해도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지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문제는 곡성의 모든 주민과 어떻게 이것을 공유할 거냐예요. …(중략)… 동의하여야 공유되는 거라, 그 과제가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교육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 집에서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동·청소년사회교육이에요.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지자체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지만 결국 기관이 다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꾸리면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소비하는 형식이죠. 주민들이 전혀 자기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못 하죠. 그래서 성인들의 사회교육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가볼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 재단이 가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걸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고민하게 되면 기존 해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 집과 중요한 파트너로 만나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참여자 5)

3) 경기도 부천시

(1) 지역 현황

부천시는 10개의 동(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으로 구성된 일반자치시이다. 당초에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구를 설치했다가 2016년 7월 4일 구제를 폐지함에 따라 10개 동으로 구성된 도시로 바뀌었다.²²⁾ 최근 부천시에 따르면 기존의 구제를 부활하여 2024년 1월부터 3개구 37개동 체제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부활시키되, 도시의 기능 중 안전과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모하겠다는 것이다(파이낸셜 뉴스, 2023.05.22.).²³⁾ 부천시는 지리적으로는 북쪽과 동쪽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북서쪽으로는 김포시, 남쪽으로는 시흥시, 남동쪽으로는 광명시와 접하고 있다.

지금의 부천시 지역은 원래는 부평도호부의 일부였으나 근대화 이후로 소사읍의 중심이었던 경인선 부천역 주변 지역이 자연스럽게 도시화되면서 시로 승격하였다. 근대까지 부평과 부천은 단일 지역으로서 공통의 역사와 문화권을 공유해 왔다. 부천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1914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부천군이 설치되면서이며 이는 부평에서 파생된 명칭이었다. 원래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는 역사적으로 별개의 행정구역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부의 영역을 제물포 개항장 일대(현재의 중구, 동구)로 축소시키고, 인천부의 잔여 지역인 주안, 문학, 다소, 남동, 소래, 영종도, 용유도, 덕적도와 부평군 전역을 통합하면서,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川)을 따서 부천군(富川郡)이라 명명한 것이다.

22) 부천시는 특별시, 광역시로 승격된 도시를 제외한 일반시 중 1988년 1월 전국 최초로 구(당시 중구와 남구)가 설치된 도시였다.

23) 파이낸셜뉴스 (2023. 05.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15629>에서 8월3일 인출.



*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3. 05.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15629>에서 8월3일 인출.

그림 IV-6. 부천시 행정구역 현황(2024년 1월 계획)

부천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던 시절도 있었다. 1990년 당시 수원시와 성남시의 인구가 각각 55만~60만 명 정도였는데 비해 부천시는 667,896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였다. 이후 인구수로 는 수원시, 성남시에 밀려 3위로 떨어지고, 2000년대 들어와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에도 밀리기 시작하였다. 2010년 875,204명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시의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2022년 6월 인구 80만 명대가 붕괴되어 70만여 명의 도시가 되었다. 이는 부천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면적이 좁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으며 기존 주거지가 서서히 노후화되고 있고, 인천, 김포, 시흥, 고양 등 인접한 수도권 서부지역에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나무위키. 부천시, 2023.07.28.). 하지만 인구밀도는 전국 도시 중 서울특별시에 이어 2위인 지역이다.

부천시 인구는 2023년 7월 현재 786,469명이다. 동별로는 신중동이 128,351명으로 16.3%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범안동(99,930명, 12.7%), 부천동(85,913명, 10.9%), 상동(82,647명, 10.5%)의 순이다. 가장 인구가 작은 곳은 중동으로 40,233명(5.1%)이 거주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98,885명(12.5%)이고,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는 156,4130명(19.8%)이다. 최근 10년간 부천시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인구가 당시 184,398명에서 2021년에는 125,020명으로 약 32.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는 행정구역별로 신중동(15.9%)과 상동(13.2%), 범안동(12.5%), 부천동(10.7%)에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이고 반면 중동(5.4%), 소사본동(6.2%)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청소년 인구의 비율(동별 거주 전체 주민 수 대비 청소년 인구수)로 보면,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행정구역별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동(19.3%)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범안동(16.5%), 중동(16.4%)의 순이다. 반면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심곡동(12.7%), 소사본동(13.8%), 대산동(14.2%)의 순이다(남화성, 김명숙, 유금봉, 박성희, 2022).

(2) 지역 내 정책사업의 현황과 변화

부천 역시 곡성군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 아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범사업,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다. 곡성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글에서는 ‘성장지원 사업’으로 통칭하겠지만 곡성군과는 다른 차별지점들이 있다.

우선 부천시는 대도시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체 인구는 물론이고 청소년 인구 역시 곡성군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많고 도시 인프라도 확실히 갖추어진 곳이다. 청소년 인구도 최근 들어 비록 감소 추세이긴 하나 군 단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체 도시 인구 대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도시 인프라 중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한 상황이다. 지하철이 발달한 데다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잘 갖추어져 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시설이나 기관도 월등히 많다.²⁴⁾

24) 출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bwyf.or.kr/bwyf/index.do>에서 8월20일 인출.

현재 부천시청소년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미래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센터 등 재단 산하에 7개의 청소년시설과 기관들이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주의 청소년시설이 있는 군 단위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다. 특히 부천은 여성청소년재단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단 비전과 미션에서 여성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물론 개별 청소년시설에서는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묶고 결합하는 전략체계는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재단은 여성-청소년의 성장을 함께하는 플랫폼을 기관의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부천 실현을 기관의 사명(미션)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부천은 성장지원 사업추진 전에도 민 중심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푸른모임이란 청소년관련 시민주도 학습공동체 모임이 20여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외 다양한 네트워크가 도시 곳곳에서 형성된 역사가 있다.

성장지원 사업 외에 부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즉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 교육의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의 실현,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혁신 교육생태계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7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혁신교육포럼 역할 강화, ② 혁신교육협력센터 구축운영, ③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④ 교육인프라 구축 및 확대, ⑤ 학생 중심 배움의 공간 확장, ⑥ 부천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⑦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부천시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부천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아트밸리 등 22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시작한 성장지원 사업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담당하였다. 지금도 재단 내 정책기획실 정책개발부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하는 인력을 조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재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그 성과의 하나가 바로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설치이다.²⁵⁾ 부천시립시설인 부천미래교육센터는 ‘실제 삶과 연결된 배움’을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 주도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 배움’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계성 (relationship), 주도성(ownership), 시민성(citizenship) 등의 3가지 목표를 실천하고자

25) 출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wyf.or.kr/mirae/index.do>에서 8월20일 인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천미래교육센터는 마을과 학교 간 협력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연결하는 플랫폼’, ‘축진하는 플랫폼’, ‘진화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청소년과 학부모, 마을 교사, 학교교사 등과의 연계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로 미래교육센터는 2020년 4월 6일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5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내 준비단을 구성한 후 2022년 3월 15일 센터를 개소하였다. 이후 미래교육센터는 성장지원 사업의 중추 사업추진 주체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핵심 주체이자 향후 미래교육지구사업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의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터뷰 분석

사업 추진 전의 부천시의 모습 : 푸른모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여성가족부는 성장지원 사업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는 달리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과의 연계 혹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이 제6차 기본계획보다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주체로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구축·운영 및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의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계에서는 갑자기 막 고조되는(boom up)듯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 좀 지난 얘기다. 일찍이 영국의 EAZ(Education Action Zone), 프랑스의 ZEP(La Politique la Zone d'Education Prioritaire)²⁶⁾을 모델로 2003년부터 실시된 교육복지

26) 프랑스 우선교육정책(La Politique de la Zone d'Education Prioritaire)은 1981년 당시 미테랑 정부가 교육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하였다. 수차례의 재할당화를 거쳐 ZEP은 2013-2014학년도에 우선교육네트워크정책(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9-2020학년도 현재 364개 REP+와 730개 REP 등 총 1,094개 지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프랑스 전체 유·초등학생 18%, 중학생의 20%가 참여하고 있다. REP은 교육자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욱 많이(donner davantage a ceux qui en ont le plus besoin)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교육지원의 차별화 정책으로 프랑스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이다. 이 교육지원정책의 성패는 바로 교육네트워킹에 달려있다. 교육네트워킹이란 교육기능과 교육기회를 상호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시켜 유기적인 교육협력 안전망(네트워크)을 구축해 학교와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민과 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교육지원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기제는 학교 내-학교 간-학교 밖 교육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이며, 사업의 핵심목적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을 교육협력 기관 간 네트워킹으로 시스템화하여 성장세대들에게 더욱 많은 성장의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김민, 이영란, 2020).

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학교의 닫힌 문을 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유관시설·기관(청소년시설, 상담 및 사회복지시설, 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취약한 학생들을 지역과 마을이 함께 돌보고 지원하는 사업의 효시로 꼽힌다(이혜영, 2002; 이혜영, 양병찬, 김민, 김정원, 2006). 이어 농어촌 전원학교,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학교만의 교육, 즉 ‘학교일원론적 교육관점’에서 ‘지역사회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교육관점’으로 바뀐 지 제법 오래됐다. 그런데 청소년계에도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시설과 학교, 지역 내 유관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기억에는 부천시가 그러했다. 부천시는 오래 전 ‘푸른모임’이란 자발적인 공부모임이 있었다.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실무자들과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학교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애초 어떤 동기와 취지로 이 모임이 결성되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참여하여 이 모임을 이끌었는지는 명문화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하지만 당시 실무자였던 사람 중 상당수가 부천시의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장을 거쳤고, 또 후배 그룹 중 일부는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센터장을 맡은 후배 그룹의 한 사람에게 푸른모임의 시작과 배경을 물어보니 그 역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기록문화가 안착되기 전의 시절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자못 안타까웠다. 푸른 모임은 당시 제법 큰 공부모임이었다. 스무 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고 활발하게 운영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곤 했다. 이 모임에 처음 초대받으면서 연구자는 “부천은 이런 자발적인 실무자들의 모임이 무척 활발한 곳”으로 느꼈다. 지금도 뚜렷하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느꼈던 부천이란 도시의 느낌이 일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는 푸른모임이 없다. 현재는 - 잠정적으로 - 해체되었다. 그간 모임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푸른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구성원 간의 고민은 많았고, 덩달아 부침도 있었다. 고민은 주로 정체성이었다. 즉, 푸른모임이 청소년들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 실무인력(교사, 청소년담당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복지 실무자)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인지, 아니면 청소년시설 간의 네트워크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편으로는 기능이었다. 그저 만나서 좋은 사람들끼리의 친목네트워크 혹은 관행적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머리를 맞대는 네트워크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부천시에는 청소년시설을 포괄하는 재단이 생겼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한 것이다.

“푸른모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설이 많아지면서, (푸른모임이) 청소년시설의 네트워크 활동가 네트워크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활동가 네트워크가 시설의 네트워크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푸른모임 1.0, 2.0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재단이 생겨서 깨진 것도 있지만 그 장치 안에서도 푸른모임에 대한 성격과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천을 제가 2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잠정적 해체를 하게 되는 날이었거든요.”(참여자 1)

“푸른모임이 해체된 이유가, 이슈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도달하고 나면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성원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거길 나가서 인사하고 정보교류를 하지, 문제해결의 통로가 되지는 않아요. 관행적으로 물려받는 네트워크가 많아서, 생산성도 없어요. 원래 문제해결을 원했던 실무자들이 네트워크를 빠져나간 거예요.”(참여자 2)

푸른모임과 같은 자조모임을 가진 부천시의 분위기가 때로는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부천시는 2015년 11월 5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 성장지원 사업의 추진기관이 바로 이 재단이다. 이듬해 1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고 이어 3월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 해에 산울림청소년센터 등 부천시 청소년시설이 재단산하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

2017년에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소사청소년수련관 등을 수탁 운영하게 되었고, 2019년 1월에는 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재단은 청소년시설은 물론이고 여성관련 센터와 기관들도 수탁·운영을 하거나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미래교육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수탁), 고리울청소년센터(수탁), 부천시일·심지원센터(수탁) 등 10개 기관에 이른다.

2016년에 출범한 재단을 부천 지역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푸른모임과 같은 자발적인 네트워크, 협력적인 분위기가 재단 출범을 통해 위협받거나 깨진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다.

“2016년 1월에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재단 출범하며 지역에서 가장 크게 맞이한 문제가 재단 출범으로 인해 지역의 협업 구조를 깎다는 불편함이었어요.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청소년 이슈가 생겼을 때 각 시설 중심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킹 협업이 너무나 잘 돼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해로 인해 우리가 원치 않는 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 재단이 정보, 예산, 인력 모든 걸 독식하게 되고, 기존에 잘 유지되던 네트워크를 깎 주범이 재단이다. …(중략)… 하는 비난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재단이 뭘 할 거냐에 대한 기대나 지지보다 “너희가 우리 빼고 뭉쳐서 뭐 하는지 보자” 하는 불편한 시선이 컸죠.”(참여자 2)

이런 분위기는 기대보다 상당히 오래갔다. 성장지원 사업에 신청하게 된 재단의 속내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성장지원 사업이 가진 진정한 의미의 사업 취지 외에도, 부천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재단은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대의명분에 기대어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화해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어제까지는 형제처럼 살았는데 소원해지는 관계가 불편해졌고, 그래서 재단에서 만들어 낸 정책 방향을 지역에 어떻게 확산시키고 참여시킬까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쉬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를 지역에서 원했고 재단 내부 구성원도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 돌파구를 열지 못했는데. 이 공고(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마감 3일 전에 왔어요. 개별 재단이 낸다기보다 지자체에서 내도록 아마 지자체로 공문이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반가웠던 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빌미로.”(참여자 2)

한편으로는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가 가졌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희망도 있었다. 또 기존의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관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분야의 자생성을 좀 더 많이 담아내고자 하는 희망이기도 했다. 즉, 청소년시설들이 재단 소속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청소년시설 중심의 네트워크는 민간분야의 자생성보다는 공공부문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청소년계에서 부천이 네트워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청소년끼리만 네트워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 선생님이나 ○○○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다고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 청소년 네트워크 안에 민간은 없었어요.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관장님들 중심으로 이슈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하고…”(참여자 2)

미래센터의 출범, 그 진통의 과정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푸른모임의 해체다. 푸른모임은 해체됐지만 대신 그 자리에 성장지원 사업 협의체가 들어섰다. 푸른모임을 해 왔던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청소년시설 중심의 네트워크라 폄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무자 중심의 네트워크였다고. 하지만, 결과는 푸른모임의 해체,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자리를 잡은 성장지원 사업 네트워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모임의 입장을 대변할 제 3자의 목소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리에는 유감스럽게도 푸른모임을 대신할 인물이 없었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볼 기록물도 없었다.

3년간의 사업추진을 재단 정책실이 맡아 진행하며 얻은 결과물은 미래교육센터였다. 어떤 의도였든 부천에서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가장 확실한 성과가 미래교육센터였다. 사업 종료 후, 성장지원 사업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부천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체계적인 조직인, 미래교육센터를 지난해 3월 개소하였다. 동시에 향후 성장지원 사업이 외부 재원의 도움 없이 부천시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도 미래센터의 개소였다.

그런데 미래센터의 출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선 연 100억이라는 거액의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부천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등 개인 시간을 갖기 일쑤인 교사들이 부천 청소년과 학생들의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을 위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었다. 교육경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시장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그리고 교육경비 사용의 효율성을 전면에 드러낼 수는 없었다. 전통적인 교육경비 지출 항목 외에 교육자원 네트워크, 교육자원 발굴, 교육주체 역량 강화, 진로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가된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교사가 맡을 수 없었다. 교육지원청은 이런 업무가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오히려 미래교육센터를 재단이 수탁받게 되면서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경감이 될 것이란 기대했다.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이 얻은 지역사회의 신뢰가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재단의 ‘또 다른 사무’로 자리 잡았다. 교육청과 학교에 뺏기거나 휘둘리기 쉬운 미래교육센터를 재단이 가져왔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었다. 청소

년수련관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던 재단 내부 인력들의 업무 관성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등의 새로운 사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여 새롭게 잘 바뀔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논의를 다소 길지만,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머리로 상상하는 구조상으로는 미래교육센터가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최종 결과물일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중략)… 성장지원협의체 사업을 띄우면서 전임 대표이사님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평생의 숙원을 풀었다, 청소년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흡수하고 우리의 관점을 교육에 투사할 수 있겠다고 해서 미래센터를 우리가 반드시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관장님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어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려할 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 흡수당하기 좋겠다, 얼마나 단단하게 직원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뭘 하는지 헛갈릴 거고, 센터를 만들어놓고 청소년수련관의 경험만 있는 직원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옳은 건가, 혹시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드랍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올거다 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시는 이걸 추진한 이유가, 부천 교육경비가 약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도시 단위에서 굉장히 큰 거죠. 교육경비가 교육청에 100억이 쏟아짐으로 인해 학교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중략)… 저한테 재단이 이걸 받지 말라고 권고했던 공무원들 중에는 선생님들(학교교사들)이 정말 책임이 없다, 방학 되면 해외여행 간다고 행정처리 안하고 두 달씩 연락이 안 된다, 재단이 그런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 하지 말라는 권고를 세게 했어요. 교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가 미래교육센터인 거고요. 각자 이해가 다 다른 거죠. 시장님은 이런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걸 표시 내 줄 수 있는 기관을 임기 동안 만들겠다는 게 추진하는 이유였죠. 재단은 부천만이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관점으로 한계점을 넘어버린 학교교육의 관점을 우리가 바꿔보자. 각자가 다른 이유로 하게 된 거죠. 교육청은 당연히 교사 민원처리를 숨겼죠. 저희가 그래서 공청회장에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못 받는다 …(중략)… 문서를 저희에게 두 번 정도 보냈을 거예요. 행정업무 경감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받는다고 해서 세 번째는 지우고 왔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이 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줄어들 거야 하는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어떤 꿈을 꾸는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을 거고 사실 좀 세게 되돌려줄 시간이 왔죠.”(참여자 2)

부천시는 현재 재단 출연금으로 약 80억 정도를 출연한다고 한다.²⁷⁾ 보조금과 공모사업을 모두 합치면 예산 규모가 대략 연 120억 원 정도다. 여기에 교육경비 예산이 약 200억 원 정도이니²⁸⁾ 모두 합치면 320억 정도의 예산이 재단으로 와서 센터별로, 항목별로

27) 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대략 76여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28) 교육경비가 100억 원으로 논의 했지만, 이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교육경비 중 교육환경개선금 100억 원이 누락되었다고 추후에 진술하여 교육경비 전체 예산은 총 200억 원 규모였다.

집행되는 구조이다. 2016년 재단 출범 시 청소년수련관 3개, 청소년문화의집 1개 등 4개 시설이 있었고 예산 규모는 36여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짧은 기간의 상당한 성장이다. 이런 성장을 지역사회는 달갑게 보진 않았다. 재단이 공룡화한다고도 했고, 욕심을 부린다고도 했다. 미래교육센터까지 설립해서 재단이 운영한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가 많았다. 의회에서도 세 번이나 부결되었다. 미래교육센터 출범의 진통이다.

그런데 이런 진통은 한편으로는 필요했다. 필요 없는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 장치이자 과정으로 본 것이다. 교육경비를 지역교육지원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역교육지원청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쩌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가치, 일의 중요성을 알아주기를 원한 것으로 보였다.

“갈등 많았죠. …(중략)… 사실 재단이 뭔가를 기획하고 의도해서 불륜을 키운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해서 갑자기 우리는 차년도 예산 승인을 다 받았는데 상담센터가 밀고 들어온다든가 예고는 되었지만 갑자기 소사청소년센터가 완성이 된다든가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니 갑자기 주렁주렁 아이들이 생기는데 지역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재단이 공룡이 돼가고 있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미래교육센터가 의회를 통과하는 데 세 번 정도 부결됐어요. …(중략)… 그런 곡절이 컸어요. 그런데 재단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천천히 가는 게 좋았다고 봐요. 교육청이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필요한 걸 재깍 시가 해 주는구나 인데, 시민도, 의원도, 시 구의원들도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를 교육청이 아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늦게 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요, 교육청이 비교적 요즘 조용히 발톱을 빨리 안 드러내는 건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빨리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싶고 100억이라는 교육경비를 한 번에 다 안 받겠다, 그걸 이 원원으로 하면 여전히 행정 처리를 해 줄 거니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사실 아직 그 돈이 건너오지 않은 상태로 내공 다지기 중인 거죠. 쉽지 않았습시다.”(참여자 2)

쉽지 않은 출범이었다. 출범 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갔는지 궁금했다. 아울러 조직편제는 물론이고 인적 자원의 구성을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도 궁금하였다. 그것은 미래교육센터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와 함께 앞으로 센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개소는 작년 3월이었어요. 모든 행·재정적인 인력구성과 공간세팅은 재단 준비팀이 다 해주셨고, 당시 정원이 센터장 포함 13명이었어요. 개소를 준비하며 일련의

활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지향점이나 방향이나 목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략)… 저희는 교육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교사, 부모, 청소년,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마을교사나 마을활동가들과 같은 교육주체들의 생각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 각각 소속된 기관의 성격과 바람, 요구에 따라 미래교육센터에 요구하는 것과 방향, 미래교육이 무엇인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와 정의 자체도 너무나 달라서 그것을 최소한 하나로 정의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미래교육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했고, …(중략)… 저희 역할도 학교교육이 가진 교육방식, 종류, 대상, 주체들이 한정적인데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이 꼭 가르치는 기초교육이나 학력 신장의 교육이 아니라 삶이 교육이고 배움이라는 측면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마을이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마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체로 살아갈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성으로 어떻게 발현될지였어요.”(참여자 3)

“미래교육센터 구성원을 선발할 때 의도적으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구성원들로 뽑았어요. 교육학 전공자들이 왔을 때 청소년 관점을 새롭게 투입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재단 구성원들이 그 공간에 돌아가며 가서 청소년사업과 교육사업을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수련관 직원 뽑는 것과 비슷한 가이드로 뽑았어요. 처음에는 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학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동네의 궁금함, 기대가 있었는데 원칙이 청소년 관점에서 마을교육과 학교를 연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가 가야 한다고 한 거죠.”(참여자 2)

그래서 현재 미래교육센터의 인적 자원 구성은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이다. 곡성과는 다르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센터 민간 인력이 함께 재단에 참여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모두가 재단 인력 기준에 의해 선발되고 훈련을 받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없다. 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온다.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는 장학사 1명과 행정주무관 1명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주무관은 오지 않고 장학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무지를 지정해 와서 센터와 협의하거나 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해야 할 협력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정도이다.

부천시 지역사회협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처럼 쉽지 않은 기간 동안 미래교육센터는 출범을 준비했고 마침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지원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이하에서는 민간 단체로도 기술)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네트워크와는 다른, 지금의 또 다른 네트워크 문제, 향후 성장지원 사업이나 네트워크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푸른모임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네트워크가 청소년시설 중심의 네트워크였다면, 지금의 네트워크 특성은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네트워크이며 청소년재단 내의 청소년시설들의 주요 집중대상 청소년들이 학업청소년, 곧 학생이라는 관점이었다. 시의 출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이고 청소년시설·기관이다 보니 민간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공공기관이자 관의 성격을 가진 시설이었다.

특히 시의 출자금 상당액을 받아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집행하는 청소년시설과 기관들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위기청소년이나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진 민간 단체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민간 단체의 자생성, 주체성, 주도성에 대한 비판과 기대도 이어갔다. ‘시’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였다. 시의 예산만 받으려고 한다면 민간이 갖고 있는 자생성과 주체성, 주도성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의견이 깃들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의견은 미래교육센터를 이끄는 센터장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의견은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민간 단체의 자생성을 발휘할 사회 생태계가 위협받아 나타난 결과란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카페(청소년카페)²⁹⁾ 만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부천으로 이끌려서 여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인사를 다 다녔으나 재단과 교류가 없었어요. 딱히 할 게 없었고 처음 와서 제가 느낀 게 부천은 민간 단체가 없다는 거였어요. 부천은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줘서 활동을 안 하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부르지도 않았지만 저희는 각자도생이니 자립하려고 하고, 돈이 없으니 대부분 몸으로 때우고 했어요. 길 수도 없고, 오라고 하는 적도 없었다가 작년부터 네트워크 회의에 나오라고 했어요. 청개구리라는 (거리 청소년) 급식 관련 민간 단체가 있는데, …(중략)… 거기와는 좀 긴밀하게 연결했지만, (재단과는)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작년부터 연결되면서 일하기 시작했고....미래교육센터가 생겼을 때 학교 중심이라고 해서 굉장히

29)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카페 도당점, 소사점을 의미함.

실망했고 자료집에서도 청소년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흔쾌히 받아들이셨지만 거의 모든 게 학교 중심이고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작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공공기관들과 회의하며 작년부터 거리 청소년들과 이주배경 아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중략)…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자기를 일이 정말 많은데 NGO 같은 곳은 자기들한테는 안 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공공기관들이 같이 해보지 않겠냐, 뭘 도와줄까 물어보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중략)…”(참여자 4)

“NGO가 존립할 수 있는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부천이 1기 신도시잖아요. 중상동을 제외하고는 꽤 큰 공장들이 있었고 생산구조가 좋아야 기부금으로 살 수 있는 NGO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변에 인천이나 화성이 대규모 공단개발이 되니 부천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시청의 공공기금만 바라보는. 그래서 NGO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가 없어요.”(참여자 3)

한편 민간 단체가 재단이나 청소년시설들이 학생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들 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단정 짓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는 의견도 나왔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그간 청소년센터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소수 청소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경향과도 밀접하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해 이주배경 가족들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접 도시 부천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학교 내 이주배경 청소년 - 교육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학생으로 칭한다 - 대상 다문화상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기관 폐쇄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위기청소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는 달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도 있었다. 이는 자괴감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민간 단체와 비교할 때 갖는 일종의 열패감이기도 하였다.

“이 이슈가 나오는 두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쪽에 거주하던 분들이 부천역 쪽으로 들어오는데 교육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부천에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주배경인데, …(중략)… 교육청이 이 아이들을 파악한 게 아니라 동장님이 먼저 파악하고 그걸 시청에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재단 대표이사야 듣고 와서 상담센터가 다국어상담을 하며 이주배경에 대해 개입을 시작했고, 또 하나는 …(중략)…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시설은 폐쇄해야 하는데 민간은 문을 닫지 않고 활동했죠. 이때 재단은 자괴감이 컸어요. 무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기관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은 사이 이분들은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거두고 교육시키는 걸 했으니.”(참여자 2)

민간 단체는 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재단 혹은 청소년시설과 동료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수준으로 변모했을까? 즉, 지역 아이들의 성장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는지가 궁금했다. 이른바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하자면, 단순히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단계나 수준이 있다. 반면에,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동료적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단계나 수준이 있다. 3년간의 사업을 통해 민간 단체가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수준의 협력관계를 가졌는지를 물어본 결과, 상호 이해는 하는 수준이지만 사업의 방향까지는 공유하는 단계는 아니란 응답이 돌아왔다.

“이해는 생겼으나 방향은 아직이에요. 이주배경의 경우도 조려도 같이 만들면서 각자 하는 자원을 다 내놓자, 같이 할 건 뭐가 있고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뭘까 하는데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총체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을 성과로 가져오기는 아직 힘들어요. 그러나 많이 발전하기는 했어요. 사실 재단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끌고 오지 않았으면 풍비박산 났을 텐데 재단의 실무자 한 명을 지정해 주고 그분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니 이게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4)

하지만 단초는 보였다. 그건 신뢰의 단초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지만, 곧 기관의 신뢰이자 함께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이다. 이런 신뢰는 재단도 갖고 있었다.

“지역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민간 단체 한두 분이 오셨어요.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작년에 민간 단체에서 민간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작년에 불이 붙어서, 작년에 시범으로 민간 청소년시설과 공간들, 식당들의 활성화 방안이나 연구를 빌미로 민간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따로 했어요. 민간과 공공의 대표들이 만나는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균형 잡힌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말이 작년에 있었어요.”(참여자 1)

“거리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민간(단체)이 체감하고 있으니 서울에서 폐기하기로 한 이동버스를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책실로 의논하러 오셔서 재단은 배분 기능이 없는데, 그러나 어디에 돈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해요. 거리 아이들을 위한 협업을 한번 하면서 일이 커지는 거죠. 공공영역에서 미래가 작동하는 것과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같이 작동하는데 2년에 걸친 경험이에요. 정책실에서 고유의 업무들을 전부 없애고 성장지원 담당으로 일을 바꿨고,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게 돈을 조금 준 거였어요. 그 돈이 끊겨도 재단이 출연금으로 채울 수 있었죠. 그게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다는.”(참여자 2)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3년간의 사업추진을 통해 성장지원협의체를 비롯한 추진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먼저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재단은 기대보다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한 것으로 의견을 준 것이다. 1, 2차 년도의 사업목표가 지역 성장협의체의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이라면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성장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째 실패를 했어요. 작은 네트워크라도 성공 경험이 중요한데 …(중략)…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명제를 먼저 지역에 던지면서 네트워크를 나중에 구성하니까 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전략적으로는 각 지역의 이슈를 같이 모여 해결하는 성공 경험을 나누어야 해요. …(중략)… 성공했던 기억을 같이 공유해야, 저 네트워크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들이 생겨야 모일 텐데 그런 점에서 부천은 출발을 잘못했고 미래교육센터도 이미 관에서 만드는데 그런 반발이 있는 구성원들이 절반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아직은 (성공의 경험을 갖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참여자 2)

이제 성장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기관이 미래교육센터이다. 부천미래교육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교육자원 풀을 만드는 작업을 지난해 개소한 이래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에 현재 존재하는 여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의 부서 개념으로 미래교육센터가 있다 보니 청소년 성장지원의 중심이 미래교육센터여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는 계속 있어요. 지역 안에서 미래교육센터는 네트워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핵심적인 아젠다와 …(중략)…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과의 파트너십과 역할 정립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청소년과 교육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성장지원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다르고 지향점도 조금씩 달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중략)… 우선 교육자원 풀을 구성해서 …(중략)… 모으는 작업들을 1년 내내 했죠.”(참여자 3)

실제로 부천시 각급 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네트워크도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미래협력교육지구에도 중간지원조직으로 협의체 기능의 네트워크가 구성될 것이다. 부천시에는 권역별로 구성된 학부모 네트워크도 11개나 있다. 이들 네트워크에 미래교육센터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개별 네트워크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이들 네트워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대주제에서 네트워크의 핵심, 곧 허브로서 이들 네트워크를 조율, 조정하면서 중심축이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크게 세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문제를 공유하는 단계의 네트워크이다. 사실 이런 수준의 네트워크는 때때로 한두 번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참여하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계속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문제 인식의 제기와 그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의 네트워크다. 같은 문제라 해도 구성원이나 속한 기관에 따라 문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왜 네트워크를 통해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적 수준의 실천, 즉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세 번째 수준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제 해결 곧 실천적 수준의 네트워크이다. 두 번째 수준의 네트워크까지 경험하는 동안 구성원 간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 동료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천을 하는 단계의 네트워크이다. 문제 해결 실천의 과정에 참여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우리가 해냈다.”라는 성취감과 함께 동료 의식, 일종의 멤버십을 갖는 단계의 네트워크이다. 부천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일종의 위밍업 단계이다. 초보적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첫 단계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를 스스로 조직하고 구성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수준의 세 번째 단계까지 미래교육센터가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조력함으로써 세 번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지원할 것 인지이다. 결국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결정은 센터 자체의 고민이 아닌, 재단 전체가 부천의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오픈하여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다.

한편, 미래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미래교육포럼을 연 1회 준비해 개최하고 교육자치, 돌봄과 같은 의제 중심의 분과를 지금은 지역마다 분과를 만들어 10개의 분과를 두고 연 2~3회의 분과 모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럼과 분과 회의는 단순히 담론에서 끝내지 않고, 지역을 바꾸는 실천의 장면으로 견인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이런 실천 의제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의 주도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다듬고 있다. 그 과업의 첫 시작은 배움의 내용, 곧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부천시 내에 네트워크 거점 공간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거점 공간에서 활동할 코디네이터, 즉 인적 자원의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은 현재로서는 청소년계의 지도자들을 고려하고 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를 중장기적으로 바꿔보자 했어요. 기존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사가 만들었다고 하면 올해는 마을이 주도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년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실행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도 점차 청소년으로, 마을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주도해 보고 청소년들이 주도해 보는 과정들을 해보려고 해요. 부모는 안 해요. 부모가 개입될 시 객관성과 주관성의 경계에 있어서...부모는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부천 인구가 그래도 70만이고 청소년들은 15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부천 전체를 놓고 네트워크 하기에는 어려우니 작은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 거점은 어디여야 할까. 저희 장기적인 목표는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와 마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동마다 만들고, 그 안에 마을 사안들을 기획하고 조정할 마을 코디네이터를 전문성 있는 분으로 두려고 합니다.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한다면 마을 거점에서 마을의 이슈들이나 사안들을 충분히 고민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엮는 작은 실천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참여자 3)

“청소년계의 구성원들이 부천에서 보면 좋은 인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은 단위 사업을 맡더라도 구성원들의 몇 명은 마을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 (중략) ... 사실 부천정도 되면 활동가들이 국내에 있는 어지간한 경험들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천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략) ...” (참여자 2)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재단도 많이 바뀌었다. 재단 정책실의 기능 중 하나가 성장지원 사업의 기능으로 추가되었고 재단 외의 다양한 교육자원들과의 거버넌스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삼게 되었다. 아울러 재단은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류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주류화와 관련하여 개념적인 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주류화란 다른 시정 의제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치와 비중으로 청소년정책과 사업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아동정책에서 아동정책 영향 평가에서 의미하는 주류화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재단의 관장님들과 저와 협의가 안 됐던 게 주류화인데, 제 목표는 시정 메인 테이블 안에 노동영역 안(이 있다면)에 청소년 노동이 같이 영역별로 들어가는 건데, 관장님들의 주류화는 아이들의 경험치가 들어가는 것까지였어요. 주류화의 목표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참여자 2)

“뭐가 다르다는 거죠?”(연구자)

“관장님들은 청소년의 주도성 중심으로만 생각하셨고.”(참여자 1)

“시의 정책과제로 이게 들어갈까 하는 거죠. 청소년 영역평가가 들어가야 주류화라고 생각했어요. 정책에 영향을 줘야 그게 주류화라고. …(중략)… 청소년게는 참여해서 해보는 것까지 만인 거예요.”(참여자 2)

시에서도 성장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그러면서 시청 내 지원부서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추하면서 앞으로는 교육과 청소년을 연결 짓는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단을 통해 계속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시의 역할이 앞으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재단도, 청소년 시설과 기관도, 미래교육센터도 잘 이해해야겠지만, 지역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고 그 네트워크가 시민, 그 중에서도 청소년시민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알고 있기로 공무원 조직이 경직돼 있고 부서 간 벽 때문에 협업이 어렵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중략)… 저는 아동청소년과 소속이고, 미래교육센터는 평생교육과 소속입니다. 시 조직 내에서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업무나 역할을 하는지, 어렵듯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는 업무관련 교류는 전혀 없고 재단을 통해 접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중략)… 저희도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 조직 내에서는 협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중략)… 재단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청소년 부서가 교육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천시는 예전에는 교육과 청소년이 같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하게 되면서 재단도 여성 청소년 재단으로 생겼지만 어찌 보면 내년 조직 개편을 하는데 다시 청소년이 교육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참여자 5)

(4) 시사점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천시는 완주군이나 곡성군 등 다른 군 단위 지역과는 달리 강력한 어느 하나의 주체가 힘을 발휘하여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역의 기존 네트워크나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주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시, 시의회 등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1년 차에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험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재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를 개소하면서 재단과 센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사업추진의 절차를 밟아가는, 말 그대로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로 보였다. 즉, 공식적인 성장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이다. 따라서 이곳은 그간의 활동 경험이나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요소를 살피고 평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과 과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한편으로는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곳이다.

둘째, 부천시의 경우 그 기반은 나름 잘 갖춰진 곳으로 보인다. 예산도 여타의 지역들과는 달리 상당한 예산 규모를 갖추고 있고 사업추진의 핵심 주체로 미래교육센터도 구축하였다. 문제는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미래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 센터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향후 필요한 과제로 보였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미래교육센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 청소년 성장 관련 네트워크(들)의 허브로 그 기능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네트워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성격과 기능을 갖출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 다른 사업추진의 기반으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냉정하리만치의 비판과 평가는 결국 부천시가 가야 할 네트워크 방향과 성격에 대한 평소 고민의 결과로 보였다. 그리고 그간의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런 비판과 평가를 상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푸른모임에 대한 평가와 비판, 학생 중심의 청소년 사업추진, 관변단체처럼 행동하는 재단과 청소년시설·기관에 대한 평가, 시 예산에만 목매는 시민단체 등의 날 선 비판의

목소리에 참여자들은 상당히 익숙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적어도 이런 논의들이 그간 심심치 않게 모임을 통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 지역 코디네이터 혹은 네트워크로서 청소년지도자들이 훌륭히 일해낼 수 있다는 인적 자원에 대한 신뢰도 인상적이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상적이었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놀랍게도 위의 다른 지역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큰 틀에서 전혀 다르지 않았다. 갈 길은 멀지만, 기반은 닦였다고 본 첫 참여자의 말은 성장지원 사업이 남긴 중요한 공(功) 하나를 보여준다. 이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과 그동안 함께 해 온 기관들과 같이 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추진을 통해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현재 재단에 속한 두 번째 참여자는 사업의 예산은 결국 수단이고 방법의 하나일 뿐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과 가치의 공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참여자는 부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미래교육센터가 향후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그건 바로 마을과 청소년의 주도성 확대와 강화이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선택의 극대화이다.

“돈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예산이 끊어지면 사업도 멈추기도 하고 돈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목적이나 의도나 가치들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했다는 스킴만 남아요. …(중략)… 마을 주민들이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 없이 돈 따기와 페이퍼 쓰는 역량만 남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예산 규모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뭐 하는지에 대해 합의되는 과정에서 일체감을 갖고 합의된 목표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자 2)

“저는 원래 청소년 베이스였다가 지금 교육 쪽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점을 만나게 해주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은 2022년 교육개정안에 고교학점제가 있어요. …(중략)… 청소년시설들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교육 선택권을 시설 안에서도 줄 수 있을까에 지향점이 있어요. 고교학점제 모형이나 정책들이 변화되며 청소년시설에게 저희가 연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점들을 구조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민 중이에요. …(중략)…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는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연구를 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했고 올해는 거기에서 나온 키워드가 관계와 주도성인데 관계는 마을 안에서의 네트워크와 좀 더 유사한 성격이니 미래교육센터가 연결하는 역할과 촉진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중략)…지역 안에서 관계를 맺고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주도성을 가지려면 미래교육센터가 어떻게 연결하고 촉진해야 할까에 대한 관계성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참여자 3)

4) 대구광역시 수성구

(1) 지역 현황(도시 성장 및 변천사, 인구변화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대구광역시의 7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2군(달성군, 군위군) 가운데 하나의 구로, 수성구의 전체 면적은 76.54km²로, 대구시 7구 가운데 중구(7.06km²), 남구(17.43km²), 달서구(62.37km²)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구이다. 수성구에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방송국(KBS, MBC, TBC), 금융기관(대구은행 본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구광역시의 교육,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규모로는 대구시 인구가 2,387,031명인데, 수성구 인구 규모는 411,553명으로, 대구시 전체 구, 군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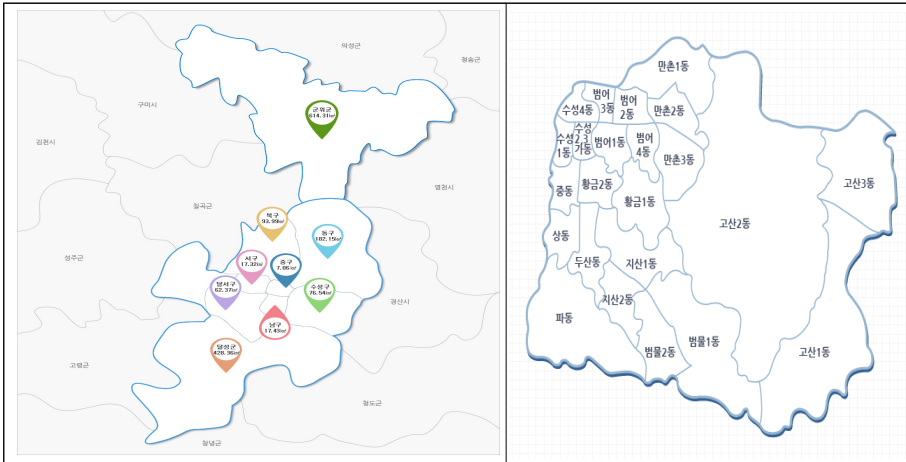
표 IV-5. 수성구 인구변동추이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구시인구	2,513,970	2,511,050	2,501,673	2,489,802	2,468,222	2,446,144	2,412,642	2,393,259
수성구인구	453,786	448,550	440,743	434,399	430,334	425,987	411,553	408,238
수성구 청소년인구	101,185 (22.3%)	97,407 (21.7%)	93,180 (21.1%)	89,128 (20.5%)	85,174 (19.8%)	81,502 (19.1%)	78,801 (19.1%)	76,781 (15.7%)
65세 이상 고령자	54,596	56,431	58,905	61,089	63,474	66,564	69,185	73,738

* 출처: 대구통계 홈페이지. <http://stat.daegu.go.kr/main/main.do>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s://stat.suseong.kr/2021st/0101.html>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수성구 인구는 2010년 463,670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4~5천 명 내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도 2015년 10만 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2, 3천 명씩 감소하여 2022년 현재 76,781명으로, 7년 사이에 2만 명 이상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대구지역 내에서 소위 말하는 학군 수요가 많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청소년을 둔 가정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은 광역도시인 대구시 인구감소 추세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53&servletPath=%2Findex.do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9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그림 IV-7. 수성구 행정구역도

다음으로 수성구에는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7개교 그리고 대학교는 전문대학(수성대학교) 1개교가 위치한다. 청소년수련기관 및 시설 현황에 대해 살펴 보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이 각각 1개소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년센터 1개소, 청소년일시쉼터 1개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대구시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가 전액 부담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성구 지역은 대구지역에서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수성구가 2011년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하여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 및 입시정보 제공, 지역 내 학교와 시설 간 체험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의 명칭을 ‘수성구 진로진학 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사업도 진로교육 및 진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상담 그리고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수집 등으로 변경하였다.

표 IV-6. 수성구 학교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계	남	여
초등학교	34	938	23,053	11,901	11,152
중학교	23	595	15,772	8,265	7,507
고등학교	17	581	13,213	7,178	6,035
특수학교	1	47	280	194	86
대학교	1	50	4,595	2151	2,44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V-7. 수성구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현황

구분	기관명	주요사업
활동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복지보호사업, 특화사업, 평생교육사업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가족특화사업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복지보호사업, 평생교육사업
	수성구청년센터	청년활동, 청년축제, 청년공간사업
복지·보호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교육지원,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수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복지지원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보호사업, 아웃리치사업, 상담·정서·문화·정보제공
교육	청소년진로진학센터	기업탐방 프로그램, 입시박람회, 진로진학 컨설팅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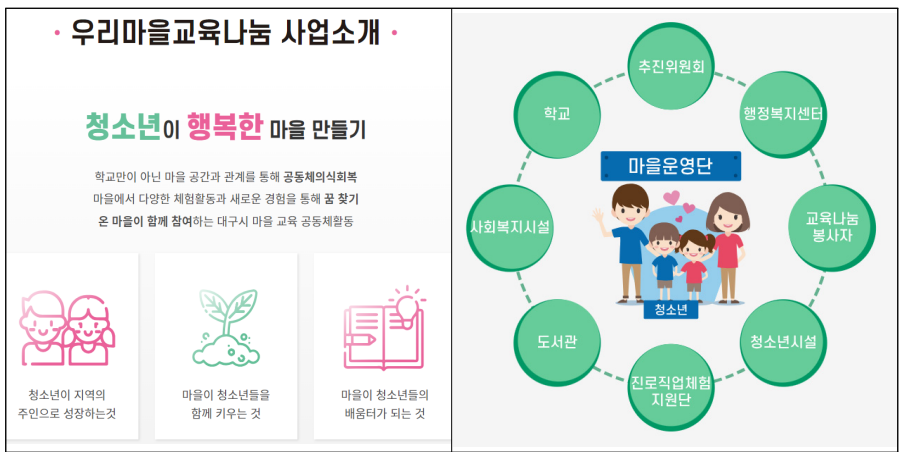
(2) 지역 내 정책사업의 현황과 변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과 관련해서 수성구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대구시)과 미래교육지구사업(대구시교육청, 교육부)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다. 수성구는 2015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대구시가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전액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만이 아닌 마을 공간과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19개동이 참여하였으나, 2021년 현재 80개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성구는 2015년 황금1동을 비롯한 3개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 현재 범어1동을 비롯한 8개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첫째,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사업으로 마을소통 캠페인,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가족소통 프로그램, 세대소통 및 나눔 활동 프로그램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둘째, 마을에서 꿈찾기 사업으로, 마을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마을 내 공공기관 방문, 마을 내 직업인과의 만남 그리고 진로코칭과 진로적성진단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셋째, 마을에서 행복찾기사업으로 마을 속 생태 및 문화체험, 돌봄과 배움의 마을학교 그리고 골목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마을 활동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 출처: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woori-daegu.org/p/p01-10>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그림 IV-8.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개념도

둘째,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이 사업은 학교와 지자체가 소통 및 협력하여 학교기관과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교육공동체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30) 출처: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woori-daegu.org/p/p01-10>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성구도 이 사업에 참여해 왔다. 수성구는 2021년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2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일명 수성미래교육지구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학교-지역연계 마을협력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9. 수성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체계도

(3) 인터뷰 분석 결과

① 사업추진 배경 및 동기

수성구는 2015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수련 시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한 마을단위 교육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 참여를 통해 기존의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배경의 또 한 가지 동기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협의체는 업무 협의는 가능하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성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성장지원 사업을 하기 전부터 수성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있었고 그 시설들이 서로 연계하는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임은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설들이 수련관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는데 교집합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며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를 하며 사업을 먼저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공모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는 사업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 의도가 형성되었습니다.”(참여자 1)

② 사업추진 전, 후의 상황 변화

수성구는 1년 차인 2021년에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하였다. 종래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경우는 드물기에는 수성구가 실시한 수요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희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요조사 결과,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진로 및 진학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이러한 관심을 사업으로 반영한 결과, 주민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일종의 ‘참여효능감(participation efficacy)’을 경험한 것이 큰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 전과 후의 또 하나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주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 주민참여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저조에 대한 이유로 주민들의 무관심을 들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사업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수성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마을주민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 후의 변화로 참여주체 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참여 주체 간 의제 선정에 대한 막연함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지자체와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의 모호성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더해진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딘 측면이 있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참여 주체들의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1차 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알 수 있었어요. 수성구가 생각했던 대로 진로의 방향성을 스스로 아니라 부모에 의존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진로보다는 진학에 맞춰졌다.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초창기에는 진로진학센터가 협의체로 활동했어요. 그때 회의를 이끌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활동 보호복지의 영역과 진로진학의 영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하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킹 사업으로 연결 및 확장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했고 청소년들은 과연 이 사업을 원할까 하는 것은 그러한 기반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조성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참여자 2)

“황금1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통해서 추진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 섭외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쉽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와 교육과정 연계를 해서 추진위원회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직접 하셨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추진위원이 아니었지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에 하루 가는 마을주민 분들을 모집했는데, 참여한 분들이 올해에 추진위원으로 신청하시고, 그러면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연계하니깐 학부모위원들이 이런 사업이었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개입하고 꼭 학교 아니어도 마을지역 축제와 같은 데까지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자발성이 생겼습니다.”(참여자 2)

③ 주요 추진 체제와 역할

수성구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협의체 구성의 역사는 199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수성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1년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2016년 수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 2020년 수성구미래교육지구협의회 그리고 2021년 수성구성장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수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서는 협의체에는 수성구청을 비롯한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각 기관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협의체, 각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협의체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표협의체는 기관 간 연계, 협력 사업 협의 및 예산 확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실무협의체는 공동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협의체는 체험활동 수요조사, 정책 제안 그리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협의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 사회복지, 평생교육 그리고 청소년 분야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사업적 수요 등을 공유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거기 보면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계신데 그 기관들에서 대부분 평생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노인복지회관 회장님도 말씀하시길, 요즘 어른들이 영어나 중국어를 많이 배우시는데 그이유가 수성구만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손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르신들을 다른 쪽으로 자기계발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주들과 소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 격 대 교육이 필요하구나.. 손주들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꼭 우리 손주, 우리할머니가 아니어도 엮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안이 있어서 제가 부장님께 이야기했고 그때 마침 교육부 공모사업이 뜬 거죠. 미디어가 대세라고 해서, 미디어 하자고 했고 정화여고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동아리가 또 같이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매칭이 돼서 다큐 제작을 하는 것으로 사업 연계가 된 거예요. 물론 타 구는 모르지만 수성구의 어르신들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점점 허브 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3)

④ 문제점과 개선 방안

수성구의 경우는 사업추진에 있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교와의 연계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참여기관의 이해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미래교육지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이전에는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자체와의 연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교육 당국(교육청, 교육부)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기관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체적 태도보다는 객체적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2022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는 2023년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2년 간(2021-2022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와 연계한 지역학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은 구청의 자체 예산 편성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약체를 통해 네트워크 하는 사업이어서 협약체 안에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사키면서 넓혀가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직접적으로 소속시켜서 하긴 어려워서 그건 잘 안 됐어요.”(참여자 1)

“사업이 시설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을 통해 모여지는 자원, 그 자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모사업인데, 다 통해서 하다 보니 성장이 본 목적인데, 이 시스템은 성장을 위한 건데 영향 측면에서는 성장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죠. 그래서 연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실 때 성과가 뭐냐고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가 미미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 성장했다는 건. 협약체에 참여하는 협약체들은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건 알고, 이걸 통해 그 협약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계속 참여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산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정도 해봤다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참여자 1)

“보완하면 좋겠다는 점은 1차 년도에 사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저희 수련관이다 보니까 기관들은 우리가 협조해야 되냐는 인식이 많았어요. 이걸 주도하는 게 지자체라면 사업수행기관을 몇몇 기관을 넣어서 행정지원은 수련관, 모집이나 프로그램은 어디,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시작할 때부터 공동의 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 년도에 그에 대한 소모가 좀 많았어서 사업수행기관을 넓게 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유성구에서도 시범사업 때 조례제정으로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노력하는 중간에 바람이 빠지는 게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육성위원회의 협약체는 또 뭐고, 실무협약체는 뭐고 너무 많다.. 상위법 범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무부처에서 해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

⑤ 타 유사 사업과의 향후 관계 설정

수성구는 2015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두 사업 모두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추진에도 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원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기타 교육 및 복지시설을 특정 사업에 배타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공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소속 기관 직원들의 경험 축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예산이 교육부, 여성부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등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관심이 있기에 유사성이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배타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협력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팀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저희 과 안에 있다가 7월부터 청소년여성가족과로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 사업을 기획하려 했을 때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시너지를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교육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시작한 걸로 알아요.....성장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며 교육지구사업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했을 때,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은 아무래도 수성구에서는 관주도의 성격을 띠었으니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견들이나 목소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죠. 관 주도인데 학교에서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교장선생님만 원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맞나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욕구나 욕심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장지원 사업이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맺고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참여가 힘들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계약서를 제출해서 사업 운영했거든요. 구가 주도하긴 했으나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공동운영 하는 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어느 정도 협조나 도움을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수성구만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한다면 해줄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담당들끼리의 라포 형성이 먼저 됐고 그를 바탕으로 다른 부서와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걸 최우선시 했어요. 관계형성부터 먼저 되어야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서로의 영역을 침해할 하지 않고, 교집합적인 부분만 엮어낸 상황입니다.”(참여자 4)

“교육과정 개발..미래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할 할 때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에 수련시설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각 학교 교사들과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련시설에도 이전까지 못했던 범주를 접할 수 있다는 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수련관에 있는 실무자가 느낀 게 아니라 참여했던 실무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의 매력이 시설중심의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2)”

⑥ 주민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수성구가 추진한 주민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노력으로 수요자중심의 윈스톱 플랫폼 구축과 대표협의체, 구의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관련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를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표협의체 구성원들(각 기관의 대표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학교와의 연계과정에 있어 지자체가 교량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의 사업 수행에 크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의 연계) 그렇게 하기 위해 진로진학센터와 연계했고, 교육부 공모사업을 했어요. 여러 기관이 이렇게 함께 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동아리 활동들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확산하고 홍보하고 모델화 사업을 통해 교육자원청의 관심을 유발하고 다른 우리 수성구와 떨어진 지역의 학교들도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면 학교에서 컨택하는 사업보다는 확산화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아이들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학교의 영향은 학교 문턱이 높아서 청소년 활동기관에서 홍보하기에는 어려웠지만 1년 차에 수요조사 할 때 구에서 지자체에서 수성구 안의 여러 학교를 섭외해 주셨고 이후에 참여한 학교는 주요 활동에 유입한 건 몇 개 되지 않지만 올해 보면 작년 사업 마무리 후에 보면 작년 사업들 덕에 학교들이 연계돼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수련관 내에서 있는 목적사업이나 활동들을 우리는 이 모델로 가야 한다. 우리 기관만의 사업 실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인프라를 다함께 연계해서 하자고 해서 사업계획 할 때 이야기 한 거거든요.”(참여자 2)

“청소년 성장엔진에 관하여 수성구에 있는 청소년 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작년의 경우 1년간 사업할 때 모든 사전 광고 띄우듯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태블릿 PC에도 돌아가게끔 했죠. 주민들이 저희 수련관에도 주말에 1700명 정도가 오고 가는데 저희 수련관 내부에 보면 모니터에도 계속 띄워서.. 영상 잠깐 앞에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재생) 성장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성장 엔진이라고 해놓은 것들을 아이들과 보면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⑦ 제도적인 보완

수성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는 않고, 수성구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에 성장지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지, 별도의 성장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보다는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례 관련해서 육성지원조례를 할 것인지, 거기에도 장이 여러 장 있어서 협의체 관련한 것을 담을지 따로 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를 만들지에 대한 것은 검토된 것이 없어요. 초안을 만드는 것도 만들기는 쉬운데,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안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직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해버리는 것도..”(참여자 5)

“지금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지만 애초에 새로운 성장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보니 겹치는 게 많지 않느냐는 해석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청소년 육성대신 성장으로 대체한다는 해석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청소년 육성법에 보면 육성위원회의 역할 중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다른 걸 만들기보다 상위법에서 법령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구나 해석했어요.....

포럼을 하든 뭘 하든 청소년 성장엔진 이름이 현수막에 붙는데 그게 뭐냐고 의원님들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관점의 네트워크를 한다는 걸 소개하며 알려드렸어요. 제가 많이 알리면 조례 개정이 쉬워지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청소년 육성법 법령이 개정되면 다 될 문제인데 우리가 괜히 먼저 만들었다가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면 어려워지겠더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의 보완점으로 생각한 게 성장지원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속제는 좀 더 상위에서 법에 대한 부분들, 법에서 육성과 성장에 대한 해석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⑧ 사업 만족 수준과 지속 추진 의지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가운데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학교와의 연계에 있어 학교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 사업과 같이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자긍심, 시설 중심적 사고에서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로의 인식 전환 등과 같은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성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협의체가 성장, 발전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의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성 지역학’ 교육과정, ‘가족애 프로젝트’는 미래교육지구사업과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장을 하기 위한 협의체들의 노력이 심화가 되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년 차의 경우는 참여 기업문화가 도출되는 결과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욕구가 파악이 되는 거고 그 도중에 협의체들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협의체들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할 근거들이 마련됐죠. 2년 차부터는 그 모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화 된 것들이 있게 됐다 정도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움직인 큰 틀이라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성과가 아닐까요?”(참여자 1)

(4) 시사점

대구시 수성구의 특징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청소년시설 중심적 사고에서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로의 인식 전환을 들 수 있다. 수성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였으며,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가족캠프 운영 그리고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성학 교육과정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업 이전에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협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기가 없어 협업을 못 하다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종래에는 시설 이용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탈 시설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설종사자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모델 사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수성구는 관(官)의 영역인 수성구청, 교육지원청, 학(學)의 영역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민(民)의 영역인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과 연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꾸준히 참여한 청소년수련관의 경험과 2020년부터 추진한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경험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 작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성구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한 ‘수성지역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원이 연계하여 운영한 ‘가족애 프로젝트’ 대학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연계, 협력하여 추진한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 유사 사업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수성구는 유사사업들을 배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성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사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언급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와의 연계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경험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지원과 유사한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덧셈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FGI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실행 주체가 누구이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되는가 보다는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을 들 수 있다. 수성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모델사업의 첫해인 2021년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였다. 또한 중간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요조사에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진로 및 진학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세상’ 등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수성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성 지역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애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 지역현황(도시성장 및 변천사, 인구변화 등)

진해구는 경상남도의 남부권역에 위치한 도시로, 균형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도 해군사관학교와 다수의 군부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시와 더불어 창원시의 일부가 되었다. 참고 창원시는 구 창원시에 해당하는 의창구, 성산구, 구 마산시에 해당하는 합포구, 회원구 그리고 구 진해시인 진해구의 다섯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는 백만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2023년 기준, 1,014,544 명). 창원시는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창원시 인구는 2012년 1,106,081명 수준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2년 현재 1,035,47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88,196명 수준에서 2022년 170,273명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창원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19%이다. 2023년 6월 현재, 청소년 인구(9-24세)는 159,572명(15.7%)으로, 2020년 176,984명(14.0%)에 비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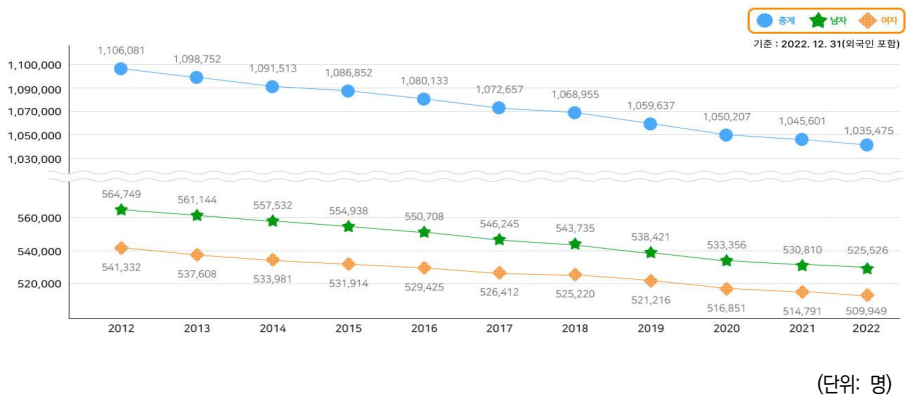
한편, 진해구 인구 규모는 2023년 6월 현재, 192,603명으로, 2020년의 192,641명에 비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 인구(9-24세)는 2020년(7월 기준) 33,517명에서 2023년(6월 기준) 32,969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²⁾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진해구는 오래전부터 균형도시, 군사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진해구에는 다수의 해군 관련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진해구는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진해만에 인접한 해안 지역은 대부분 해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해만에 인접한 해안 지역이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해군에 의존하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³³⁾ 즉, 해군 종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던 서비스업종은 감소하고, 균형제를

31) 출처: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http://bigdata.changwon.go.kr/portal/statUse/stat/useCwStatPerCw.do>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32)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33) 출처: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7년 12월 1일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049900051>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비롯한 진해만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해구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적 특성이 있었는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14년 STX 그룹이 해제되면서 조선업 종사자 및 관련 종사자의 실직 등은 진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한인구, 김홍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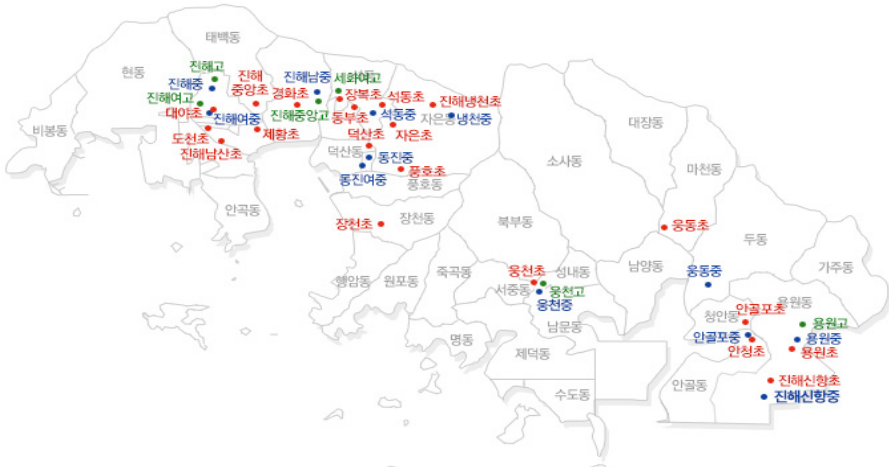
*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bigdata.changwon.go.kr/portal/statUse/stat/useCwStatPerCw.do>)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그림 IV-10. 창원시 인구변동추이



*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672/10674.web>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진해구청 홈페이지 지도. <https://www.changwon.go.kr/gu/contents.do?mld=05010201000>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그림 IV-11. 창원시 및 진해구 행정구역도



* 출처: 창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221&cntntsId=274>, 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그림 IV-12. 진해구 학교분포도

진해구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해군사관학교가 유일하며, 고등학교 6개교, 중학교 11개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20개교가 있다.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야영장 1개소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개소 개설, 운영되고 있다.

(2) 지역 내 정책 사업의 현황과 변화

창원시는 시의 주요 정책목표로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기업친화도시 그리고 건강도시를 내걸고 있다.³⁴⁾ 창원시는 2006년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환경도시 창원 만들기’를 선언한 이래, 창원시의 생물다양성, 습지 보전, 녹색교통 등과 같은 환경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³⁵⁾, 최근에는 공기 질 확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자원 순환형 도시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4)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720/10723.web>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35)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ld=10030201000>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다음으로, 창원시는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진해구가 진해만이라고 하는 자연환경과 국제무역항인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진해구를 해양레저 산업 거점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타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8. 창원시 주요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추진과제
스마트 기후환경 도시	•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질 확보 • 안전하고 깨끗한 물 순환 도시 구축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노력 경주 • 청결하고 쾌적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 첨단 스마트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기업사랑 도시	• 동북아관광허브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 • 해양관광자원과 첨단 로봇산업을 결합한 세계적인 로봇 산업연계형 테마파크 조성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 진해지역의 다이나믹한 해안선과 도서를 활용한 남해안 거점 마리나 조성 •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원 • 기타
건강도시	• 물리적인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지역사회 • 자신의 인생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원활한 사회 • 음식, 물,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욕구가 모든 시민에게 충족되는 도시 • 다양한 만남,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보장되는 폭넓은 경험과 자원이용이 가능한 도시 •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이 보존되며 다른 집단과 개인간의 협력이 장려되는 사회 • 건강도시의 제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진 도시 •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보장되는 도시

* 출처: 창원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720/10723.web>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하여 재구성

다음으로, 진해구는 2016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욕구조사 결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을형 잡월드 구현’을 목표로 ‘덕산마을학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청소년의 진로역량 함양, 청소년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그리고 창원시의 진로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조달하였으나, 2017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덕산마을학교사업’이 채택이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창원시 도시재생센터로부터도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창원시로부터 현재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업명을 ‘창원시 청소년 마을학교’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현재는 사업추진 기관을 진해청소년수련관,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마산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창원시 마을학교 사업의 경험을 살려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진해청소년수련관 내부자료

그림 IV-13. 창원시 마을학교 추진과정

(3) 인터뷰 분석 결과

① 사업추진 배경 및 동기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킹 사업을 보다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안전망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성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존의 청소년안전망이 주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계하는 시설 및 기관이 제한적이기에,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탈 시설화이다. 경남지역은 창원시와 같이 인구 규모가 100만 이상인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규모가 10만 명 내외의 중소도시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점이 되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심이 되는 경남지역에 적합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해 지역에 처음 이 사업이 가장 우리가 하기에 적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기관이 어떤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 공고 요강만 보았을 때 저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해 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저희가 크건 작건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기에, 그것은 마을학교라는 저희 나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자원들을 조금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원 파악이 필요했고, 이걸 왜 해야 하나고 했을 때 지역 청소년과 관련해서 진해에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련관 2개 문화의집 개 야영장 1개 상담센터 1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고 지역 안에서 상당히 청소년 사업들에 관심 있는 자생단체도 있는데 분절적으로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죠. 처음 이것을 하게 되는 동기나 배경은 그런 거였고.”(참여자 1)

“첨언하자면 제가 상담복지센터에서 93년부터 있었을 적에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괜찮았거든요. 처음 시범사업 했을 때 전문직 봉사자라고 해서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하나를 솔루션하는 형태를 2년 하다가 이제 확대가 되어서 CYS-Net으로 발전했어요. 그것의 사업 담당자로서 5년을 제가 하다 보니 지역사회 내의 여러 자원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발굴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활동진흥센터가 출범할 때 제가 활동진흥센터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했죠. 그런데 활동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사업밖에 없는 거죠. 프로그램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성과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4~5년 전에 수련관이 시설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지역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시설 안으로 오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 지역사회가 우리인데,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수련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물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사업을 딱 보고 이걸 가지고 활동 쪽에서도 청소년들을 온전히 만들어줄 체계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 같이 깊은 공감을 했죠.(중략)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아니라 성장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개념이라고 저희도 이야기했던 중에 이 사업을 접하게 되어서 사업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시작한 거죠.”(참여자 2)

② 사업추진 전, 후의 상황 변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 추진 전과 추진 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내 자원 네트워킹의 확대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창원마을학교사업에서는 학교와 관공서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면, 성장지원 모델사업 이후에는 지역 내, 외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장학재단,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이 하면서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는 주민들이 협의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e음연구회를 중심으로 진로 박람회, 나눔 바자회 등과 같은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동의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막연했어요. 각각의 어려움을 꺼내놓고 시작했고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했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쪽 지원 건이 있었는데, 이 사례를 어떻게 지원할까 했을 때, 해결책을 어느 복지관에서 제시했는데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다 결합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막연했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참여자 1)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위원장님 센터장님과 의논했는데 반응이 다 달랐어요. 저희는 거버넌스를 추구하려 해서 관공서를 어떻게든 넣었어요. 보건소, 소방본부 넣었는데 그쪽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공서도 넣고 학교도 넣었어요. 단체도 넣고 기관도 넣고 했는데, 지자체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그건 너네 사업이라고 하며 선을 그었어요.. (중략)... 질문하셨던 지역주민의 참여 부분의 확장성은, 저는 가능하겠다고 보는 게 작년엔 저희가 마을에서 진로박람회, 나눔 바자회 활동들을 e음과 마을학교와 참여예산제로 한 거거든요.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기획 자체는 수련관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과 지역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또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산은 끝났어요. 이렇게 연대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되었죠. 여기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의 열성 멤버들이 남아있기에 당연히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그걸 통해 저희가 가능성은 봤어요. 예산만 조금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참여자 3)

③ 주요 추진 체제와 역할

진해청소년수련관의 경우 e음 협의체가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초기에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발굴, 연계 그리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워크숍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협의체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가 기후환경문제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중책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고려하여, 진해만 등을 활용한 기후환경사업을 기획하고,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SDGs’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과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일단 기관, 단체 사람들을 모을 때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모여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역량도 있지만 긍정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그게 큰 시너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참여자 4)

“저희들의 장점 중 하나가 민간 주도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내가 이걸 맞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극명할 거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걸 만들어내는 담당자의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고성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고성이라는 자원은 인구 5만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도 왜 그걸 해봤으면 했느냐하면 오히려 기관이 작은 곳일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죠. 진해수련관에서 했던 것 중 광고의 개념, 정책에서는 광고를 잘해야 하는데 작은 도시에서는 이 광고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기관의 수라든지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2)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련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렇구나 하고 듣다가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게 됐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지원이 다 끝났는데 지원단에서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학재단에서는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니 000교수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 리더십센터에서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본인들이 가진 자원들을 적재적소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듣고만 있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내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더 크게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죠.”(참여자 4)

“처음에는 모야모야 아동 한 명 때문에 연결된 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는 네 명의 아이가 연결돼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니 종교적인 걸 떠나서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사실 연결해주는 성당 안에서도 담당자분들과도 네트워킹이 되고 그만두시면 그 다음 담당자가 또 연결시켜줘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학금이 센터로 월세 빼고 40만원이 들어오니 엄청나죠. 장애인활동도우미 비용까지. 다섯 케이스가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거니 그 가정들이 e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참여자 5)

“협의체가 아주 중심이죠. 여기에서의 아젠다를 수행하는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같이 하지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확산성 있게, 원래 e음연구회가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전 지역 쪽으로 확대하고 확산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이 양성이 돼야겠다고 해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아젠다가 발굴이 된다면 또 연구회에 의뢰를 해서 한번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원래 같은 경우도 아까

계속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걸 개발할 경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척도도 해서, 제대로 효과를 사전사후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협의체가 중심이고, 여기에서 아젠다가 나오면 그때그때 아젠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에 e음연구회는 더불어서 공생하는 조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

④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해청소년수련관도 타 지역과 유사하게 지자체와 학교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지원 모델사업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객체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학교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e음 연구회에서 양성한 마을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도 학교를 개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을교사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e음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의체는 어디까지나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사업의 실행은 참여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업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요구되며, 각 기관의 사업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사업 내용 및 대상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기후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 세대 간 소통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관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자체 연계해서 늘 잘 안 된다는 게 활동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야기죠. 지자체와 협업이 너무 안 된다. 그런데 중간에 잠시 협업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결국 행정의 담당 계장님의 마인드. 그런 분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참여자 1)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진해는 특히 바다, 산, 들이 다 있으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각각 분절돼서 사업했던 걸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방향이 있으니, 목적에 맞게..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일은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e음 수준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고 의논만 되면 어떤 일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속성이라고 봅니다.”(참여자 4)

“제가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면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구조를 다 잡았어요. 중점사업 위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 한대로 갈 수 있는 데를 승인받는 형태, 그 속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담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형태로 갔었다면, 저희가 미션, 비전, 중점과제, 실행추진체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협의체에서 비전을 우리 지역의 성장지원과 관련해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걸 7월에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따라 저는 단위 사업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젠다가 나올 수 있고, 각자 역할을 하다 보면 청소년 성장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체계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도적 근거.. 이걸 1차 년도부터 생각했기에 당연히 협의회의 시 의원님을 세 분이나 위원으로 넣은 이유가 제도적 근거가 필요해서 넣은 거거든요. 아직은 안됐지만 거의 마무리됐고 처음에는 의원님과 정말 급하게 했어요. 만나고 수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다가 행정에서 걸고넘어져서 얹어졌어요. 이걸 아닌 것 같다 해서 잠시 덮어두었다가 다시 꺼내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더 천천히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과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고요. 제도적 근거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지만, 법적 근거가 되면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민간 단위에서 남은 진짜 멤버들이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거고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아젠다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협의회가 굴러가면서 조금씩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세대 통합 이야기인데 작년에 성공 경험은 있지만 예산 때문에 중단됐던 주민자치회와 함께할 수 있는 것, 또는 마을학교라는 거대한 자원과 e음과 연결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예산의 문제죠. 구슬은 서 말인데 꿰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발전하려면 있어야 해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시설장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있어야 해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인식이지요. 청소년수련권이 변화되어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지도자의 역량은 교육해서 되겠나 하지만 작은 경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

“예산 비율을 보면 국가에서 법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지자체에서 안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 매칭으로 하려면 시도 간의 격차가 너무 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에서 이걸 청소년의 법으로 만들 때 근거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게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런 근거 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맨땅에서 하다 보니 설득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줄일 수도 있는 게 국가의 책임이니, 그게 필요해 보여요.”(참여자 2)

⑤ 타 유사사업과의 향후 관계설정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아젠다 설정 과정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기후생태환경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주제들을 설정하는데 협력적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경남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향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화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이 청소년수련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성장 지원 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지도자 역량 강화, 지자체 정책 방향의 이해 그리고 참여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과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재단의 개념보다는 활동센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실제로 진흥센터 역할이 국가정책 전달체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전달체계를 하려면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흥센터에서 한다는 게 틀이니까.. 저희들도 더 빨리 나서게 된 게 이걸 국가사업으로 맞췄다 싶어서 더 같이 했던 거죠. 우리가 근거가 없어도 그냥 성장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이걸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하는데 이걸 부모 역할로 내버려두거나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내버려둔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걸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보니 지자체나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더 실행을 잘 할까의 문제로 우리의 역할을 좀 더 잘해야 하는 것 같고요. 활동진흥센터 역할은 지도자 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수련관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거고 했던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계속 전파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정리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참여자 2)

⑥ 주민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성장지원 사업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사업의 성격상 제한된 기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 때문에 주민의 이해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하에, 향후 지자체 및 교육 당국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방향 및 과제 설정 시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 있게 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이 괜찮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가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 사업에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주민들이나 기관의 참여율이 높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3-5년짜리 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중앙에서 법적인 근거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성장지원 사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줄만 있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근거를 찾는 거지 돈을 많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를 만들어주면 돼요....”(참여자 2)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적극적이예요. 적극적인 공무원과 적극적인 청소년 수련관이 만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참여자 1)

“결과물이 곧 홍보고 그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 게 선순환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음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돈 끊어질 거라고 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급하게 했구나....올해 천천히 e음과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지역사회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참여자 2)

⑦ 제도적인 보완

청소년수련관은 e음 협의체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을 구성원으로 참여 시킴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 때 지역구 의원을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 진해청소년수련관은 2021년 시의회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2022년 창원시장의 교체 및 시의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조례에 관한 내용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의회에 상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에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경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들은 근거 만드는 활동들을 시작할거라 청소년 활동 조례 안에서 추진체계에서 향후사업에 대해 성장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참여자 2)

“네. 앞부분과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한다. 계속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의원 중 발의자는 아마 000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실 건데, 이게 세팅이 되면 다른 경제복지 의원님들, 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나 설명 드리고 공동발의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참여자 1)

⑧ 사업 만족 수준과 지속추진 의지

진해청소년수련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원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 학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이해가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e음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은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조례 제정, 참여예산제,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을학교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게 2016년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을학교교사 한 번 해보시겠냐고 찾아가서 요청 드리고, 선생님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요청하고 그랬죠. 지금은 여좌동이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인데 팀들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마을의 모든 사업에 같이 결합하고 주체적으로 해내고 있죠. 마을학교가 지금 100개정도 가죠? 그 이상 가는데 학교들도 마을학교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마을학교교사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참여하신 분들은 마을학교 선생님뿐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지역과 같이 참여한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마을교사 중 한 분은 내가 이 나이에 아이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하세요.”(참여자 4)

“우리 사업의 핵심은 물론 지역의 어른들이 나서는 거지만 실제로 핵심은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방향성이나 자기들만의 아젠다가 반영이 안 되면 되겠느냐는 거죠.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고 아쉬운데 이걸 공식적으로 수련관 안의 조직으로서 청소년마을의회라든지 다른 형태로 청소년들을 모집 해서 그들이 같이 여기서 아젠다를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군 지역으로 갈수록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식이 다르겠지만 촌에는 돈도 없는데 그 좁은 공간에 청소년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전체가 가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거기에서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같은 사업이 핵심으로 들어올 경우 모두가 쓰는 공간이구나 공감 받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그거라고 봅니다. 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공간이 아니고 전체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야 성공할 거 같다고 봅니다.”(참여자 2)

(4) 시사점

진해청소년수련관의 특징으로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아젠다 설정, 협의체 참여기관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마을 교사 양성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기후환경 문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아젠다를 사업의 주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 주로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협의체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학교 교사 양성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e음 연구회’와 같은 자율모임을 조직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모델 사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정책 방향 및 지역사회의 주요관심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과제 설정 단계에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기후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진해구는 해군 부대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배후지와 진해만의 생태 복원 문제 등이 지역주민의 관심사란 점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에게 진해구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에 관해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둘째, e음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동사업 진행 등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협의체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단순히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구성원 간 수평적 연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해를 위해서는 대학이, 위기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종교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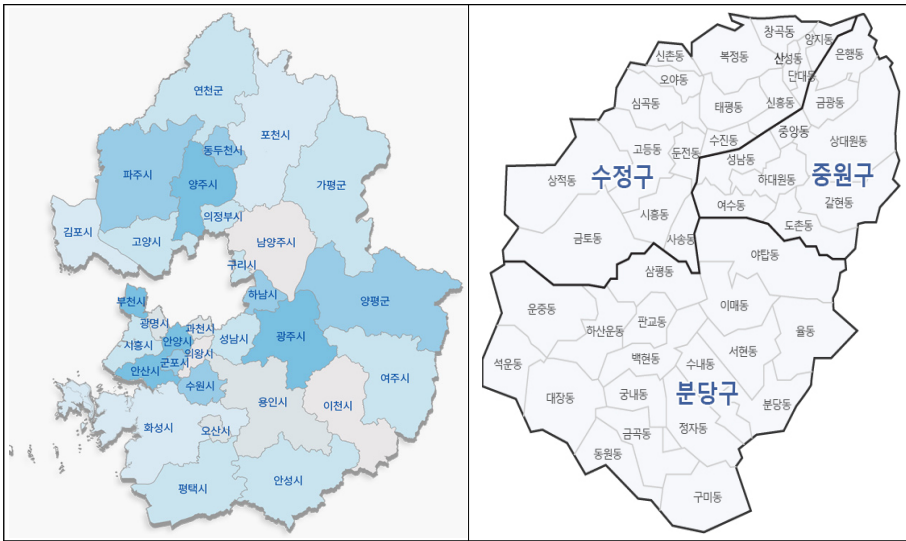
셋째, 마을교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창원시 청소년마을학교사업(초기에는 사업 명칭이 덕산마을학교)에서 마을학교 교사 양성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서 ‘e음 연구회’ 라고 하는 연구모임 이자 교사양성모임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주민들에게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물을 홍보하기도 한다. 아울러, 자체 사업 및 학교와의 연계사업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진해청소년수련관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종료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지방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조례와 같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제도화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 경기도 성남시

(1) 지역현황(도시성장 및 변천사, 인구변화 등)

성남시는 서울시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1989년 1월 1일 분당구가 신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922,518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성남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성남시에 소재한 주요 대학은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서대학교, 신구대학교이다. 주요 문화시설로는 성남아트센터, 성남시립박물관, 성남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성남시는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 가운데 하나로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등과 같은 IT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ldx=470&menuId=1834>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성남시청 홈페이지지도.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13/10010/contents.do>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그림 IV-14. 경기도 및 성남시 행정구역도

한편,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성남시에 분당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구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분당구는 서울과 인접한 곳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편이다.

성남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문제를 분석한 유종성 외(2022)에서도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간의 소득 격차가 크며, 특히 중원구는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원구의 소득수준은 경기도 및 전국 평균에서도 미치는 상태이며, 성남시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중요한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IV-9. 성남시 청소년인구(9~24세) 현황

(기준일 : 2022.6.)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2011	42,371	50,453	111,585
2012	41,258	48,900	110,323
2013	39,446	48,248	108,317
2014	37,780	45,980	105,906
2015	36,392	44,209	103,578
2016	38,267	40,570	101,401
2017	37,688	38,031	98,269
2018	35,929	35,691	95,281
2019	34,955	33,557	91,975
2020	34,861	31,445	89,470
2021	33,078	29,591	88,223
2022	32,369	28,633	87,06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 p. 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V-10. 성남시내 학교, 청소년기관 및 자원 현황

(기준일: 2002년 6월)

학교별	학교수	지역구	복지관		아동						청소년				
			종합	다목적	상담소	보호전문	지역센터	돌봄센터	공동생활	기타시설	수련관	학교밖센터	쉼터	자립지원관	기타시설
초등학교	73	수정구	2	8	1	23	6	1			4	1	2		1
중학교	46														
고등학교	36	중원구	3	11		18	10	11			2	1	3	2	1
각종학교	1(계원여중)														
대안학교	1(하늘꿈중고)														
외국인학교	2	분당구	5	1		11	5	1	1		4				
특수학교	2														
계	161	3개구	10	20	1	52	21	13	1	10	2	5	2	2	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 p. 2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지역 내 정책사업의 현황과 변화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속적인 청소년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의 채널을 확보하여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하였다. 설립목적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 다양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 및 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 설립되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정책 및 제도 개발, 청소년 활동과 보호,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수탁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재단의 제반 역량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같은 해 11월에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사업의 추진기관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설립하고, 2015년 운영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게 되었다.³⁶⁾ 2023년 사업 명칭을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성남형교육’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성남미래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교육 분야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운영기관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속의 미래교육실로 개편하였다.

36) 출처: 성남미래교육 홈페이지. <https://snedu.seongnam.go.kr/mobile/edu/sub01.asp>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 출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2023). 2023 미래교육협력지구 성남미래교육[SFE여:숨에듀][https://snedu.seongnam.go.kr/download/2023%20%EC%84%B1%EB%82%A8%EB%AF%B8%EB%9E%98%EA%B5%90%EC%9C%A1%20%EA%B8%B8%EB%9D%BC%EC%9E%A1%EC%9D%B4\(%EC%97%85%EB%AC%B4%EC%9E%90%EC%9A%A9\).pdf](https://snedu.seongnam.go.kr/download/2023%20%EC%84%B1%EB%82%A8%EB%AF%B8%EB%9E%98%EA%B5%90%EC%9C%A1%20%EA%B8%B8%EB%9D%BC%EC%9E%A1%EC%9D%B4(%EC%97%85%EB%AC%B4%EC%9E%90%EC%9A%A9).pdf)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그림 IV-16. 성남미래교육협력지구 성남미래교육 비전 및 추진목표

(3) 인터뷰 분석 결과

① 사업추진배경 및 동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성남시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시는 분당구와 같은 신도심과 수정구, 중원구와 같은 구도심간에 교육, 문화 인프라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성남시에는 IT 관련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기에, 이들 기업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을 통해 컴퓨터 등을 후원받아 구도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성남이라는 곳의 특성을 보시면 분당구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실 분당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 수준이 워낙 높아서 그 친구들은 학부모들이 끌고 가는 대로 성장이 되지만, 사실 구시가지인 청소년수련관 근처만 보아도 한 부모 가정도 많고 부모님도 없이 조손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저희도 균형동반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기관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방문하게 된 계기는 판교에 IT업체가 많다 보니 저희가 연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품지원을 받아 지원을 해줘보자 했어요. 막상 방문하고 보니 너무 놀랐어요. 주차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아이들 7-8명을 선생님 한 분이 다 케어하고 있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잠재적 사고율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조차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지역을 좀 기피한다고도 들어있어요.”(참여자 1)

② 사업추진 전, 후의 상황 변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재단의 인식변화와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균형성장협의체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7년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정식 출범하였다. 2008년 중원청소년수련관을 필두로 하여, 2009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 2010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개관 등 매년 청소년수련시설을 늘려나가 2023년 7월 현재, 청소년수련관 6개소(휴지중인 수정청소년수련관 포함),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그리고 미래

교육협력지구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실 등 구성되어 있다.³⁸⁾ 재단 출범 초기에는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재단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었는데,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 관련 기관의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의 연계에서 성장의 연계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재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참여 이전에는 재단은 소속 시설 및 기관의 고유 사업에 집중하였다면, 사업 참여 이후 지역 내 타 기관 및 민간자원 등과의 네트워킹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균형동반협의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관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위한 상호 이해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청소년재단이 출범을 했을 때 지역에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많이 견제했어요. 재단이 출범하기 전, 청소년시설은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었고, 시의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다 보면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니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마을이 멘토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래도 가우뚱거리는 부분은 있었죠.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유한 공공 자원들을 공유하고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저희 재단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청소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굉장히 호평을 주었죠.”(참여자 2)

“사업적으로는 우선 균형동반협의체 기관별로 만족도가 커졌어요. 공모사업과 별도로 재단 사업인 ‘마을은 멘토다’는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고, 균형동반협의체는 성남에 있는 작은 기관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둘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할까 하는, 그런 장을 만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안전에서 무거운 안전까지 나오게 됐죠. 두 번째 해에 실행했던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였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저희에게 홍보를 부탁하시며 학교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 그게 안내가 되면 모든 학부모들이 그걸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죠. 저희가 연말에 시장님과 지역의 유관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동안 안전 나온 것을 두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시의 간부 회의에 그 의견을 내신 거예요. 담당 집행부서에 ‘학교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하셔서 그다음에 기관이 같이 실무협의체 참여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게 학교시스템 앱에 같이 들어가서 저희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여태 무언가가 실현되는 걸 못 봤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참여자 1)

38)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snyouth.or.kr/fmcs/266>에서 2023년 7월 24일 인출.

③ 주요 추진체제와 역할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지역 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균형동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은 재단 대외협력팀이 수행하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 기존의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회'의 역할을 하고 협의체는 '건의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협의체는 균형동반협의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정책 및 사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건을 제안하면, 균형동반협의회는 제안된 안건을 검토하여 정책화 및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균형동반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 그리고 사업화하는 소위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 협의체를 대외협력팀에서 맡아 진행을 했어요. 대외협력이라 판교 IT 기업과 연계하며 사업 진행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쉽게 뚫리더라고요. 저희가 관내의 기업을 찾아가서 소개하고 성남에 이런 청소년기관들이 있다, 너무 힘들다는 것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그분들도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걸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브릿지 역할을 한 거죠. IT기업은 컴퓨터를 2~3년밖에 안 쓰신대요. 너무나 기능이 좋은 거다 보니 직원 매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재단에 기부해주시기 어떻겠냐 하니 카카오페임즈에서 첫째 미팅 후 거의 40대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신 후 기부하셨고 재단은 연계하고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에 다 제공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더불어 NHN에서도 업무용 PC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참여자 1)

④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협의체에 카카오페임즈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초기에 이들 민간 기업을 섭외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시 출연기관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민간 기업을 섭외하는데 용이한 측면도 있었으나, 그런데도 대외협력팀이 무작위로 기업을 컨택하여 섭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있어 민간 기업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외에 지자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들의 청소년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간 기업 임원을 협의체 구성으로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이들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남시청소년재단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소속되어 있으나, 본부가 성장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재단 내에 활용 가능한 상당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재단이 끌고 간다면 성남의 청소년의 대표성을 띤 재단이기에 때문에 기업 미팅을 하기 굉장히 수월하기는 해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에 연락할 때 그냥 저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기업에 그냥 전화를 합니다. 찾아가기도 해요. 방법이 없어서요. 공문을 보내 봐도 기업의 담당 과까지 전달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뚫고 들어가요. 또는 인맥을 활용하죠. 그러면서 사업이 좀 퍼지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키프에서도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사업 제안서를 여러 번 만들어가서 협의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성이 생기고, 사업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결정되기까지 힘든 상황이에요, 처음 미팅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기업 미팅을 가면 오히려 재단보다는 재단이 연계되지 않은 어려운 기관에 직접 주고 싶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IT 기업들을 만나며 생각을 한 것이 IT기업도 이런 현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알아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하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협의체에 기업 대표를 모시자해서 카카오키프 부사장님을 모셔왔어요. 시장님과 기업체 대표와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청소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협약체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전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장님, 대표님들이 오셔서 서로 거기서만 네트워크가 일어나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결과가 풍성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참여자 1)

⑤ 타 유사사업과의 향후 관계설정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에서 유사 사업과의 연계보다는 독자적인 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성남시청소년재단 미래교육실을 중심으로 나름 체제를 갖추고 있고, 성과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이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자원은 교육경비 사업 자체가 엄청 많아요. 시 자체에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속의 미래교육실을 통해 학교에서 필요한 미래역량교육이

라든지 신체활동에 대한 수요 파악 후 다음 해에 신청했던 학교에 매칭을 해줘요. 학교는 무료로 참가해요. 저희 시에서 강사, 학습현장 셔틀버스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수련시설에서 학교 연계사업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서는 어렵겠지만 성남에서는 안 어렵죠.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학교연계 부분은 작동이 잘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에는 학교와의 관계 부분을 과업으로 넣지 않았어요.”(참여자 2)

“일단은 저희가 유수히 많은 기업장들, 지역의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자원 지도(map)를 구축하고... 작동이 되지 않은 각각의 작은 단위를 취합하는 게 과업의 1순위로 목표라, 학교연계에 대한 건 사실..”(참여자 2)

⑥ 주민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마을이 멘토다’라는 시민주도형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독려, 촉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여 202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으로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빅터(BIGTA)’를 들 수 있다. 빅데이터에는 성남시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어 청소년과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성남 청소년·청년 데이터를 한눈에 보자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BIGTA는
성남시 청소년·청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소년과 모든 성남시민이 정보에 편antly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snyouthbigta.imweb.me/>에서 2023년 7월 24일 인출.

그림 IV-17. 성남시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BIGTA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게 균형동반협업체 안건이 나왔을 때 그 제안을 차년도 ‘마을이 멘토다’에 연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이멘토다 사업은 1억 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운영하는데 균형동반협업체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마을이 멘토다’ 사업에 확장해 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풀어나가면 마을이 멘토다도 지역사회 네트워킹이라,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참여자 1)

“저희가 지금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나오는 빅터가 있고 연구보고서나 지역의 자원을 모아서 공유하는 위드 밸런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통합하며 탑재했고 예산도 그 안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보기에 따로 보는 건 불편하잖아요.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2)

⑦ 제도적인 보완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사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마도 2022년 신임 시장님 취임 이후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마음이 멘토다’는 재단의 지속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제도의 발굴과 실행력은 지속해서 유지하고 보완해 갈 것으로 여겨진다.

“(질문: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없나요?) 저희가 노력한 건 지침을 마련했고..., 작년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제안 식으로 해서 제안서 전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역사회 성장지원 모델 시범 사업보다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다양한 안건과 애로점을 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모사업에서 하고자 했던 기능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2)

⑧ 사업 만족 수준과 지속추진의지

2023년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실을 중심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미래교육을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사업에서는 재단 내 시설, 즉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재단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실은 차 년도 공교육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을 각 수련관에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고 있어요. 이를 통해, 수련관은 앞으로 청소년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관련 신규 사업을 학교에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참여자 2)

(4) 시사점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특징으로는 지역 내 민간 자원의 적극적 활용,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그리고 재단 내 자원 간 협업의 필요성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관공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성남시재단의 경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멘토다’ 등과 같이 공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실도 재단 본부에 위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구조이다. 특히, 미래교육실이 학교와 기관, 청소년 관련 시설과 마을 자원을 서로 연계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모델 사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구, 수정구 지역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기업과 같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에는 다수의 IT 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이들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NHN, 카카오게임즈 등과 같은 IT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물품 기부를 받기도 하고,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인적, 물적 자원 정보를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공개, 공유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빅터(BIGTA)라고 하는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남시 청소년 관련 현황자료와 청소년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제5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적·질적 조사

- 1. 조사 개요
- 2. 양적 조사 결과
- 3. 질적 조사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과 과제 도출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했던 사업에 관한 조사와 분석하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설문 조사와 FGI를 통해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 네트워크 사업의 구조적, 기능적,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것과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와 FGI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는 청소년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회(1차: 설문조사, 2차: FGI)에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는 FGI(성인: 대면 방식/청소년: 비대면 방식)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렴된 내용에 대해 조사 결과 이면에 담긴 보다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9) 이 조사는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음(승인번호 202307-HR-고유-018).

40) 이 장의 1, 3절 집필과 설문지 개발 및 조사 총괄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하였고, 조사 진행은 서던포스트가 하였음. 2, 4절은 최인재, 임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함.

표집 방법은 시범사업 지역의 사업 담당자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성인, 93명, 청소년 30명 등 총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FGI의 경우는 성인 6명,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도구는 양적 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진행하였고, FGI는 설문지 내용을 기초로 일부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상 일부 내용은 생략하거나 반대로 보충되는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FGI의 경우 성인은 대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청소년은 이동의 어려움과 학습 등의 상황으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3년 7~8월 중순까지 설문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고, 8월 중순~9월 초순까지 FGI를 실시하였다.

표 V-1.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 대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청소년
조사대상자 수	설문조사 123명(성인, 93명, 청소년 30명) / FGI 성인 6명, 청소년 5명
표집 방법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유의 표집)
자료수집 도구	양적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 FGI 양적 설문지를 기초로 일부 변형
조사 방법	양적조사: 온라인 조사 / FGI 성인-대면조사, 청소년-비대면조사

표 V-2. 설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23)	100.0
응답자 구분	성인	(93)	75.6
	청소년	(30)	24.4
성별	남성	(41)	33.3
	여성	(82)	66.7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28)	22.8
	1년 초과 3년 미만	(48)	39.0
	3년 이상	(47)	38.2
거주 지역	시	(50)	40.7
	군	(39)	31.7
	구	(34)	27.6
소속 유형	행정/공공기관	(45)	48.4
	민간 기관	(43)	46.2
	기타	(5)	5.4

표 V-3. FGI 대상자

지역	구분	소속	직위
성인(전문가)	참여자 1	00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자 2	00대학교	교수
	참여자 3	00수련관	관장
	참여자 4	00센터	센터장
	참여자 5	00수련관	팀장
	참여자 6	00수련관	부장
청소년	참여자 1	00수련관	-
	참여자 2	00수련관	-
	참여자 3	00군청	-
	참여자 4	00수련관	-
	참여자 5	00수련관	-

3) 조사 내용

설문지는 먼저 시범사업 지역 담당자 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 이론적 배경 검토 등을 통해 설문지 구성의 전체적인 틀과 구성요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를 구성하는 문항 내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에 대해서는 2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 구성 체계를 보면, 성인 질문지의 경우 크게 5개의 대영역과 9개의 세부 영역 및 하위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청소년 질문지는 7개의 대영역과 10개의 세부 영역 및 하위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대영역은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기능적, 제도적 측면과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 설문 내용의 이해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성인 질문지에서 일부 세부 영역과 문항들을 제외하였고, 추가로 사업 참여 만족도, 사업 과정에 관한 인식 정도, 사업 참여 후의 변화 등에 대해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문지 응답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에 대한 소개 부분을 제시하였고, 일부 전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용어의 뜻을 제시하였다.

FGI 질문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질문 문항을 제외하거나 보충 질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정책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V-4. 설문지 구성 체계 및 내용⁴¹⁾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네트워크 사업 현황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업 진행 이전/사업 진행 이후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네트워크의 유형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주도 운영 주체 관(官) 주도/민(民)주도/민관(民官) 공동 주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초기 및 중장기 형태
	네트워크의 범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의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 운영 형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에 따른 각 항목 주제별 효과성의 정도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각 운영 방식에 따른 중요성의 정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각 역할에 따른 중요성의 정도
네트워크의 제도적 측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의 정도
	관련 제도 재가정의 필요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필요성의 정도
네트워크 사업 참여 만족도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
네트워크 사업 과정 인식	네트워크 사업 참여 과정에 관한 인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업 운영 과정에 관한 인식 정도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변화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따른 인지, 심리, 사회적 변화 경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경험하게 된 인지,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 정도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항목별 중요성의 정도

41)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은 청소년에게는 제외된 질문이며, 기울임 부분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임. 이 외의 문항들은 성인 및 청소년 공통 질문임.

표 V-5. FGI 질문 구성 체계 및 내용⁴²⁾

대영역	세부 영역	면접 질문 내용
네트워크 사업 현황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진행 이전/사업 진행 이후)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네트워크의 유형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주도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官) 주도/민(民)주도/민관(民官) 공동 주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초기 및 중장기 네트워크 형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의 범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의 단위는 어떤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의 효과성 및 운영 형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방식에 따른 중요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각 역할에 따른 중요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의 제도적 측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제도 제·개정 필요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필요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사업 참여 만족도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사업 과정 인식	네트워크 사업 참여 과정에 관한 인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업 운영 과정에 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합니까?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변화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따른 인지, 심리, 사회적 변화 경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경험하게 된 인지,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은 청소년에게는 제외된 질문이며, 기울임 부분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임. 이 외의 문항들은 성인 및 청소년 공통 질문임.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질문 문항을 제외하거나 보충 질문을 진행하였음.

2. 양적 조사 결과

1)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 사업추진 전/후

1)-1.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 사업추진 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7%,
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3%로 나타남.**

현재 각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사업추진 전과 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사업추진 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추진 활성화 정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7%로 나타났지만, 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3%로 나타났다(보통 52.0%).

응답자 구분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20.4%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23.7%로 긍정/부정 응답 비율에 대한 차이가 3.3%p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3%,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4.3% → 3년 이상 21.3%),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2.9% → 3년 이상 25.5%).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0%로 나타났다. 반면, 군지역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시나 구 지역보다 높았다. 그리고 소속별로는 행정/공공기관 소속(20.0%)보다는 민간 기관에 소속된 응답자(30.2%)들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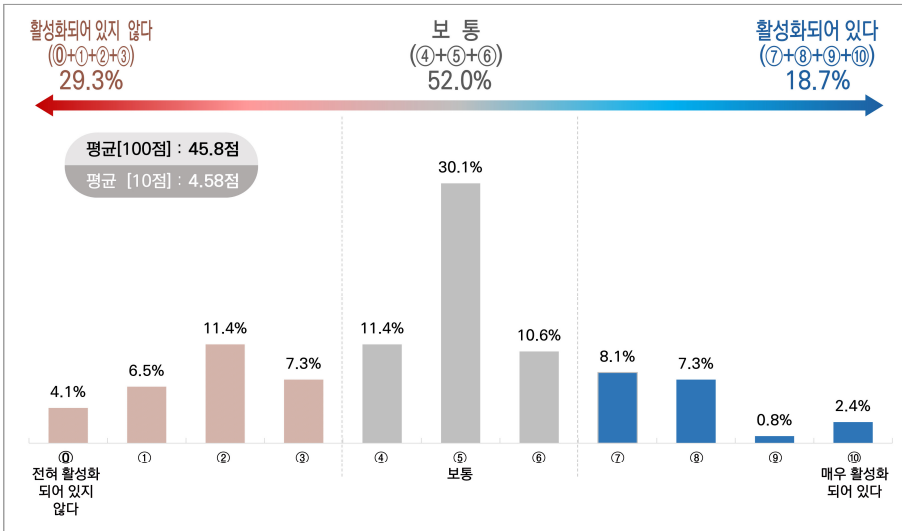


그림 V-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전체 기준) - 사업추진 전

표 V-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전

(단위 : %, 점)

		사례수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①+②+③+④)	보통 (⑤+⑥)	활성화 되어 있다 (⑦+⑧+⑨+⑩)	평균 [10점]	평균 [100점]
전 체		(123)	29.3	52.0	18.7	4.58	45.8
응답자 구분	성인	(93)	23.7	55.9	20.4	4.82	48.2
	청소년	(30)	46.7	40.0	13.3	3.83	38.3
성별	남성	(41)	26.8	46.3	26.8	4.83	48.3
	여성	(82)	30.5	54.9	14.6	4.45	44.5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42.9	42.9	14.3	3.93	39.3
	1년 초과 3년 미만	(48)	25.0	56.3	18.8	4.60	46.0
	3년 이상	(47)	25.5	53.2	21.3	4.94	49.4
거주지역	시	(50)	22.0	54.0	24.0	4.94	49.4
	군	(39)	38.5	51.3	10.3	4.10	41.0
	구	(34)	29.4	50.0	20.6	4.59	45.9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20.0	57.8	22.2	5.04	50.4
	민간기관	(43)	30.2	53.5	16.3	4.47	44.7
	기타	(5)	0.0	60.0	40.0	5.80	58.0

1)-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 사업추진 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1.5%,
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나타남.**

앞의 질문에 이어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사업추진 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추진 활성화 정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나타났다. 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나타났다(보통 25.2%)(그림 V-2) 참조).

응답자 구분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76.3%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2.2%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56.7%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나 성인보다 긍정 응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 청소년 모두 사업추진 전보다 사업추진 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64.3% → 3년 이상 78.7%).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79.4%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2.9%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시’,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 66.0%, 71.8%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각 2.0%, 5.1%)라는 응답 비율과의 차이가 ‘구’ 거주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속별로는 사업추진 후 활성화되어 있다는 응답은 행정/공공기관(71.1%) 보다는 민간 기관(83.7%)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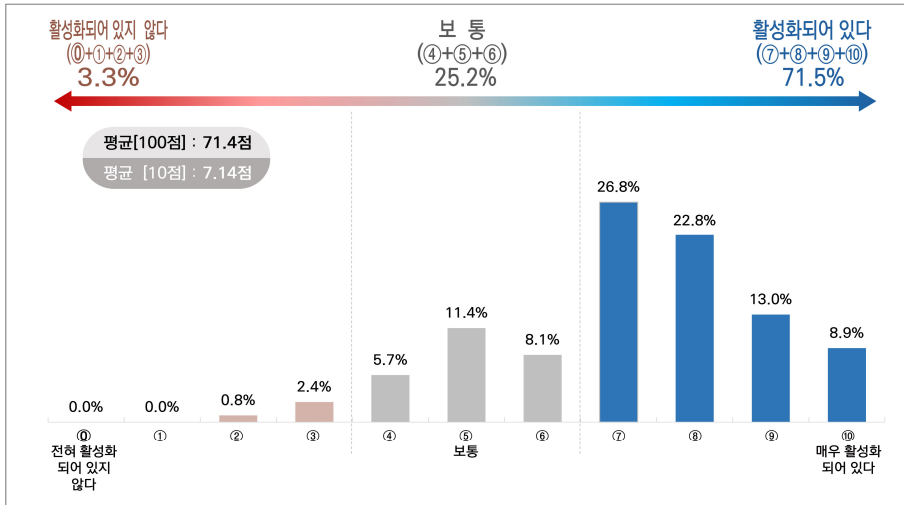


그림 V-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후

표 V-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정도 인식 - 사업추진 후

		사례수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①+①+②+ ③)	보통 (④+⑤+⑥)	활성화 되어 있다 (⑦+⑧+⑨+ ⑩)	평균 [10점]	평균 [100점]
전 체		(123)	3.3	25.2	71.5	7.14	71.4
응답자 구분	성인	(93)	2.2	21.5	76.3	7.38	73.8
	청소년	(30)	6.7	36.7	56.7	6.40	64.0
성별	남성	(41)	0.0	9.8	90.2	8.02	80.2
	여성	(82)	4.9	32.9	62.2	6.70	67.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3.6	32.1	64.3	6.79	67.9
	1년 초과 3년 미만	(48)	4.2	27.1	68.8	6.85	68.5
	3년 이상	(47)	2.1	19.1	78.7	7.64	76.4
거주지역	시	(50)	2.0	32.0	66.0	7.26	72.6
	군	(39)	5.1	23.1	71.8	6.77	67.7
	구	(34)	2.9	17.6	79.4	7.38	73.8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0.0	28.9	71.1	7.09	70.9
	민간기관	(43)	2.3	14.0	83.7	7.74	77.4
	기타	(5)	20.0	20.0	60.0	6.80	68.0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민관 공동 주도(63.4%), 관(공공기관) 주도(21.1%), 민 주도(15.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의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영 주체에 대해 '민관(民官)이 공동 주도'⁴³⁾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관(官)(혹은 공공)'(21.1%), '민(民)'(15.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 공동 주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6%로 청소년 응답자의 응답(56.7%)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청소년 응답자는 30.0%로 나타나 성인 응답자의 응답(18.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관(民官) 공동 주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50.0% → 3년 이상 72.3%), '민(民)'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7.9% → 3년 이상 8.5%).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민관(民官) 공동 주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68.0%이었으며, 이는 '군',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응답 비율(각 59.0%, 61.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공공기관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 공동 주도'가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민간 기관의 응답 비율(5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 기관의 경우 '민(民)'이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7.9%로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응답 비율(4.4%)보다 높게 나타났다.

43) 관(官): 본 설문지에서는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과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및 교육재단 혹은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 관련 기관, 지역사회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각종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민(民): 지역사회 각종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체 및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민간을 포함.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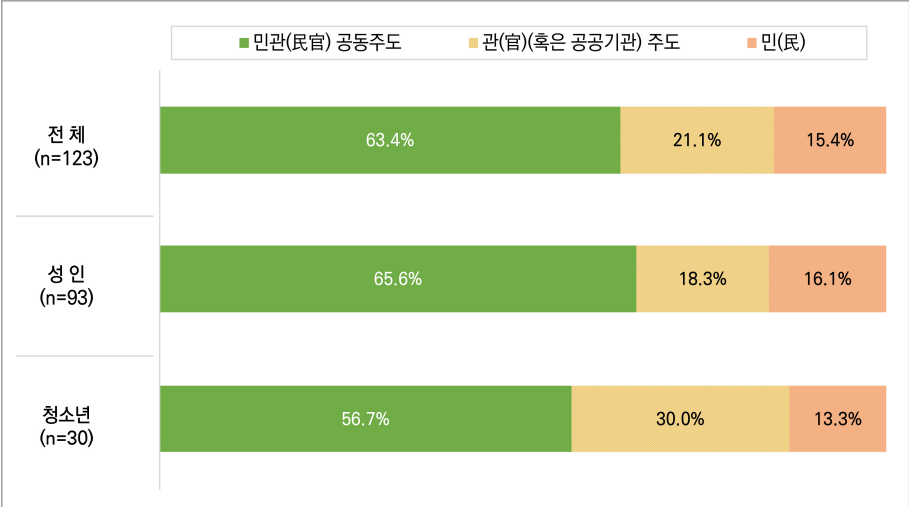


그림 V-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표 V-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단위 : %)

		사례수	민관(民官) 공동주도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	민(民)
전체		(123)	63.4	21.1	15.4
응답자 구분	성인	(93)	65.6	18.3	16.1
	청소년	(30)	56.7	30.0	13.3
성별	남성	(41)	63.4	14.6	22.0
	여성	(82)	63.4	24.4	12.2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50.0	32.1	17.9
	1년 초과 3년 미만	(48)	62.5	16.7	20.8
	3년 이상	(47)	72.3	19.1	8.5
거주지역	시	(50)	68.0	12.0	20.0
	군	(39)	59.0	33.3	7.7
	구	(34)	61.8	20.6	17.6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77.8	17.8	4.4
	민간기관	(43)	53.5	18.6	27.9
	기타	(5)	60.0	20.0	20.0

2)-1.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관(官) 주도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46.2%), ‘교육(지원)청’(15.4%),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15.4%)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도 기관으로 관(官)을 선택한 응답자(n=26)들을 대상으로 관(官)(혹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 주제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지원)청’(15.4%),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15.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58.8%),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17.6%),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 관련 기관, 지자체(지자체 설립 재단 포함)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센터⁴⁴⁾(5.9%) 교육(지원)청(0.0%), 지자체 설립 교육재단(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응답자는 ‘교육(지원)청’(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22.2%),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11.1%),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 협력센터(11.1%), 지자체 설립 교육재단(11.1%),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 관련 기관(0.0%)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응답자의 경우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58.8%), 청소년 응답자는 ‘교육(지원)청’(44.4%)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유형별로 주도 운영기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각 53.8%, 57.1%),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응답 비율이 1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공공기관, 민간 기관 모두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62.5%,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4) 현재 지역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미래(행복)교육지원센터(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사용됨)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BASE: '관(官) 주도의 경우' 응답자, n=26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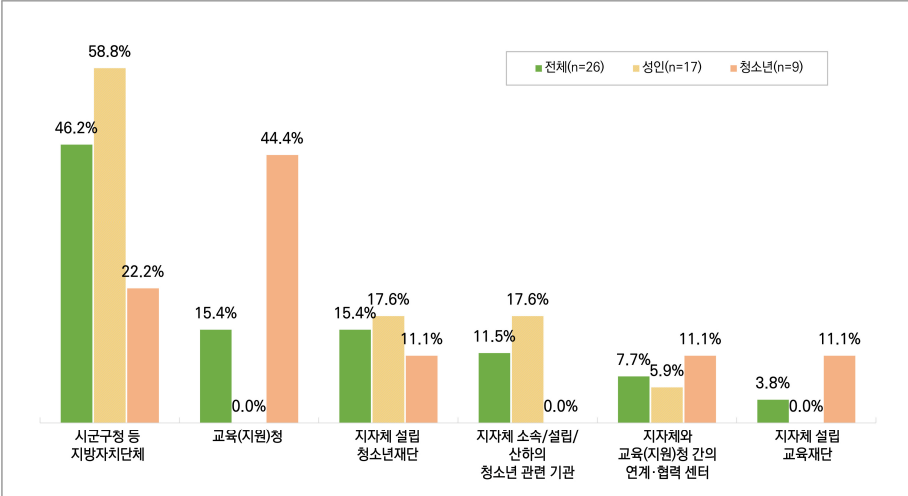


그림 V-4.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관(官) 주도

표 V-9.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관(官) 주도

(단위 : %)

		사례수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청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지자체 소속/설립/ 산하의 청소년 관련 기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 센터	지자체 설립 교육재단
전 체		(26)	46.2	15.4	15.4	11.5	7.7	3.8
응답자 구분	성인	(17)	58.8	0.0	17.6	17.6	5.9	0.0
	청소년	(9)	22.2	44.4	11.1	0.0	11.1	11.1
성별	남성	(6)	50.0	0.0	33.3	16.7	0.0	0.0
	여성	(20)	45.0	20.0	10.0	10.0	10.0	5.0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9)	22.2	44.4	0.0	22.2	0.0	11.1
	1년 초과 3년 미만	(8)	62.5	0.0	12.5	12.5	12.5	0.0
	3년 이상	(9)	55.6	0.0	33.3	0.0	11.1	0.0
거주 지역	시	(6)	16.7	16.7	33.3	33.3	0.0	0.0
	군	(13)	53.8	23.1	7.7	0.0	7.7	7.7
	구	(7)	57.1	0.0	14.3	14.3	14.3	0.0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8)	62.5	0.0	37.5	0.0	0.0	0.0
	민간기관	(8)	50.0	0.0	0.0	37.5	12.5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2)-2.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民) 주도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52.6%),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15.8%),
지역사회 기업체(15.8%), 지역사회 마을활동가(15.8%)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도 기관으로 민(民)을 선택한 응답자(n=19)들을 대상으로 민(民)에 해당하는 각 주체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15.8%), 지역사회 기업체(15.8%), 지역사회 마을활동가(15.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53.3%),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20.0%), 지역사회 마을활동가(20.0%),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0.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50.0%), 지역사회 기업체(50.0%),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0.0%), 지역사회 마을활동가(0.0%)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응답자 모두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인 53.3%, 청소년 50.0%).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60.0%),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20.0%), 지역사회 기업체(20.0%), 지역사회 마을활동가(0.0%)로 나타났다. 1년 초과 3년 미만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60.0%),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20.0%), 지역사회 기업체(10.0%), 지역사회 마을활동가(10.0%)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25.0%),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0.0%), 지역사회 기업체(25.0%), 지역사회 마을활동가(50.0%)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 50.0%, 66.7%).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공공기관과 민간 기관 응답자의 경우 모두 ‘청소년 관련 민간 단체(시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 100.0%, 50.0%).

[BASE: '민(民) 주도의 경우' 응답자, n=1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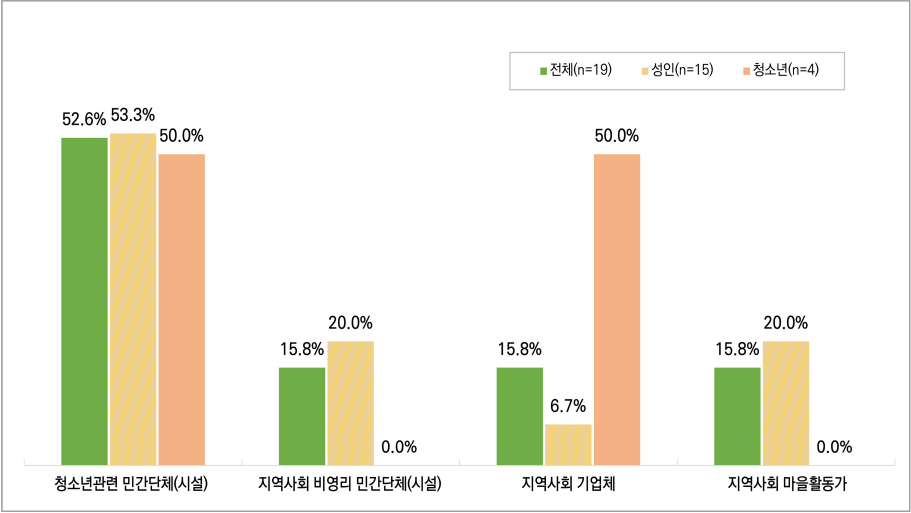


그림 V-5.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民) 주도

표 V-10.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民) 주도

(단위 : %)

		사례수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	지역사회 기업체	지역사회 마을 활동가
전 체		(19)	52.6	15.8	15.8	15.8
응답자 구분	성인	(15)	53.3	20.0	6.7	20.0
	청소년	(4)	50.0	0.0	50.0	0.0
성별	남성	(9)	44.4	11.1	11.1	33.3
	여성	(10)	60.0	20.0	20.0	0.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5)	60.0	20.0	20.0	0.0
	1년 초과 3년 미만	(10)	60.0	20.0	10.0	10.0
	3년 이상	(4)	25.0	0.0	25.0	50.0
거주지역	시	(10)	50.0	20.0	10.0	20.0
	군	(3)	33.3	0.0	33.3	33.3
	구	(6)	66.7	16.7	16.7	0.0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2)	100.0	0.0	0.0	0.0
	민간기관	(12)	50.0	16.7	8.3	25.0
	기타	(1)	0.0	100.0	0.0	0.0

2)-3.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관(民官) 공동 주도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60.3%),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51.3%),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47.4%)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도 기관으로 민관(民官) 공동 주도를 선택한 응답자(n=78)를 대상으로 민관(民官)에 해당하는 운영 주체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51.3%),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47.4%), 민관협력지원센터(39.7%), 청소년활동진흥센터(17.9%), 청소년상담복지센터(15.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88.2%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의 경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민관협력지원센터’에 대한 비율은 크게 늘어났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7.1% → 3년 이상 47.1%), 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78.6% → 3년 이상 17.6%).

거주 지역별 결과는 ‘시’, ‘군’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55.9%, 60.9%로 가장 높았으며, ‘구’ 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에 대한 응답 비율이 6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민간 기관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SE: '민관(民官) 공동 주도의 경우(복수응답)' 응답자, n=78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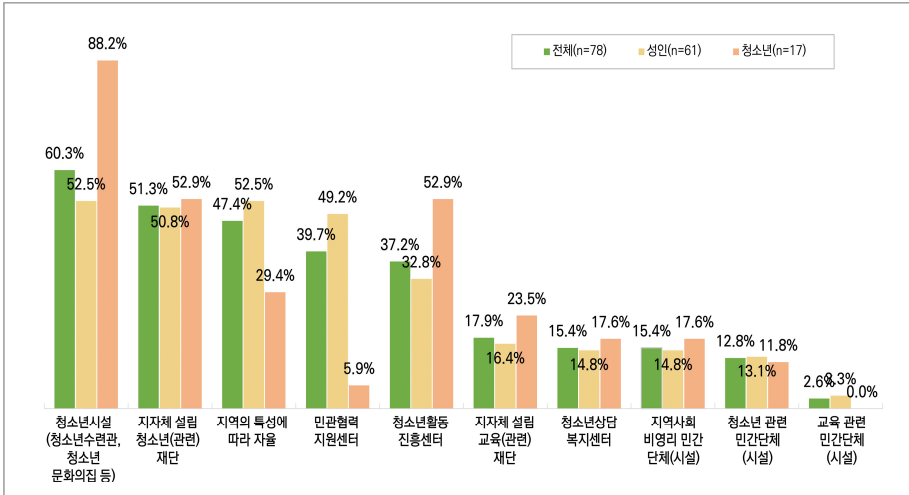


그림 V-6.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관(民官) 공동주도(복수응답)

표 V-11.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 민관(民官) 공동주도(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	청소년 시설	지자체 설립 청소년 재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민관 협력 자원 센터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지자체 설립 교육 재단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비영리 민간 단체 (시설)	청소년 민간 단체 (시설)	교육 민간 단체 (시설)
전 체		(78)	60.3	51.3	47.4	39.7	37.2	17.9	15.4	15.4	12.8	2.6
응답자 구분	성인	(61)	52.5	50.8	52.5	49.2	32.8	16.4	14.8	14.8	13.1	3.3
	청소년	(17)	88.2	52.9	29.4	5.9	52.9	23.5	17.6	17.6	11.8	0.0
성별	남성	(26)	53.8	57.7	50.0	42.3	30.8	23.1	15.4	19.2	3.8	3.8
	여성	(52)	63.5	48.1	46.2	38.5	40.4	15.4	15.4	13.5	17.3	1.9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4)	85.7	42.9	50.0	7.1	78.6	14.3	14.3	0.0	7.1	0.0
	1년 초과 3년 미만	(30)	46.7	50.0	50.0	46.7	40.0	16.7	13.3	20.0	10.0	6.7
	3년 이상	(34)	61.8	55.9	44.1	47.1	17.6	20.6	17.6	17.6	17.6	0.0
거주 지역	시	(34)	50.0	55.9	47.1	44.1	35.3	14.7	20.6	17.6	14.7	0.0
	군	(23)	52.2	60.9	47.8	43.5	26.1	26.1	8.7	17.4	17.4	0.0
	구	(21)	85.7	33.3	47.6	28.6	52.4	14.3	14.3	9.5	4.8	9.5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35)	42.9	68.6	57.1	57.1	22.9	20.0	14.3	8.6	8.6	0.0
	민간기관	(23)	65.2	26.1	43.5	39.1	52.2	13.0	8.7	26.1	17.4	8.7
	기타	(3)	66.7	33.3	66.7	33.3	0.0	0.0	66.7	0.0	33.3	0.0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초기의 형태⁴⁵⁾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32.3%),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8.0%),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1.5%)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네트워크 형태는 어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성인 응답자(n=9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8.0%),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1.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은 줄었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33.3% → 3년 이상 14.3%),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에 비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1.7% → 3년 이상 40.5%)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군’ 거주자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가 53.8%, ‘구’ 거주자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이 33.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다.

45) 이 문항의 경우 성인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성인, n=9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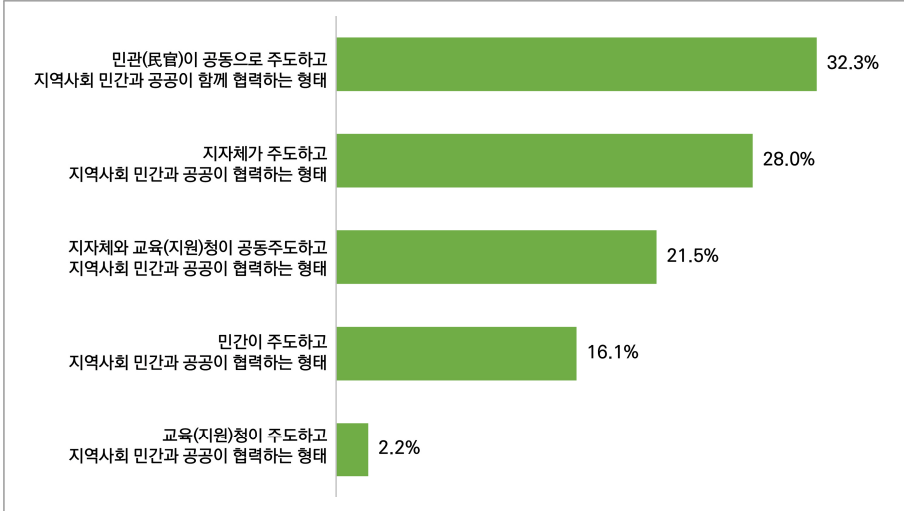


그림 V-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형태

표 V-1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형태

(단위 : %)

		사례수	민관 공동주도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지자체 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지자체 교육청 공동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민간 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교육청 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전 체		(93)	32.3	28.0	21.5	16.1	2.2
성별	남성	(31)	38.7	19.4	16.1	19.4	6.5
	여성	(62)	29.0	32.3	24.2	14.5	0.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41.7	25.0	33.3	0.0	0.0
	1년 초과3년 미만	(39)	20.5	28.2	25.6	23.1	2.6
	3년 이상	(42)	40.5	28.6	14.3	14.3	2.4
거주지역	시	(43)	44.2	14.0	16.3	23.3	2.3
	군	(26)	19.2	53.8	19.2	7.7	0.0
	구	(24)	25.0	25.0	33.3	12.5	4.2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31.1	37.8	26.7	4.4	0.0
	민간기관	(43)	30.2	18.6	18.6	27.9	4.7
	기타	(5)	60.0	20.0	0.0	20.0	0.0

3)-1.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⁴⁶⁾

‘민관(民官)이 공동 주도,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47.3%),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3.7%),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16.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네트워크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성인 응답자(n=9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 응답 비율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3.7%),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16.1%)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민관 공동 주도과 지역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사업 초기(32.3% → 47.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과 민간 주도과 지역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4순위에서 2순위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1.7% → 3년 이상 50.0%),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33.3% → 3년 이상 9.5%).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41.9%, 53.8%, 50.0%로 가장 높았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의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이 각 53.3%,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6) 이 문항의 경우 성인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성인, 응답자, n=9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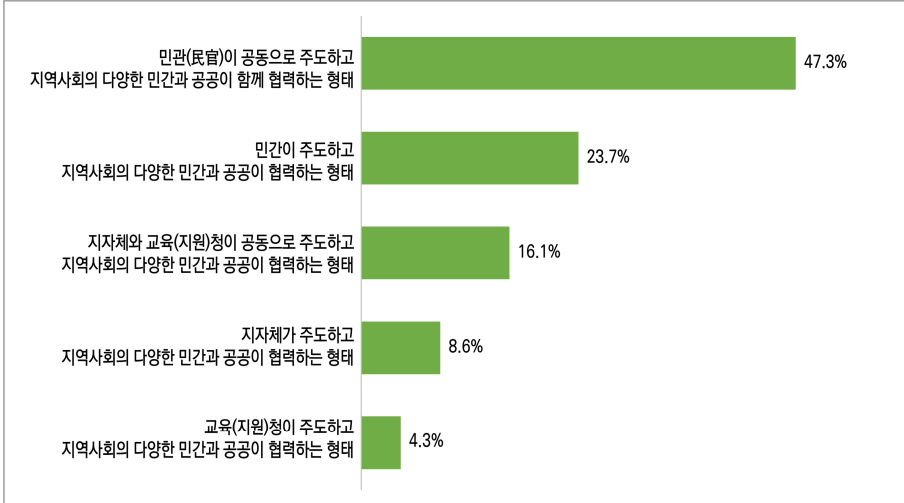


그림 V-8.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

표 V-13.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

(단위 : %)

		사례수	민관 공동주 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민간 주도 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지자체, 교육청 공동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지자체 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교육청 주도와 지역 민간과 공공이 협력
전 체		(93)	47.3	23.7	16.1	8.6	4.3
성별	남성	(31)	45.2	25.8	6.5	16.1	6.5
	여성	(62)	48.4	22.6	21.0	4.8	3.2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41.7	16.7	33.3	0.0	8.3
	1년 초과 3년 미만	(39)	46.2	20.5	17.9	10.3	5.1
	3년 이상	(42)	50.0	28.6	9.5	9.5	2.4
거주지역	시	(43)	41.9	37.2	14.0	2.3	4.7
	군	(26)	53.8	19.2	11.5	15.4	0.0
	구	(24)	50.0	4.2	25.0	12.5	8.3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3.3	15.6	17.8	11.1	2.2
	민간기관	(43)	39.5	30.2	16.3	7.0	7.0
	기타	(5)	60.0	40.0	0.0	0.0	0.0

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성단위

‘시·군·구 단위’(54.5%), ‘읍·면·동 단위’(23.6%), ‘마을 단위’(21.1%)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은 어떤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네트워크 구성의 단위는 행정 단위, 학군 단위, 지역 인프라의 요건, 생활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구분이 명확한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시·군·구 단위’ 응답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읍·면·동 단위’(23.6%), ‘마을 단위’(2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 청소년 응답자 모두 ‘시·군·구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52.7%,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시·군·구 단위(61.0%)’에의 응답 비율이 여성(51.2%)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 마을 단위는 남성(14.6%)이 여성 응답 비율(2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 응답자가 더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를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참여 기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줄었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53.6%, 35.7% → 3년 이상 각 46.8%, 21.3%), ‘마을 단위’에 대한 비율은 늘었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0.7% → 3년 이상 29.8%).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시·군·구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58.0%, 70.6%로 가장 높았으며,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시·군·구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55.6%, 4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의 경우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응답이 33.3%,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는 ‘마을 단위’에 대한 응답이 37.2%로 차이가 나타났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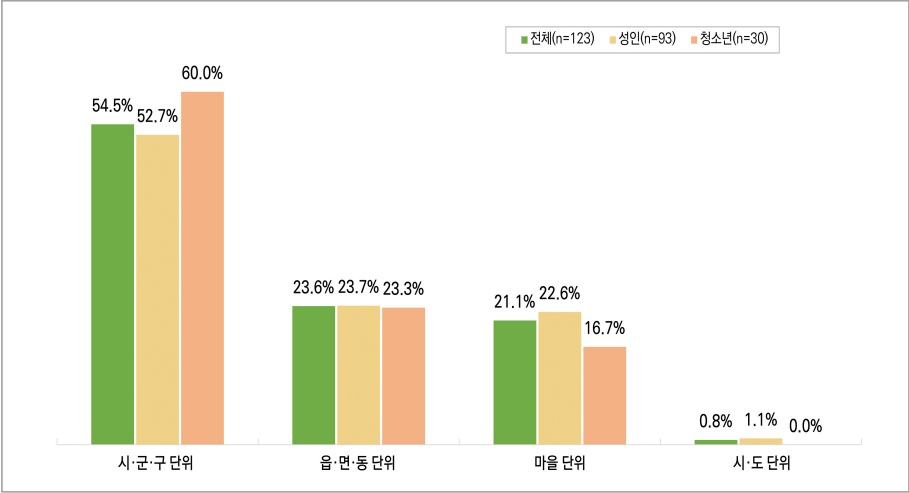


그림 V-9.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단위

표 V-14.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단위

(단위 : %)

		사례수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	시·도 단위
전 체		(123)	54.5	23.6	21.1	0.8
응답자 구 분	성인	(93)	52.7	23.7	22.6	1.1
	청소년	(30)	60.0	23.3	16.7	0.0
성별	남성	(41)	61.0	22.0	14.6	2.4
	여성	(82)	51.2	24.4	24.4	0.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53.6	35.7	10.7	0.0
	1년 초과 3년 미만	(48)	62.5	18.8	18.8	0.0
	3년 이상	(47)	46.8	21.3	29.8	2.1
거주지역	시	(50)	58.0	8.0	32.0	2.0
	군	(39)	35.9	53.8	10.3	0.0
	구	(34)	70.6	11.8	17.6	0.0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5.6	33.3	11.1	0.0
	민간기관	(43)	46.5	14.0	37.2	2.3
	기타	(5)	80.0	20.0	0.0	0.0

5)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효과적이다’(78.9%) VS ‘효과적이지 않다’(21.1%)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적이지 않다’에 대한 비율은 증가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7.9% → 3년 이상 2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기관에서 조직하여 운영한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⁴⁷⁾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9%가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1.1%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7%이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이며, 성인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 76.3%, 23.7%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적이다’에 대한 비율은 줄었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82.1% → 3년 이상 78.7%), ‘효과적이지 않다’에 대한 비율은 증가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7.9% → 3년 이상 21.3%)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91.2%가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시’와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 74.0%, 74.4%로 ‘구’ 거주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4.4%이고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6%이며,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 86.0%, 14.0%로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4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재단 등 사업 운영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체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민간,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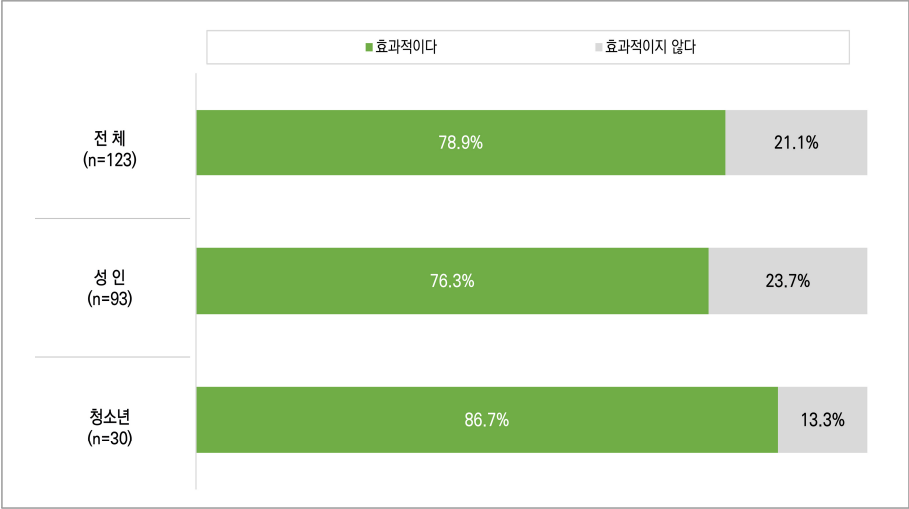


그림 V-10.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표 V-15.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

(단위 : %)

		사례수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전체		(123)	78.9	21.1
응답자 구분	성인	(93)	76.3	23.7
	청소년	(30)	86.7	13.3
성별	남성	(41)	85.4	14.6
	여성	(82)	75.6	24.4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82.1	17.9
	1년 초과 3년 미만	(48)	77.1	22.9
	3년 이상	(47)	78.7	21.3
거주지역	시	(50)	74.0	26.0
	군	(39)	74.4	25.6
	구	(34)	91.2	8.8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64.4	35.6
	민간기관	(43)	86.0	14.0
	기타	(5)	100.0	0.0

5)-1.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사업운동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46.2%), ‘지자체 직영’(19.2%), ‘민간 단체 위탁 운영’(15.4%) 순으로 나타남.

**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0.0% → 3년 이상 50.0%)
중간지원조직 신설에 대한 응답률 높아짐.**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협업체 형태로 운영한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이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26)에게 어떤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자체 직영’(19.2%), ‘민간 단체 위탁운영’(15.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민간 단체 위탁운영’에 대한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에 대한 비율은 증가했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0.0% → 3년 이상 50.0%), ‘민간 단체 위탁운영’에 대한 비율은 감소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20.0% → 3년 이상 0.0%)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사업을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다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38.5%, 50.0%, 66.7%로 지자체 직영이나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50.0%, 50.0%로 가장 높았다.

[BASE: '효과적이지 않다' 응답자, n=26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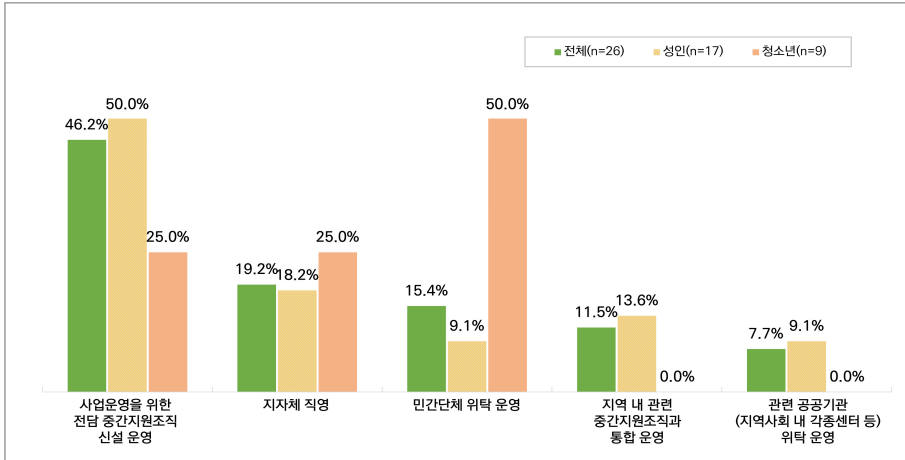


그림 V-11.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표 V-16.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단위 : %)

		사례수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	지자체 직영	민간 단체 위탁운영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과 통합 운영	관련 공공기관 위탁 운영
전 체		(26)	46.2	19.2	15.4	11.5	7.7
응답자 구분	성인	(22)	50.0	18.2	9.1	13.6	9.1
	청소년	(4)	25.0	25.0	50.0	0.0	0.0
성별	남성	(6)	33.3	16.7	33.3	16.7	0.0
	여성	(20)	50.0	20.0	10.0	10.0	10.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5)	40.0	20.0	20.0	20.0	0.0
	1년 초과 3년 미만	(11)	45.5	18.2	27.3	0.0	9.1
	3년 이상	(10)	50.0	20.0	0.0	20.0	10.0
거주지역	시	(13)	38.5	15.4	7.7	23.1	15.4
	군	(10)	50.0	20.0	30.0	0.0	0.0
	구	(3)	66.7	33.3	0.0	0.0	0.0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16)	50.0	18.8	6.3	12.5	12.5
	민간기관	(6)	50.0	16.7	16.7	16.7	0.0

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각 항목별 기능성의 정도⁴⁸⁾

6)-1.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5.8점)이 가장 높았고, ‘공공조직 위탁 운영’(63.1점), ‘민간 단체 위탁 운영’(5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에서 직영 형태, 민간 단체에서 자체적 운영(각각 52.7점)은 낮았음.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기능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100점으로 환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이 6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조직 위탁운영’(63.1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5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에서 직영 형태나 민간 단체에서 자체 운영(각각 52.7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증가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4.4점 → 3년 이상 53.6점)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지자체 직영’ 운영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4.0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2.0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58.9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50.4점)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7.3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3.5점), 지자체 직영(59.6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59.0점), 지자체 직영(59.0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7.4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4.6점), 지자체 직영(61.1점), 민간 단체 위탁 운영(53.5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5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유형에 따른 결과에서는 행정/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이 6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 단체 자체 운영이 48.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민간 기관의 경우는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이 6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직영이 5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8) 이 문항의 경우 성인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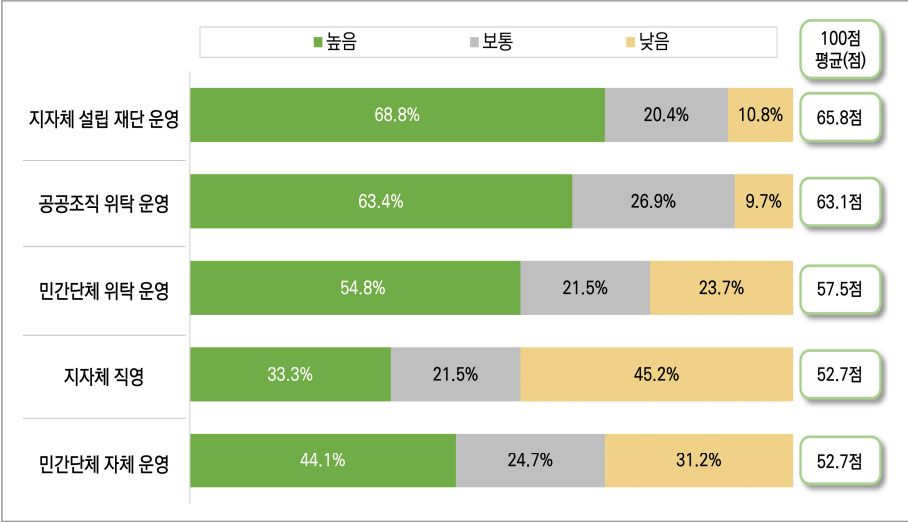


그림 V-12.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표 V-17.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⁴⁹⁾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52.7	63.1	65.8	57.5	52.7
성별	남성	(31)	55.4	62.9	68.8	57.0	55.9
	여성	(62)	51.3	63.2	64.2	57.8	51.1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44.4	63.9	66.7	58.3	52.8
	1년 초과 3년 미만	(39)	54.3	61.5	64.5	56.0	51.3
	3년 이상	(42)	53.6	64.3	66.7	58.7	54.0
거주지역	시	(43)	43.8	62.0	64.0	58.9	50.4
	군	(26)	59.6	63.5	67.3	59.0	59.0
	구	(24)	61.1	64.6	67.4	53.5	50.0
소속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4.8	61.1	65.6	53.0	48.1
	민간기관	(43)	52.7	65.5	67.1	64.3	57.8
	기타	(5)	33.3	60.0	56.7	40.0	50.0

49) 100점 환산 점수임. 6)~1~6)~7까지 동일함.

6)-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민간 단체 위탁 운영(62.7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1.6점),
‘공공조직 위탁 운영’(61.5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지자체 직영(49.8점)의 경우는 가장 낮았음.**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의 가능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 단체 위탁운영’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6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1.6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중 지자체 직영(49.8점)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36.6%)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35.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공공조직 위탁 운영’과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점수는 감소했으며(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68.1점, 66.7점 → 3년 이상 각 63.9점, 64.3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과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점수는 증가하였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58.3점, 52.8점 → 3년 이상 각 63.1점, 57.5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민간 단체 위탁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62.4점으로 가장 높았음. 반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공공조직 위탁 운영’이 66.7점, ‘구’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이 6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 지역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응답자는 ‘민간 단체 자체 운영’이 60.4점으로 응답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는 ‘민간 단체 위탁운영’에 대한 응답이 6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직영은 5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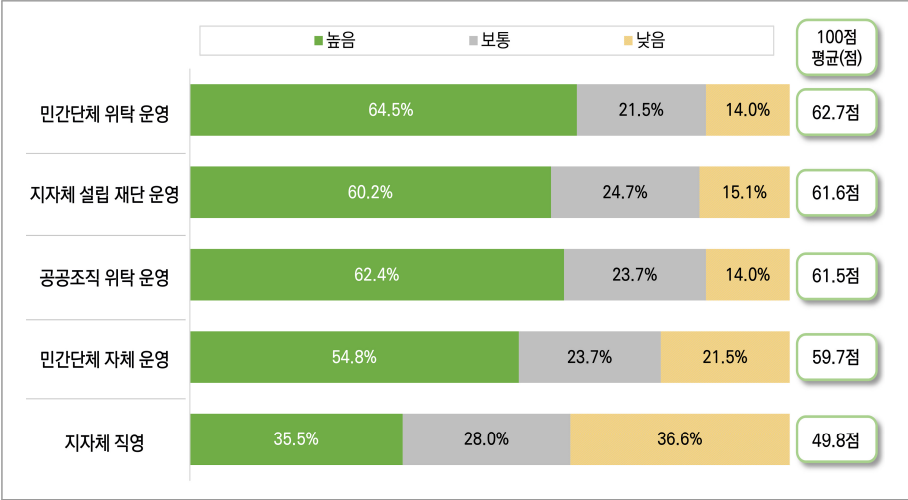


그림 V-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표 V-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49.8	61.5	61.6	62.7	59.7
성별	남성	(31)	50.5	59.7	65.1	62.4	63.4
	여성	(62)	49.5	62.4	59.9	62.9	57.8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51.4	68.1	66.7	58.3	52.8
	1년 초과 3년 미만	(39)	49.1	56.8	57.3	63.7	64.1
	3년 이상	(42)	50.0	63.9	64.3	63.1	57.5
거주지역	시	(43)	43.0	58.9	57.8	62.4	58.5
	군	(26)	54.5	66.7	62.2	66.0	64.7
	구	(24)	56.9	60.4	68.1	59.7	56.3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1.1	60.0	59.6	59.3	60.4
	민간기관	(43)	50.4	63.6	64.7	67.8	57.8
	기타	(5)	33.3	56.7	53.3	50.0	70.0

6)-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8.1점), ‘공공조직 위탁 운영’(63.3점),
‘지자체 직영’(59.9점) 순으로 나타남.**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이 6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조직 위탁 운영’(63.3점), ‘지자체 직영’(59.9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의 경우 응답자 중 74.2%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기간별 살펴보면, 1년 이하는 공공조직 위탁운영(72.2점), 1년 초과 3년 미만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5.4점), 3년 이상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9.8점)이 가장 높았다.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65.5점, 69.2점, 71.5점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의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5.5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61.6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0.5점), 지자체 직영(53.9점), 지자체 직영(51.9점)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9.2점), 지자체 직영(66.0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5.4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58.3점), 민간 단체 자체 직영(58.3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지역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71.5점), 지자체 직영(67.4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6.0점) 순이었고, 민간 단체 위탁운영(55.6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55.6점)이 동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는 각 67.8점, 7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는 민간 단체 자체 운영이 50.7점으로 가장 낮았고,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는 지자체 직영이 57.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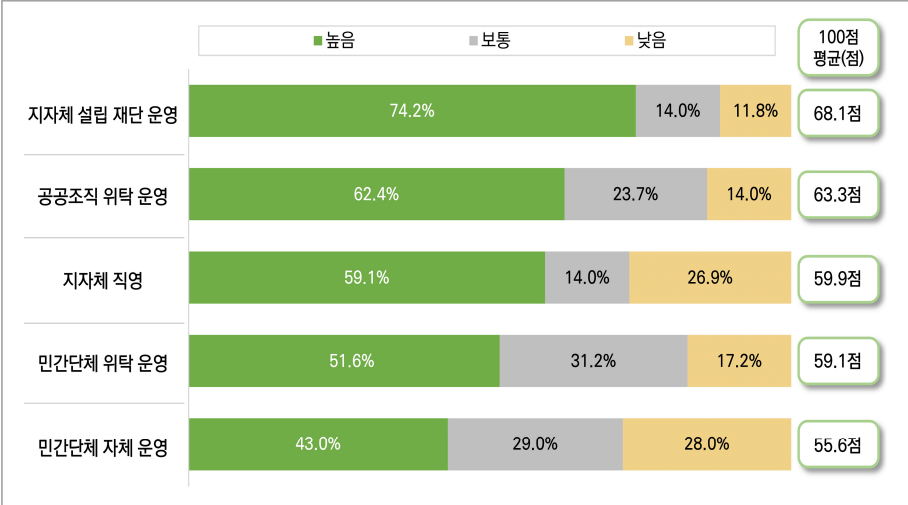


그림 V-1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표 V-19.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성인)		(93)	59.9	63.3	68.1	59.1	55.6
성별	남성	(31)	58.6	58.1	69.9	59.7	64.0
	여성	(62)	60.5	65.9	67.2	58.9	51.3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59.7	72.2	70.8	61.1	54.2
	1년 초과 3년 미만	(39)	62.8	59.0	65.4	57.7	54.7
	3년 이상	(42)	57.1	64.7	69.8	59.9	56.7
거주지역	시	(43)	51.9	60.5	65.5	61.6	53.9
	군	(26)	66.0	65.4	69.2	58.3	58.3
	구	(24)	67.4	66.0	71.5	55.6	55.6
소속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64.8	62.6	67.8	55.6	50.7
	민간기관	(43)	57.0	65.1	70.5	64.0	60.1
	기타	(5)	40.0	53.3	50.0	50.0	60.0

6)-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민간 단체 자체 운영’(66.7점), ‘민간 단체 위탁 운영’(62.9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1.3점) 순으로 나타남.**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독립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6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 단체 위탁 운영’(62.9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단체 자체 운영’을 할 경우 응답자 중 67.7%가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4.3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64.3점), 민간 단체 위탁운영(62.7점), 공공조직 위탁운영(59.9점), 지자체 직영(5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직영’을 제외한 응답의 경우 모두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감소하였다. 반면(‘민간 단체 자체 운영’의 경우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68.1점 → 3년 이상 64.3점),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 점수는 증가하였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54.2점 → 3년 이상 54.4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67.4점, 64.1점, 68.1점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65.9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중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도 65.9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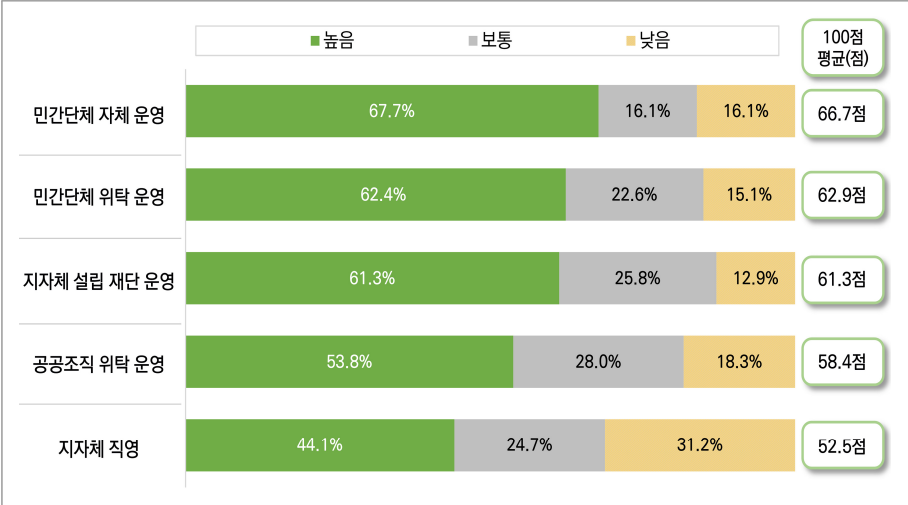


그림 V-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표 V-2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52.5	58.4	61.3	62.9	66.7
성별	남성	(31)	54.3	55.9	62.4	63.4	68.8
	여성	(62)	51.6	59.7	60.8	62.6	65.6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54.2	62.5	66.7	63.9	68.1
	1년 초과 3년 미만	(39)	50.0	55.6	56.4	62.8	68.8
	3년 이상	(42)	54.4	59.9	64.3	62.7	64.3
거주지역	시	(43)	47.7	57.4	58.5	62.8	67.4
	군	(26)	55.1	56.4	63.5	62.8	64.1
	구	(24)	58.3	62.5	63.9	63.2	68.1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0.0	55.6	57.8	61.5	65.9
	민간기관	(43)	55.0	62.4	65.9	64.7	65.9
	기타	(5)	53.3	50.0	53.3	60.0	80.0

6)-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원 조달의 안전성

**‘지자체 직영’(77.2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71.1점)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 단체 자체 운영’(44.8점)이 가장 낮음**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원 조달의 안전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7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조직 위탁운영’(67.9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56.1점),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점수는 4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직영’에 대해 응답자 88.2%는 자원 조달의 안전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의 경우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응답 점수도 증가하였다. 반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72.2점, 69.4점 → 3년 이상 각 77.8점, 72.6점), ‘공공조직 위탁운영’, ‘민간 단체 위탁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에 대한 응답의 경우 응답 점수가 감소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70.8점, 62.5점, 51.4점 → 3년 이상 각 64.3점, 52.0점, 41.3점)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지자체 직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72.9점, 83.3점, 78.5점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의 유형 가운데 자원 조달의 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80.0점, 74.0점으로 가장 높았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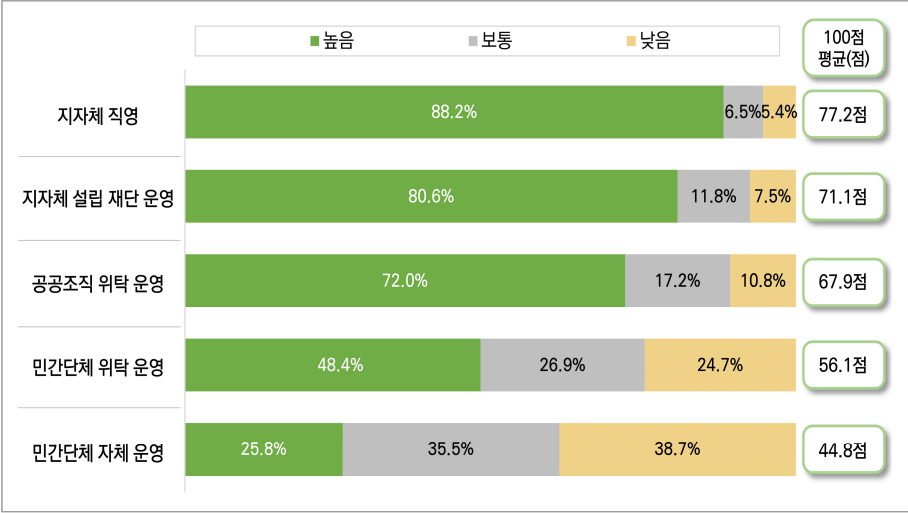


그림 V-1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조달의 안전성

표 V-2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조달의 안전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77.2	67.9	71.1	56.1	44.8
성별	남성	(31)	76.9	66.7	71.5	49.5	41.9
	여성	(62)	77.4	68.5	71.0	59.4	46.2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72.2	70.8	69.4	62.5	51.4
	1년 초과 3년 미만	(39)	78.2	70.9	70.1	58.5	46.6
	3년 이상	(42)	77.8	64.3	72.6	52.0	41.3
거주지역	시	(43)	72.9	64.0	69.4	53.1	42.2
	군	(26)	83.3	68.6	73.7	57.1	46.2
	구	(24)	78.5	74.3	71.5	60.4	47.9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80.0	66.7	69.6	53.3	43.7
	민간기관	(43)	74.0	69.4	73.3	61.2	46.5
	기타	(5)	80.0	66.7	66.7	36.7	40.0

6)-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70.8점), ‘공공조직 위탁 운영’(66.1점),
‘지자체 직영’(65.4점) 순으로 나타남.**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7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공공조직 위탁운영’(66.1점), ‘지자체 직영’(6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설립 재단’에 대해 응답자 5명 중 4명가량(79.6%)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을 제외한 응답의 경우 모두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감소하였다. 반면(‘공공조직 위탁 운영’의 경우 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72.2점 → 3년 이상 66.7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는 증가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70.8점 → 3년 이상 73.4점)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성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66.7점, 7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75.7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와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 모두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71.1점, 72.5점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의 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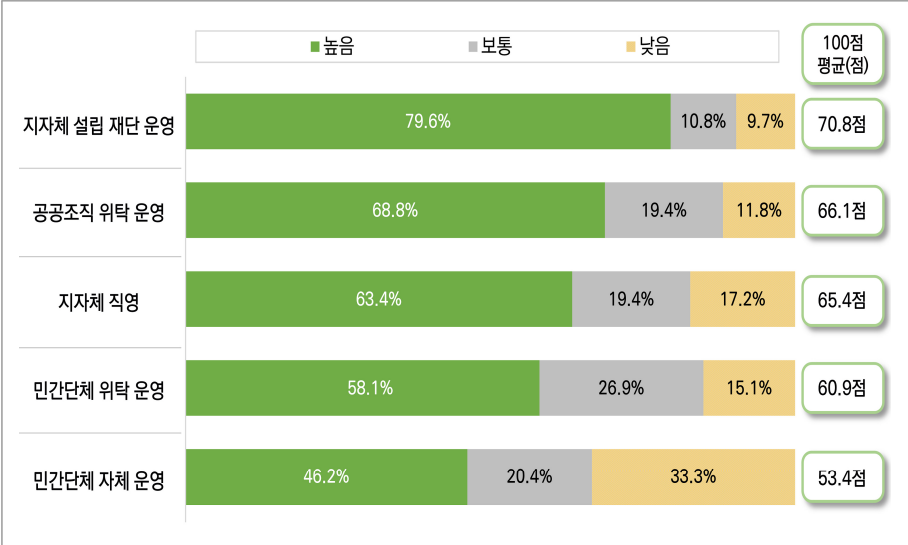


그림 V-1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표 V-2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65.4	66.1	70.8	60.9	53.4
성별	남성	(31)	60.2	65.1	75.3	61.3	58.1
	여성	(62)	68.0	66.7	68.5	60.8	51.1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68.1	72.2	70.8	63.9	58.3
	1년 초과 3년 미만	(39)	66.7	63.7	67.9	60.3	54.3
	3년 이상	(42)	63.5	66.7	73.4	60.7	51.2
거주지역	시	(43)	59.7	63.2	66.7	62.4	52.3
	군	(26)	65.4	65.4	73.7	63.5	57.1
	구	(24)	75.7	72.2	75.0	55.6	51.4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69.3	65.6	71.1	58.9	50.7
	민간기관	(43)	62.8	67.4	72.5	62.8	55.0
	기타	(5)	53.3	60.0	53.3	63.3	63.3

6)-7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8.1점), ‘지자체 직영’(64.5점),
‘공공조직 위탁 운영’(64.5점) 순으로 나타남.**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6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자체 직영’(64.5점), ‘공공조직 위탁운영’(64.5점)이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73.1%)은 유관 부처(서)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에서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응답에 대한 점수도 높아졌다. 그중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의 경우 1년 이하는 63.9점, 3년 이상은 72.2점으로 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6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직영’이 69.9점,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직영’과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7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과 ‘지자체 직영’에 대한 응답이 68.5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민간 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의 점수가 6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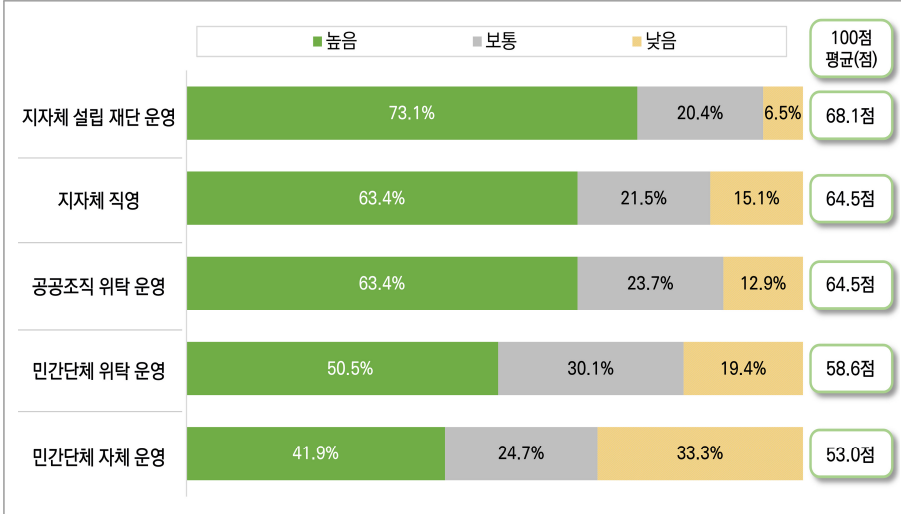


그림 V-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표 V-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단위 : 점)

		사례수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운영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민간 단체 위탁 운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전 체		(93)	64.5	64.5	68.1	58.6	53.0
성별	남성	(31)	62.4	62.4	70.4	58.6	56.5
	여성	(62)	65.6	65.6	66.9	58.6	51.3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59.7	63.9	63.9	54.2	51.4
	1년 초과 3년 미만	(39)	65.4	62.0	65.0	60.3	55.1
	3년 이상	(42)	65.1	67.1	72.2	58.3	51.6
거주지역	시	(43)	56.6	59.7	64.7	60.9	55.8
	군	(26)	69.9	67.9	69.2	55.1	47.4
	구	(24)	72.9	69.4	72.9	58.3	54.2
소속 유 형/신분	행정/공공기관	(45)	68.5	64.4	68.5	53.3	47.0
	민간기관	(43)	61.2	65.1	68.2	64.7	57.8
	기타	(5)	56.7	60.0	63.3	53.3	66.7

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 운영을 위한 각 항목별 중요성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77.8점),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76.4점),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방식’(75.2점) 순으로 나타남.
성인은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78.9점),
청소년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77.8점)이 가장 높았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100점 평균 기준 7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76.4점),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방식’(7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에 대한 응답이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에 대한 응답이 7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플랫폼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항목의 점수가 1년 이하 63.7점, 3년 이상 73.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거주 응답자 모두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76.3점, 74.8점, 8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의 점수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에 대한 점수가 81.0점으로 가장 높았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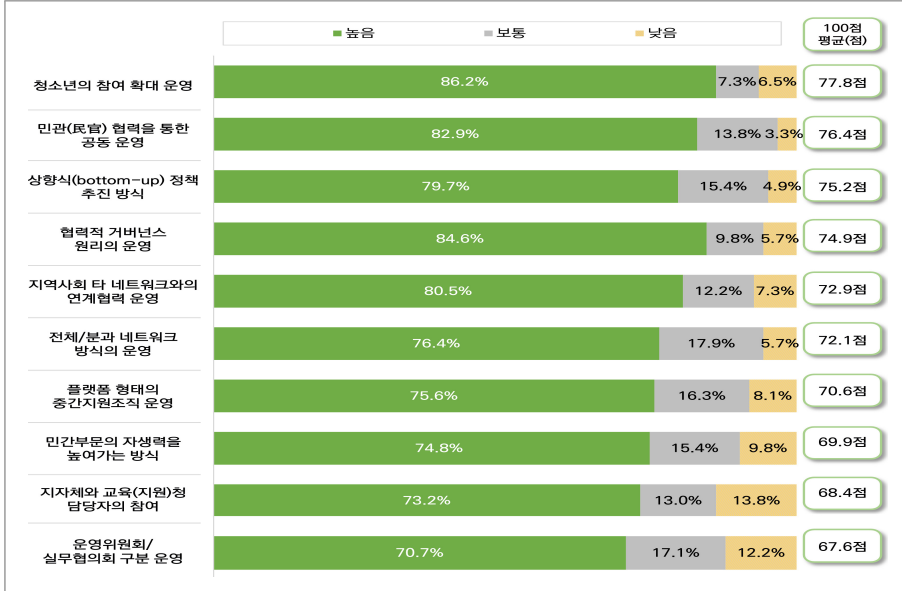


그림 V-19.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성

표 V-2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성

(단위 : %)

	사례 수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	전체/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	지자체 교육청 담당자의 참여	플랫폼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상향식 정책 추진 방식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구분 운영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	민간부문의 자생력 높여가는 방식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전체	(123)	74.9	70.6	68.4	69.9	75.2	67.6	77.8	72.1	72.9	76.4
응답자 구분	성인	(93)	77.2	72.6	70.1	69.9	75.6	69.0	77.8	74.7	78.9
	청소년	(30)	67.8	64.4	63.3	70.0	73.9	63.3	77.8	63.9	68.9
성별	남성	(41)	72.4	72.8	66.3	66.3	77.6	67.9	78.0	75.2	73.6
	여성	(82)	76.2	69.5	69.5	71.7	74.0	67.5	77.6	70.5	72.6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71.4	69.0	62.5	63.7	73.2	63.1	79.2	70.8	72.6
	1년 초과 3년 미만	(48)	76.0	70.5	69.8	70.1	73.6	67.0	74.7	70.8	71.5
	3년 이상	(47)	75.9	71.6	70.6	73.4	78.0	70.9	80.1	74.1	74.5
거주지역	시	(50)	76.0	68.0	68.7	68.7	75.0	67.7	76.3	73.7	71.3
	군	(39)	70.1	68.8	65.4	70.9	71.8	62.8	74.8	72.2	69.7
	구	(34)	78.9	76.5	71.6	70.6	79.4	73.0	83.3	69.6	78.9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73.7	72.2	67.0	69.3	73.7	67.0	75.2	76.3	74.8
	민간기관	(43)	81.0	73.6	72.5	71.7	76.4	70.2	80.2	73.6	75.2
	기타	(5)	76.7	66.7	76.7	60.0	86.7	76.7	80.0	70.0	83.3

8)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중 각 항목별 중요도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79.8점),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77.8점),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77.6점)
성인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82.4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75.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응답 점수가 100점 평균 기준 7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77.8점),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77.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응답이 8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에 대한 응답이 7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응답의 경우 점수 증가폭이 컸던 반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70.2점, 75.0점 → 3년 이상 77.0점, 82.6점), 다른 항목들은 사업 참여 기간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각 78.7점, 78.2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에 대한 응답이 8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응답이 83.7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민간 기관 응답자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에 대한 응답이 8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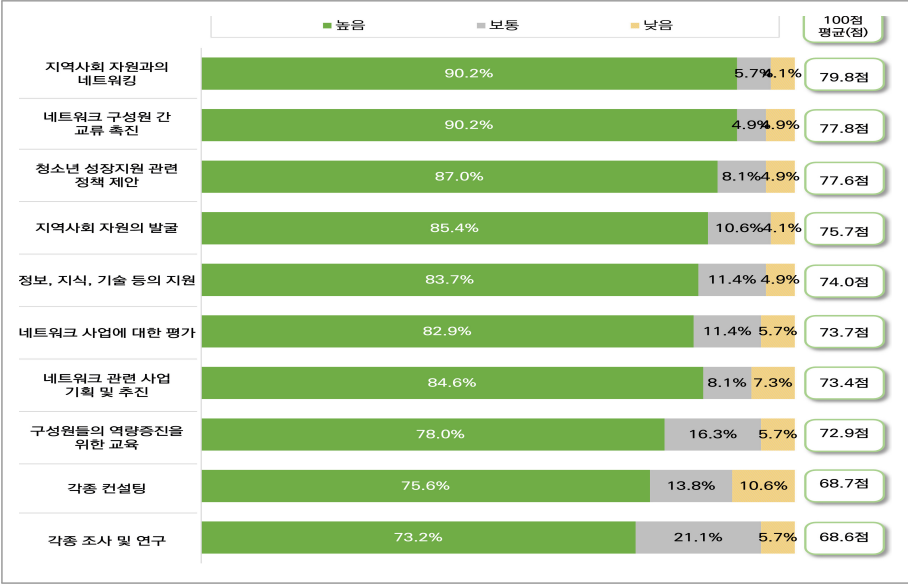


그림 V-20.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의 중요도

표 V-25.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의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지역 자원 발굴	지역 자원 과의 네트 워킹	정보, 지식, 기술 등의 지원	구성원 들의 역량 증진 교육	네트 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	각종 조사 및 연구	청소년 성장 지원 관련 정책 제언	각종 컨설팅	네트 워크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네트 워크 사업에 대한 평가
전 체		(123)	75.7	79.8	74.0	72.9	77.8	68.6	77.6	68.7	73.4	73.7
응답자 구분	성인	(93)	78.7	82.4	75.8	74.2	78.9	69.5	78.5	69.0	75.3	74.7
	청소년	(30)	66.7	71.7	68.3	68.9	74.4	65.6	75.0	67.8	67.8	70.6
성별	남성	(41)	77.2	79.7	71.1	71.5	80.1	66.3	80.1	65.4	75.2	73.2
	여성	(82)	75.0	79.9	75.4	73.6	76.6	69.7	76.4	70.3	72.6	74.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70.2	75.0	74.4	72.6	78.0	69.0	78.0	69.0	73.8	69.6
	1년 초과 3년 미만	(48)	77.8	79.9	73.6	72.6	77.8	67.4	75.7	68.8	75.3	76.4
	3년 이상	(47)	77.0	82.6	74.1	73.4	77.7	69.5	79.4	68.4	71.3	73.4
거주지역	시	(50)	75.0	78.7	73.7	71.3	76.7	69.0	77.7	66.3	72.0	72.3
	군	(39)	72.2	78.2	72.2	74.4	73.9	69.2	75.6	68.8	70.9	73.5
	구	(34)	80.9	83.3	76.5	73.5	83.8	67.2	79.9	72.1	78.4	76.0
소속 유형 /산분	행정/공공기관	(45)	79.3	83.7	76.7	73.7	78.5	68.9	75.6	68.5	74.1	72.2
	민간기관	(43)	77.5	80.6	75.2	73.6	77.9	69.4	81.0	69.0	77.5	76.4
	기타	(5)	83.3	86.7	73.3	83.3	90.0	76.7	83.3	73.3	66.7	83.3

9)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77.1점), ‘관련 법령의 실효성’(75.4점)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의 필요성’(79.6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78.9점)
상위체계(법령)의 필요성보다는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이 더 높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은 100점 평균 기준 77.1점, ‘관련 법령의 실효성’은 75.4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의 필요성’은 79.6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은 78.9점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77.8점에서 76.6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관련 법령의 실효성’과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점수는 증가하였다(‘관련 법령의 실효성’의 경우 1년 이하 70.8점 → 3년 이상 75.8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점수는 각 74.4점, 74.3점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점수(각 77.1점, 77.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실효성’(78.2점)이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76.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응답자와 민간 기관의 응답자 모두 ‘관련 법령의 실효성’의 점수(각 71.9점, 77.9점)가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의 점수(각 73.0점, 80.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기관 모두 ‘관련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각 77.0점, 79.8점)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의 필요성’(각 77.4점, 81.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BASE: 성인, n=9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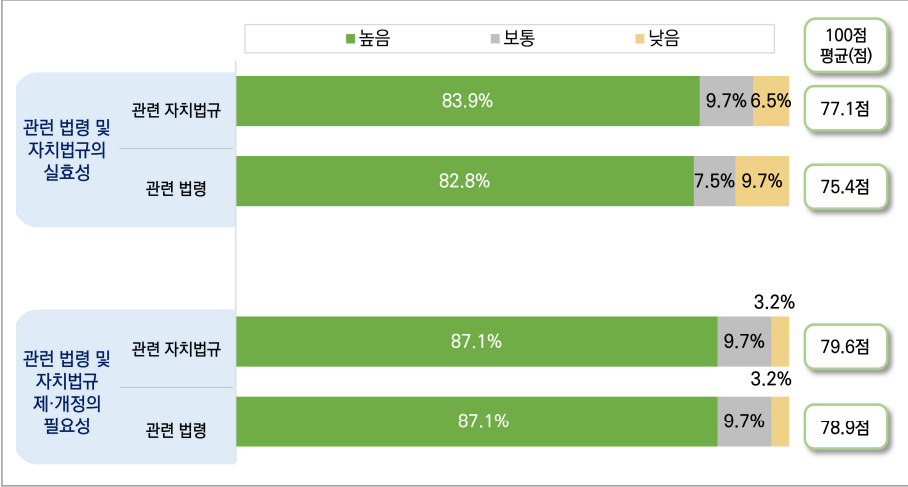


그림 V-2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표 V-26.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

(단위 : 점)

		사례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의 필요성			
			관련 법령		관련 자치법규		관련 법령		관련 자치법규	
			평균 [7점]	평균 [100점]	평균 [7점]	평균 [100점]	평균 [7점]	평균 [100점]	평균 [7점]	평균 [100점]
전 체		(93)	5.53	75.4	5.62	77.1	5.73	78.9	5.77	79.6
성별	남성	(31)	5.39	73.1	5.65	77.4	5.87	81.2	5.97	82.8
	여성	(62)	5.60	76.6	5.61	76.9	5.66	77.7	5.68	78.0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2)	5.25	70.8	5.67	77.8	5.42	73.6	5.67	77.8
	1년 초과 3년 미만	(39)	5.59	76.5	5.64	77.4	5.77	79.5	5.72	78.6
	3년 이상	(42)	5.55	75.8	5.60	76.6	5.79	79.8	5.86	81.0
거주지역	시	(43)	5.47	74.4	5.63	77.1	5.58	76.4	5.67	77.9
	군	(26)	5.69	78.2	5.58	76.3	5.73	78.8	5.73	78.8
	구	(24)	5.46	74.3	5.67	77.8	6.00	83.3	6.00	83.3
소속 유형/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5.31	71.9	5.38	73.0	5.62	77.0	5.64	77.4
	민간기관	(43)	5.67	77.9	5.81	80.2	5.79	79.8	5.86	81.0
	기타	(5)	6.20	86.7	6.20	86.7	6.20	86.7	6.20	86.7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⁵⁰⁾

만족한다(56.7%) VS 만족하지 않는다(16.7%)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64.0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6.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보통 26.7%).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평균 기준으로 64.0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를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경우는 만족(62.5%), 불만족(18.8%), 보통(18.8%)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초과 3년 미만의 경우는 만족(44.4%), 보통(33.3%), 불만족(22.2%)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경우는 만족(60.0%), 보통(40.0%), 불만족(0.0%)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만족 한다’라는 응답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62.5% → 3년 이상 60.0%), ‘불만족 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8.8% → 3년 이상 0.0%).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는 보통(40.0%), 만족(28.6%), 불만족(28.6%)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는 만족(46.2%), 보통(30.8%), 불만족(23.1%) 순으로 나타났다. 구 지역의 경우는 만족(90.0%), 보통(10.0%), 불만족(0.0%) 순으로 나타났다.

‘군’,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 46.2%, 90.0%로 ‘불만족 한다’(각 23.1%, 0.0%)라는 응답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만족한다’(28.6%)라는 응답 비율과 ‘불만족한다’(28.6%)라는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 지역별로 만족도는 구 지역(90.0%), 군 지역(46.2%), 시 지역(28.6%) 순으로 나타나,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군 지역보다는 구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 문항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청소년, n=30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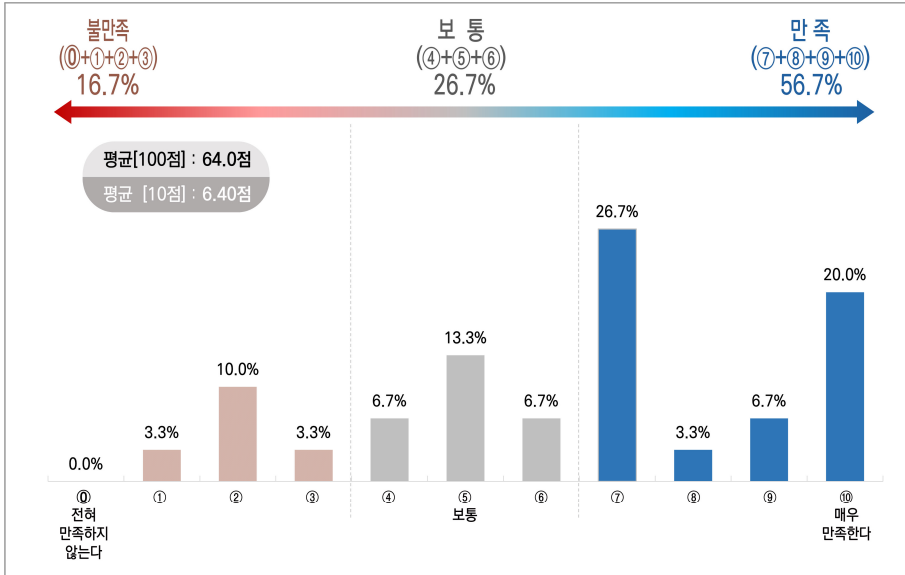


그림 V-2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

표 V-2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불만족 (0+2+3)	보통 (4+5+6)	만족 (7+8+9+10)	평균 [10점]	평균 [100점]
전 체		(30)	16.7	26.7	56.7	6.40	64.0
성별	남성	(10)	0.0	30.0	70.0	8.10	81.0
	여성	(20)	25.0	25.0	50.0	5.55	55.5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6)	18.8	18.8	62.5	6.56	65.6
	1년 초과 3년 미만	(9)	22.2	33.3	44.4	6.00	60.0
	3년 이상	(5)	0.0	40.0	60.0	6.60	66.0
거주지역	시	(7)	28.6	42.9	28.6	5.29	52.9
	군	(13)	23.1	30.8	46.2	5.46	54.6
	구	(10)	0.0	10.0	90.0	8.40	84.0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⁵¹⁾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각 70.6점), ‘나는 다른 친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69.4점)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에 대한 응답 점수가 100점 평균 기준 7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는 다른 친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69.4점),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흥미로웠다’(6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와 ‘나의 의견이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었다’에 대한 응답 점수는 1년 이하 각 72.9점, 66.7점에서 3년 이상 각 73.3점, 70.0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흥미로웠다’에 대한 응답이 8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에 대해 59.0점,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른들의 청소년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에 대해 8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청소년의 만족도는 시 단위보다는 구 단위의 참여 만족도가 높았고, 군 단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1) 이 문항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청소년, n=30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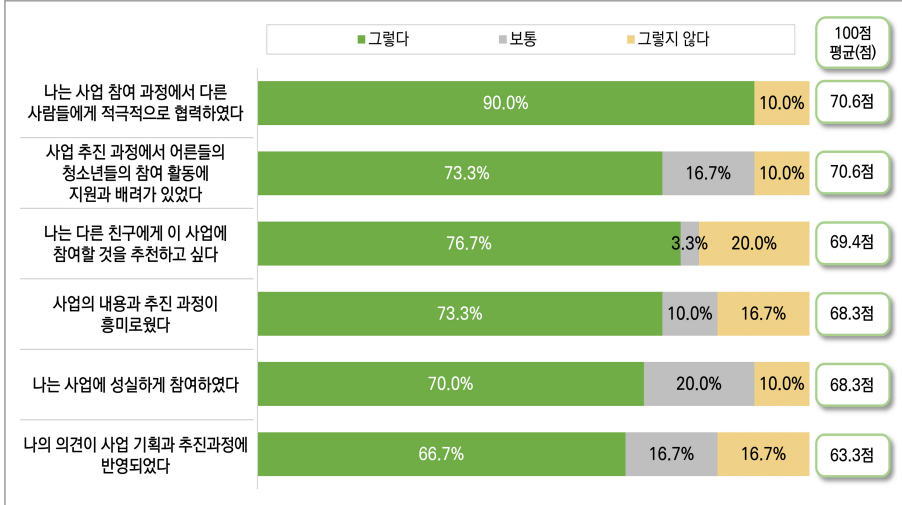


그림 V-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

표 V-2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험

(단위 : 점)

		사례수	나는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나의 의견이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른들의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흥미로웠다	나는 다른 친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전 체		(30)	68.3	70.6	63.3	70.6	68.3	69.4
성별	남성	(10)	78.3	76.7	70.0	76.7	76.7	80.0
	여성	(20)	63.3	67.5	60.0	67.5	64.2	64.2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6)	71.9	72.9	66.7	74.0	72.9	75.0
	1년 초과 3년 미만	(9)	66.7	64.8	53.7	64.8	66.7	75.9
	3년 이상	(5)	60.0	73.3	70.0	70.0	56.7	40.0
거주지역	시	(7)	73.8	76.2	57.1	78.6	81.0	78.6
	군	(13)	55.1	59.0	57.7	53.8	51.3	55.1
	구	(10)	81.7	81.7	75.0	86.7	81.7	81.7

1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⁵²⁾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71.1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70.0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68.3점) 순이었음.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향상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이 100점 평균 기준 7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70.0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6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 되었다’라는 응답에 대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증가하였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각 68.8점, 70.8점 → 3년 이상 각 80.0점, 73.3점). 그러나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였다’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맺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문항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이 7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이 각 62.8점, 8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이 구 단위인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 시 단위, 군 단위 순으로 나타났다.

52) 이 문항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BASE: 청소년, n=30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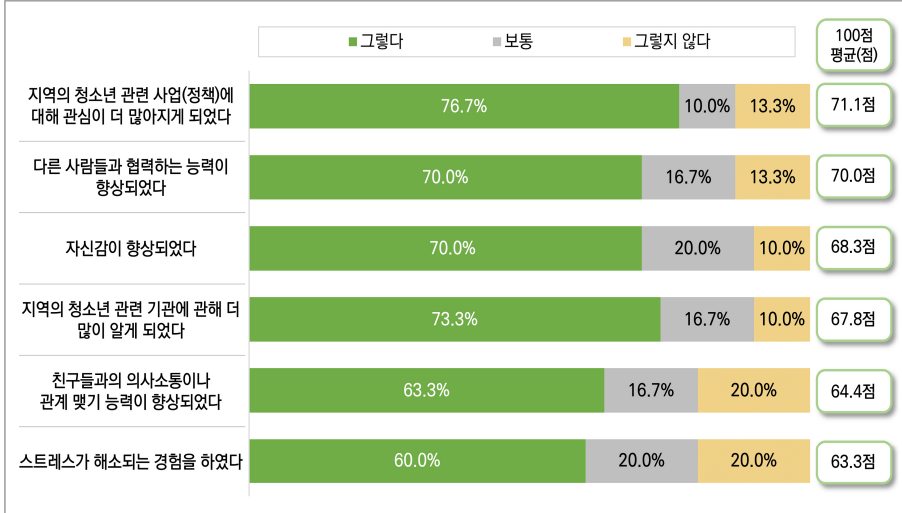


그림 V-2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

표 V-29.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변화

(단위 : 점)

		사례수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였다	자신감이 향상 되었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관계 맺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전 체		(30)	67.8	71.1	63.3	68.3	64.4	70.0
성별	남성	(10)	75.0	78.3	71.7	76.7	71.7	76.7
	여성	(20)	64.2	67.5	59.2	64.2	60.8	66.7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16)	68.8	68.8	64.6	67.7	69.8	70.8
	1년 초과 3년 미만	(9)	66.7	70.4	61.1	64.8	64.8	66.7
	3년 이상	(5)	66.7	80.0	63.3	76.7	46.7	73.3
거주지역	시	(7)	73.8	64.3	61.9	69.0	69.0	66.7
	군	(13)	53.8	62.8	51.3	59.0	50.0	61.5
	구	(10)	81.7	86.7	80.0	80.0	80.0	83.3

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82.1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81.4점), ‘지역사회 내 유관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80.4점), 지자체 및 교육청 내에 전담 인력 배치(79.7점)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의 중요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점수가 100점 평균 기준 82.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81.4점), ‘지역사회 내 유관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80.4점) 순이었다.

응답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응답이 8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에 대한 응답이 각 7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홍보 강화’에 대한 응답의 경우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외의 응답들에 대한 점수는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며, ‘중간지원조직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응답의 경우 1년 이하 70.8점, 3년 이상 83.7점으로 다른 응답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 ‘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응답 점수는 각 80.7점, 8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에 대한 응답이 7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 유형/신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공공기관 응답자의 경우 ‘지자체 및 교육청 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응답이 8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기관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응답이 8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SE: 전체, n=123명,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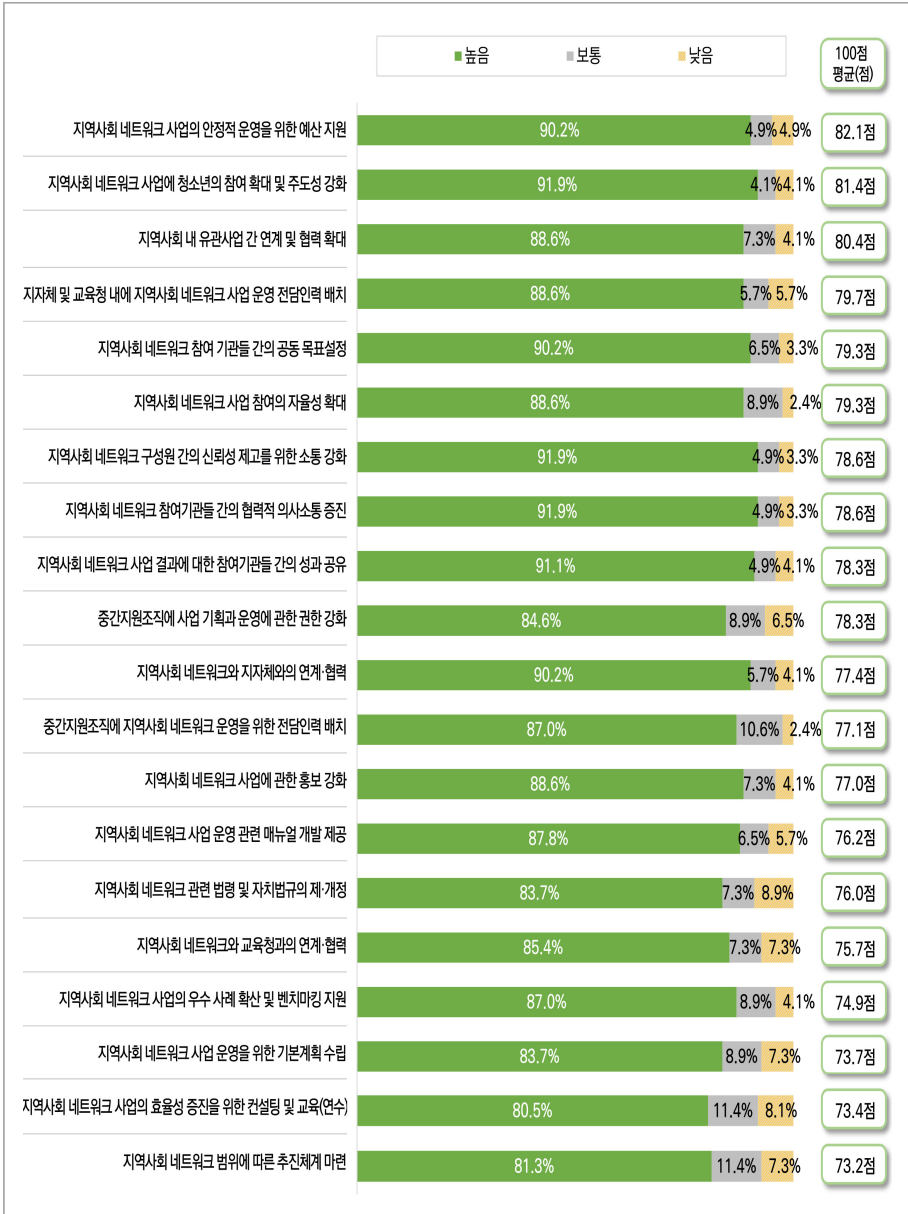


그림 V-2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표 V-3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단위 : 점)

		사례 수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	지자체 및 교육청 내에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자율성 확대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	지역 사회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증진	지역 사회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 간의 공동 목표 설정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 기관들 간의 성과 공유
전 체		(123)	77.4	75.7	79.7	82.1	79.3	81.4	78.6	79.3	78.3	77.1
응답자 구분	성인	(93)	81.0	78.7	82.8	84.4	80.5	83.3	80.8	81.5	81.7	78.9
	청소년	(30)	66.1	66.7	70.0	75.0	75.6	75.6	71.7	72.2	67.8	71.7
성별	남성	(41)	78.0	75.6	81.7	82.9	81.3	83.3	78.0	78.9	78.5	78.9
	여성	(82)	77.0	75.8	78.7	81.7	78.3	80.5	78.9	79.5	78.3	76.2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71.4	71.4	74.4	75.0	76.2	82.1	78.0	76.2	75.0	74.4
	1년 초과 3년 미만	(48)	76.7	75.3	80.9	83.3	78.5	79.5	77.4	79.5	78.8	78.1
	3년 이상	(47)	81.6	78.7	81.6	85.1	81.9	83.0	80.1	80.9	79.8	77.7
거주지역	시	(50)	76.0	74.0	78.7	80.7	77.3	78.7	77.7	78.0	78.3	76.3
	군	(39)	73.9	73.5	75.2	78.6	78.2	79.9	75.2	77.4	75.6	74.4
	구	(34)	83.3	80.9	86.3	88.2	83.3	87.3	83.8	83.3	81.4	81.4
소속유형/신분	행정/공공기관	(45)	83.0	80.7	85.2	84.8	78.5	83.3	81.5	83.7	82.2	78.1
	민간기관	(43)	78.7	76.4	80.2	83.3	81.4	82.6	79.5	78.7	80.6	79.1
	기타	(5)	83.3	80.0	83.3	90.0	90.0	90.0	86.7	86.7	86.7	83.3

표 V-3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계속)

(단위 : 점)

		사례 수	중간 지원 조직에 지역 사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중간 지원 조직에 사업 기획과 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제공	지역 사회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추진 체계 마련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연수)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홍보 강화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 및 벤치 마킹 지원	지역 사회 네트워크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의 제·개정	지역 사회 내 유관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
전 체		(123)	78.3	76.2	73.2	73.4	73.7	77.0	75.7	74.9	76.0	80.4
응답자 구분	성인	(93)	82.4	79.6	74.7	76.5	75.3	80.6	76.5	76.0	78.7	83.3
	청소년	(30)	65.6	65.6	68.3	63.9	68.9	65.6	73.3	71.7	67.8	71.1
성별	남성	(41)	81.7	78.5	73.2	74.8	75.6	76.8	77.6	75.2	76.8	81.7
	여성	(82)	76.6	75.0	73.2	72.8	72.8	77.0	74.8	74.8	75.6	79.7
사업참여 기간	1년 이하	(28)	70.8	71.4	72.6	70.2	73.2	72.6	75.6	75.6	70.8	76.8
	1년 초과 3년 미만	(48)	77.4	75.3	74.7	75.0	76.0	79.2	77.4	75.7	77.1	82.6
	3년 이상	(47)	83.7	79.8	72.0	73.8	71.6	77.3	74.1	73.8	78.0	80.1
거주지역	시	(50)	76.0	76.7	73.0	73.0	73.7	76.3	74.3	73.0	78.0	79.0
	군	(39)	74.8	71.8	70.5	67.5	70.1	73.5	72.6	72.2	69.2	76.9
	구	(34)	85.8	80.4	76.5	80.9	77.9	81.9	81.4	80.9	80.9	86.3
소속유형 / 신분	행정/공공기관	(45)	82.2	81.9	77.0	77.4	74.1	80.7	78.9	74.4	76.7	84.4
	민간기관	(43)	82.2	77.5	72.1	75.2	75.6	79.8	74.4	77.5	80.2	81.0
	기타	(5)	86.7	76.7	76.7	80.0	83.3	86.7	73.3	76.7	83.3	93.3

3. 질적 조사⁵³⁾ 결과

이 절에서는 앞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경험이 있는 각 지역의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각 문항에 관한 결과의 함의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

그간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방식은 청소년시설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일부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도 지역 내 청소년시설 간 혹은 청소년재단 내에 있는 시설 간의 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청소년시설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재단 쪽은 내부는 됐는데 여기는 확장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들이 협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직영이나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단 차원에서 외부로 협업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개별 시설에서...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단의 조직체계에서 시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이 있는데 나중에 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참여자 1)

“OOO도 시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OO 축제랑 어울림 마당을 할 때도 그냥 연합해서 하는 그런 정도로만 네트워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자 3)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 참여기구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구마다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이제 기관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하고는 같이 연합 워크숍, 청운위, 청참위도 했었고 동아리도 동아리연합회 축제를 사실 매년 했는데 올해는 축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연합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네트워크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약간 협업하는 정도...” (참여자 5)

53) 본 연구에서의 FGI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자, 조사 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은 본 장의 1절 조사 개요에 제시하였음.

“이 사업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겼고 평소에 이제 다른 기관에 있어서 잘 모르고 생겼던 오해라던가 아니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던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의 힘을 입어서 더욱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청소년 참여자 1)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 지표는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논의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협의 이 사업 자체가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 그게 학습이 되었다. 그런 학습을 통해 실무자들의 변화 이런 것이 성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인가? 또는 이 개념 정의되어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니 그럼 그 성장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활성화를 볼 수 있는 지점인가? 또는 연계협력이라는 게 주된 방법론이니 연계협력의 양과 질의 변화가 있었으면 그걸 활성화로 볼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이...”(참여자 2)

한편, 청소년시설 내 활동이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에 참여를 통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시 중심의 현 교육 체제하에서 청소년활동에 따른 이득이나 긍정적 보상이 없는 한 청소년시설 이용률이나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에 청소년활동과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기관 자체가 좀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애초에 그런 봉사활동 기입란이 없어지면서 청소년참여율이 좀 낮아지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참가하는 것이나 이제 저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보여서요.” (청소년 참여자 2)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부족함이라든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참여자 4)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지역에서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민 주도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업 초기에는 관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OO는 전담하시는 그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저희는 지자체 주도였었던 것 같아요...군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흠어지라고 하니까 흠어지고...지역사회 모에 대해서 나눠 환경에 대해서 나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 않아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한 사람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냥 이 리더십이 그냥 행정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있어서 그냥 너무 형식에 의해서 했어요.”(참여자 3)

“OO 지역은 협의체 구조예요. 민간기관도 들어오고 전문기관도 들어오는데 실제 실무는 공무원들이 해주잖아요. 실제 추진은 공무원들이 해줘요. 보통은 지자체장이나 부지자체장이 추진 단장을 맡아요. 그런 형태로 구성이 잘 되었던 지역인데 그 느낌 그대로 민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OOO청소년시설들은 직영이잖아요..”(참여자 1)

그러나 관 주도로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나 사업의 주관 장이 바뀌게 되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가 잘 운영 되었다 하더라도 OO님이 협력적 의지가 있지 않으면 교육장이 바뀌는 순간 협력 자체가 관 입장에 멈춰 버려서 대표도 그만두고...마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방향을 틀어야 해요...새로운 OO님이 오시니까 협력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장지원 사업의 협의체 사업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4)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지역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의 개입과 협력이 더 많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민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힘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책은 위에서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성장지원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서 보는 경험들이 만들어져야만 위에서 정책이 바뀌나 안 바뀌나에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OO는 미래교육자치기구사업이 걸출한 동네잖아요.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관 중심으로 생긴 인식이에요. OOO장학사가 학교 교장으로 가버리니까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어요. 핵심은 저희가 3차 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육이었거든요.”(참여자 4)

또한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실무자들이 사업에 관해 이해하고 동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 내부 직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외부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 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성과 공유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실무자급에서 공감감이 안 되면 지속되기 힘들고, 협력 사업이 불가능한 게 기간을 안 올려버리고요. 지방의 경우는 같은 재단의 여러 개 사설인데 그 지역에 굉장히 분담이 잘되어서 흠뻑 모였다가 굉장히 잘되는 곳이었었는데 신입직원들이 대거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새로 수련관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왜 같이 협력해야 해요? 라는 말이 실제로 표현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저기랑 우리랑 다른 사설인데요. 인사이동을 팀장이 아무리해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모르는 분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자금은 그 지역이 거의 협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협력을 주도했던 분들은 대표이사급으로 나갔어요.”(참여자 1)

“2012년부터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있는 거는 전 직원들이 화목토 아침 시간에 줌으로 책 읽기를 같이 해요. 한 시간 동안. 거기에는 ‘마을 발견’이라든지, ‘마을과 함께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계속해서 아직 화목토는 전 직원들이 책을 5-6쪽을 읽고,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노력은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내 언어와 우리 직원들의 언어가 달라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협력 기관이라는 것을 한 쪽지에 기본 템플릿에 들어가 있었습니다.”(참여자 4)

“저희도 이제 상담 쪽 공부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할 때 감정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그러면서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간에 내가 몰랐던 저 직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을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일하는 데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참여자 6)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민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관이 주도해야 하느냐의 주도권 논의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민과 관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모여서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중간 진행 자체가 관에서 주도해야 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하는 거는 민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청소년 참여자 1)

“저도 민간 공동주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공동주도의 가장 큰 이점이 청소년 지역사회나 시설에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랑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청소년 참여자 2)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자원 네트워크의 범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에 관해서는 참여자 대부분 시·군·구나 그보다 더 작은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시도 모델로는 지역의 이슈를 담기 어렵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나 네트워크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도 단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도 모델로 운영을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도 협의체는 아젠다가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큰 사이즈의 일만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참여자 4)

“애초에 이런 청소년시설 자체가 시·군·구 단위로 지어져 있고요. 동 단위의 청소년시설도 있지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건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질문에서 드린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시설과 가까이 있으려면 일단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2)

궁극적으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다양한 단위의 모델이 갖추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만일 시·군·구 단위의 모델 이후, 시·도 단위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현재 17개 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고, 이들 기관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도 단위로 가면 전남도 미래재단이 하잖아요. 활동센터나 상담복지센터가 재단으로 묶인 곳이 있고, 따로 있는 곳도 있잖아요...시·도 단위의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본래 기능이 시·군·구와 현장에 있는 시설 지도자들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협력업무예요.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마다 기관 네트워크. 그것을 활동진흥센터가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서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 참여자 대부분은 긍정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에서 어떠한 좀 자세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걸 위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새로 신설된 전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게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참여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청소년 참여자 4)

“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도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신설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때문에 중간에서 조율이 가장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령을 하거나 민간 단체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 데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 전담 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 참여자 5)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의 정도를 살펴보면,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이나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재원 조달의 안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등은 지자체 설립 재단이나 지자체 직영 혹은 공공조직 위탁 운영 형태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사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 등은 민간 단체 자체 운영이나 민간 단체 위탁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관과 민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장지원 사업의 성과와 지속 여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사실 공무원이 계속 변화하는 자리니까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관장님 말씀대로 계속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냥 탑 다운 방식으로 모여서 모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명확한 것 같고...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구에서 뭔가 파트너라기보다는 위탁 단체니까 이렇게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지자체 운영이 그래서 더 낫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였거든요. 행정적인 부분의 역할은 분명히 지자체에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명분은 어쨌든 지자체에 있어야만 이게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조직이 계속 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콘텐츠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네트워크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해야지 되지 않나...”(참여자 5)

“민관 공동 주관하는 거 좀 약간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팀 일이 우리 과의 일이고 그러니까 과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체를 과에 주고 사업 운영은 위탁에다 주니까 이 위탁 민하고 관하고 너무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맨날 회의하고...”(참여자 3)

“이렇게 100% 위탁을 해버리면 그냥 위탁해버리고 끝나는 건데 본인들의 발을 좀 깊이 담그고 있어야 그게 본인들의 실적이 되니까 공무원들은 그게 있어야 사실 움직이니까...”(참여자 5)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서로 해야 할 역할의 차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재정 지원이 가야하고, 어떤 경우는 조례 정비도 해야 하고...그리고 누군가는 서브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중간조직의 형태로 재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참여자 1)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방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양적 조사에서는 청소년참여 확대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운영 순으로 나왔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각각의 순위도 대체로 비슷하였다.

“청소년들도 어른들 회의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어른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 근거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참여 확대 운영의 측면 자체가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의 방식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4)

“청소년들 의사 표현할 때,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자체도 청소년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에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선언적인 선언을 했는데 실행할 때 성장지원 사업을 하던 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느껴져요.”(참여자 4)

청소년들의 경우 상위에 있는 문항들은 성인들의 의견과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순위가 달랐던 것은 청소년참여 확대와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청소년시설과 지자체에 청소년 참여기구를 두게 되어있지만,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실현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도 분과나 전체 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낮다 보니 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와 자신들의 의견 실현에 대한 요구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저희도 참여위원회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지원협의체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분과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위원회 분과랑 성장지원 분과를 똑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전에 먼저 회의하고 참여위원회 정기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발굴된 정책 의제를 가지고 성장지원 네트워크에서 분과회의 때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성장지원협의체를 참여위원회하고 아예 연계하는 것은 어떤지...” (참여자 5)

“청소년 참여 확대 운영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시 이제 생기부에 기부할 수 있게 바꾼다든지 해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이런 청소년 참여 확대 참여율 증가는 좀 확실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청소년 참여자 2)

“참여위원회 사업을 이제 이거하고 같이 좀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사실 참여위원회가 아이들이 낸 의견이 반영되는 확률이 진짜 별로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 주고 이런 게 어렵고 그냥 형식적으로 정책 제안하고 간담회하고 끝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지역 안에서 찾고 좀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체가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계속 했었거든요.”(참여자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요...또 저는 이제 상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청소년의 입장이고 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 그리고 관장님 사업팀 팀장님 또 어떤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좀 벽을 쉽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뒤바뀌서 청소년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청소년 참여자 4)

지역사회 성인들로만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의 주체는 청소년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소년이 빠져서는 공허한 모임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성장을 시키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가를 논의하는 협의체여야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대상화 되어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당사자성이 철학에서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참여자 1)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서도 분과위원회(네트워크)나 전체 운영위원회에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나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 포럼, 세미나, 정책 제안 대회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안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OO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차세대위원회가 있어요...거기는 청소년 100인 위원회도 있고요. 참여위원회만이 아니라 참여위원회의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참여위원회 의존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아이들은 다 소외가 되거든요. 아이들은 말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해요. 열 몇 명의 참여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어떤 아이는 1년에 한 번만 와도 좋아.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 장애 청소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모일 수도 있어요.”(참여자 1)

또 하나 검토해야 할 부분은 앞의 내용과도 연동되는 것인데, 청소년만으로 구성되는 분과 네트워크도 제한이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화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과정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정책 실현 통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인, 전문가, 공무원 등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가 네트워크 운영과정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OO시 참여위원회는 분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분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분과가 나누면서 여러 분과에서 각종 나온 의견들도 많이 수렴할 수 있고 청소년들끼리 모여 있으면 청소년들 간에 일단 굉장히 의견 나오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성인의 역할은 저희들이 의견을 분과에서 만들어 내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의 역할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과별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서 의견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네트워크 사업 진행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청소년 참여자 4)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하되 유연한 형태의 참여 조직으로 가면서 오히려 성인 그룹이 여기에 전문성을 서로 주고받는....청소년들이 100%인 것도 위험해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유해야 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은 레벨로 토의하는 것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재단이든, 지자체든, 민간 단체든 협력하는 형태로 구조를 어른 중심에서 청소년이 가운데로 가는 형태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참여자 1)

“저희가 주민자치예산제가 있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청소년들이 다 쓰고 있어요. 주민자치예산을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거든요. 청소년쪽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를 하나요..대회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모두 맡겨놓으면 이미 있는 건데 아이들에게 의견을 끄집어내기 뭐하고..아이들의 의견을 실현화 시켜주기 위해서 대회를 열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의견이 ‘시험 기간에 공부방이 없어요’라는 의견이 선정되어서 지금 많은 공간을 공부방으로 만들고 있어요.”(참여자 4)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또한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복지 중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래교육지구사업 그 외 지역 단위 각종 연합회, 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이 성장지원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성장지원 사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고, 서로의 자원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교육지구의 한계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적 경험이라는 게 교육과정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학교 안을 주로 집중할 수 있는 교육부의 사업과 학교 밖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이 체계 안에서 이 협의체 수준에서 좀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는 것을 제안해요...그리고 교육협력지원센터라는 것이 클로마 존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공동 근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을 들어가고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열고 같이 근무하는 곳조차도 예산을 따온 사업을 할 뿐 공간만 같이 쓰고 있지 사업에 연계가 안 돼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같은 센터에서 활동가는 나는 시청 쪽 사업이야 나는 교육청 쪽 사업이야...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이 성장지원 사업에서 자체가 협의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결합 자체를 협의체 수준에서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참여자 2)

“특히 지금 미래교육지구는 과거보다 더 강하게 일반고 살리기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이걸 강조하지만 일반고는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실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서 미래교육지구마다 지금 고걸 엄청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서 안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꼭 협력해서서 그럼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구체화해서서 뭐라도 하나 사례를 만들어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단계로는 일반고 역량 강화에 완전 꽂혀 있거든요.”(참여자 2)

“저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 연계협력 운영도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곡성뿐만 아니라 전남 내에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청소년 말고도 무슨 교육협의체라든지 청소년 관련 협의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협의체가 협력을 통해서 조금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5)

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다음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중간지원조직인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다양한 주체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고,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자원 간의 네트워킹, 정보나 지식의 공유와 제공, 연계협력 사업추진과 정책 실현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중간 지원 조직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교류를 촉진시키는 거 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못지않게 이 네트워크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이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청소년 참여자 1).

“저희 수련관 내에 시설 자체가 협의체 축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업을 전부 알고 있지 않고 서로 연계되고 있는 사업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이런 교류 촉진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조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사업체 내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의 의견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지.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협의체랑 조금 더 확실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와의 소통 적극적으로 협의체와 소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청소년 참여자 2)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교류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이 끈끈해야 정책 개발도 잘 될 것 같고 청소년 지원 협의체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청소년 참여자 5)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킹 그리고 자원 간 교류 촉진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로서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증진 교육과 각종 조사나 연구, 컨설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성장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구나...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한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구요.”(참여자 1)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만족도와 인식의 변화⁵⁴⁾

양적 조사 결과에서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는 질문이나 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이나 다른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이 낮았던 것에 관한 아쉬움을 토로 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청소년 의견의 실현 가능성, 현실성 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지원과 배려가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이 기가 죽어서 일단 말을 못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그 다음에 청소년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5)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 회의나 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관행적인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의견들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어떤 실현 가능한 의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능력이 성인들이나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저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4)

청소년들의 의견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렴된 의견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어른들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가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청소년들이 의견을 냄에 있어서 어른들에 비해 미성숙한 면이 상당히 보이긴 합니다. 어른의 도움이 일단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은 의견을 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힘든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1차적으로 좀 거르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청소년 참여자 2)

54) 이 질문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함.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경험⁵⁵⁾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변화에 대해 무엇보다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 정책과 관련 기관에 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지역의 사업뿐 아니라 국가 단위 사업에까지 관심의 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중요한 주제인 진로에 관한 것도 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은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청소년활동을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청소년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과나 이제 직접적인 청소년과 같은 데 이제 진학하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청소년 참여자 2)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며가며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지언정 청소년수련관은 그냥 수영할 수 있는데 포켓볼 치러 가는데 이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있는 곳이구나..”(청소년 참여자 1)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지역이라고 말하면 시도를 넘어서 이제 국가의 사업 및 정책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제가 느꼈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청소년 참여자 5)

한편,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하는 능력이 사업 참여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에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해 보는 경험이 일차적으로 변화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전보다 적극성과 주도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최우선으로 자신감 향상 협력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이런 거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청소년 참여자 2)

55) 이 질문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함.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OO에서 활동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청소년 참여자 1)

“저와 함께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후배들도 저와 함께 참여했는데 기억에 남는 친구는 굉장히 좀 많수가 적고 자기 의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자신의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 사람이나 그리고 다른 유관 기관의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는 능력이 자신이 말하길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신도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이 모임 장소 안에서도 또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4)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서...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여기서 뭘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청소년 참여자 5)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양적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각 주체가 이미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기에 유관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측면에 걸리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애초에 청소년들이 낸 의견 자체가 효율성을 따져서 내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단 막연하게 제시한 다음에 거기서 간결하게 예산에 따라서 조정하는...청소년이 의견을 내는데 일단 예산이 확충된다면 이런 시설 측면이나 이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1차적인 장애물이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참여 확대 및 청소년 참여율이 확보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청소년 참여자 2)

“돈으로 움직이는 협의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분과위원회도 있는데 ‘사회적 교육프로그램’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을 교육할 방법을 군과 교육청과 청소년 기관에서 협력 방법을 매주 수요일마다 TF로 구성해서 10명 정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비를 써야하는 것이지....실제로서 꼬집어내려고 하면 어려워요....네트워크 사업에서 사업비로 하면 네트워크 사업에 방향과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밥 먹을 돈만 있으면.. 기관들마다 각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쓰는데 애먹고 있더라고요. 비싼 밥 먹으면서 같이 해봅시다. 얘기도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참여자 4)

양적 조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로 높게 나왔던 문항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였다. 특히 청소년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동의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들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련관에서 지자체를 통해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만 잘 받아주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이런 홍보 사업이 진행되어야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면 좋는데...수련관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세요....학교 밖 청소년들이 먼저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청소년 참여자 2)

학교에서 직접 청소년시설이나 사업에 관해 소개하고 장려하면 청소년참여나 시설 이용률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미래교육지구 혹은 교육재단을 통해 연계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청소년 참여 확대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이 이게 우리를 위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라거나 아니면 이게 본인들한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말해주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참여자 2)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사례로 곡성을 들 수 있다. 곡성은 이전의 미래교육협력센터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설립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교육재단 내에서 교육 관련 사업뿐 아니라 청소년지원팀이 조직되어 각종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설과 학교 간 연계의 토대가 되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곡성은 농산어촌형 모델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이전에 미래교육협력센터가 만들어졌고, 재단법인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뱅치마킹하고 있습니다...재단이 생기게 되면 예산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도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기관, 군청, 교육청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교육장님과 군수님의 의지로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재단이 되었어요....교육재단인 이유는 중간에 사업이 멈춘 기관들을 분석해보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여서 재단의 운영에서 교육 쪽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 없는...”(참여자 4)

최근에는 교육재단 외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지역의 풀뿌리 네트워크 역량이 축적되면서 그동안 여러 사업의 수행을 통해 그 역량이 성숙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비록 민관 협력 TF가 관 주도의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 천천히 그 뿌리를 내려 깊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곡성이 예전에는 관중심의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관과 색깔이 맞는 협의체였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협의체는 예를 들면 ‘곡성아동청소년성장돌봄생태계구축을 위한 TF’가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군의원 2명, 교육청 장학사, 행정에서 유관 팀장 2명, 미래교육재단에서 팀장 2명, 아동청소년 담당에서 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청소년기관 대표, 청소년 대표, 어린이집협의회, 유치원협의회 이런 학부모 권역별 대표, 청소년 유관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꾸렸습니다. ‘곡성교육회의’라고 하는 사회단체에서 모임을 꾸려서 군에 제안을 했고,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참여 회의비도 줍니다. 이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의 성과라고 봅니다. TF에서는 아동청소년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현재 인구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참여자 4)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관계를 위해 독립 기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따라 같은 부서 내에 (평생)교육 관련팀과 청소년 관련팀이 같이 있는 지역도 있다. 별도의 부서나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 연계협력이 훨씬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같은 부서 내에 있는 팀 간에도 전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OO 구청 교육지원과가 안에 청소년팀과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담당하는 미래교육팀이 같은 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은 과 내에 이제 그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하기가 좀 수월했어요.”(참여자 6)

앞서 제시한 예산, 홍보,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관련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 등 사업 운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 주도의 네트워크에 비해 관 주도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범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시범사업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인 근거로서 할 수 있게..... 회의도 시범사업을 근거로 모으시다라고 해서 모였어요. 근거 없으면 안와요. 활성화를 하려면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성장지원 사업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업은 관성에 의한 사업이고, 예산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참여자 4)

또한 향후 사업의 확장과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청소년시설의 목적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시설 평가의 항목에서도 평가 점수나 지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희도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웠고 지금도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그 명분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련관에서 왜 그걸 하느냐...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어디에 하나라도 근거가 있어야만 명분을 찾고 구청도 설득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매뉴얼이나 운영 지침 같은 것...구에서는 그런 지침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설득 되거든요. 법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평가 때에 지역연계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참여자 5)

사업 활성화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청소년 관련 시설 내 협의체 형태로 좋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협의체 내 전담 인력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과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민간에 중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과 같은 신설되는 민간 협력센터면 좋고, 그런 형태의 중간조직의 형태가 유리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참여자 1)

“3차 때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청소년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지금처럼 만들어졌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학교 안에 방과후아카데미도 만들었고, 학교 밖 아이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법률적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기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4)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다양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청소년 참여자 1)

중간지원조직 외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끊임없이 지역 각 주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공동목표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성과를 공유하고 좀 더 의지나 추진력을 얻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참여하는 기관의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청소년 참여자 1)

“협의체에 탁월한 한사람에 의존하면 그 사업은 망하거든요....청소년 전담 공무원이 계셨고...지역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이에요. 어느 순간 다른 부서에 가있어요.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떠나버리잖아요...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이나 간담회를 열어요....의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해서 인지를 확대해가고 있어요...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할 정도로 성숙 되었습니다.”(참여자 4)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과 필요한 과제 도출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1) 양적 조사

먼저 양적 조사에 관한 결과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추진 전보다 사업추진 후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추진 전(18.7%)보다 사업추진 후(71.5%) 비율이 52.8%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볼 때, 성인들의 긍정 변화 증가 비율(55.9%)이 청소년(43.4%)보다 더 높았고, 군 지역 거주 응답자의 긍정 변화 증가 비율(61.5%)이 가장 높았고, 기관유형 별로는 민간 기관(67.4%)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군 지역 거주, 민간 기관 근무 응답자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긍정 변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주체에 관한 생각을 질문에 관한 결과는, 민관(民官) 공동 주도(63.5%), 관(공공기관) 주도(21.1%), 민 주도(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관(18.3%), 민(16.1%)의 주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청소년은 관(30.0%)이 민(13.3%)보다 더 높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간의 관계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관 혹은 민이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주도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민관 공동주도의 경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민관협력지원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네트워크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민관협력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운영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재단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관 주체가 되는 것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결과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협력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적절한 네트워크 형태로,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32.3%)가 가장 높았고,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8.0%),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1.5%) 순이었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네트워크 형태에 관해서는,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47.3%),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23.7%),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16.1%)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 공동주도는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 주도가 2순위였는데, 장기적 지향 네트워크 형태에서는 4순위로 밀려났다. 대신 민간 주도 형태가 2순위로 올라갔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민의 역량을 키워서 네트워크 운영의 주도권을 차츰 민간에 이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단위는 ‘시·군·구 단위’ 응답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읍·면·동 단위’(23.6%), ‘마을 단위’(21.1%)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마을 단위’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응답 경향이 나타났고, 또한 행정/공공기관보다 민간 기관 근무 응답자들의 경우 ‘읍·면·동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즉 효율적 네트워크 구성단위 혹은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향후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층위를 두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협의체 형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적이지 않다’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였다(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7.9% → 3년 이상 21.3%). 3년 이상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운영의 효과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40.0% → 3년 이상 50.0%)은 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항목별(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 조달의 안전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 부처(서)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나타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5.8점)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은 ‘민간 단체 위탁운영’(62.7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8.1점), **지역 네트워크 사업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민간 단체 자체 운영’(66.7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재원 조달의 안전성**은 ‘지자체 직영’(77.2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70.8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 부처(서)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은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68.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 결과에서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을 가장 효과적인 운영 형태로 응답하였고, 항목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혹은 민간 단체 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 운영을 위한 항목별 중요성의 정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77.8점),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76.4점),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방식’(75.2점),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74.9점),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운영’(7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지만, 상위에 있는 항목은 비교적 유사성을 나타냈다. 사업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민관 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효율적이고 발전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협력’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79.8점),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77.8점),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77.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82.4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75.0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75.7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실 조사 항목에 제시된 모든 항목이 중간지원의 중요한 역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들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킹, 자원 간 교류 촉진을 우선으로 보았고, 이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사업의 기반이 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의 필요성(성인 n=93)은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79.6점), ‘관련 법령의 제·개정’(7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 청소년의 전반적 만족도, 참여 경험, 참여 후 변화에 관한 질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가 동일하게(70.6점), ‘다른 친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69.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 참여 후 변화는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71.1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70.0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6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업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문항에서 청소년참여와 의견 반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에서 청소년참여 증진 방안 모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82.1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81.4점), ‘유관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80.4점), ‘지자체와 교육청 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전담 인력 배치’(79.7점), ‘참여기관 간의 공동 목표 설정’(79.3점), ‘사업 참여의 자율성 확대’(79.3점), ‘구성원 간 소통 강화’(78.6점), ‘협력적 의사소통 증진’(78.6점), ‘참여기관 간의 성과 공유’(78.3점), ‘중간지원조직에 사업 기획과 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7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의 중요도에 관한 항목 20개 모두 70점 이상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고, 최하-최상 간 범위 또한 9점 안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양적 조사 이후 진행되었던 FGI 결과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며,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질적 조사

양적 조사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FGI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시범사업 전에는 관성적으로 운영됐던 시설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시도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 사업추진 동기와 사업성과는 다르지만, 사업 진행 후 시범사업 기관은 물론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여러 곳에서 나타냈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변화의 성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발판이 되어 제3의 네트워크로 확장된 지역도 있고, 시범사업 후 예산을 받지 못해 이전보다는 규모가 작아졌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기관 내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의 네트워크 역량이 크게 증진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사업 초기라 하더라도 민의 네트워크 역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민이 주도하거나 민관 공동 주도를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역이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관 주도의 네트워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관 주도의 사업은 지자체장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민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민이보다 주도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이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 또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네트워크를 어떤 범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대상이나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도 모델보다는 시·군·구, 혹은 그보다 작은 마을 단위 모델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적 조사에서도 같았다. 시·도 차원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 중심의 공적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참여 주체 간의 공동체 형성에도 제약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작은 마을, 생활권 단위가 적정한 지역도 있고, 시·군·구 범위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곳이 더 적절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중간지원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FGI 참여자들은 전담 중간지원조직의 신설을 모두 강조하였다. **현재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운영 여건상 네트워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설이라는 체계에서 오는 행정력의 한계도 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업이 운영되려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는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에 따라 지자체 직영, 공공조직 위탁, 지자체 설립 재단, 민간 단체 위탁, 민간 단체 자체 운영 등으로 나뉜다.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네트워크 구축, 자원 조달의 안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은 지자체 설립 재단, 지자체 직영 혹은 공공조직 위탁 등 공적 기관에서 운영할 때, 강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사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 등은 민간에서 운영 시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항목의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운영과정에서 성인과 청소년 모두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와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을 강조**하였는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이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보다 비록 시간은 더디 걸린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기본 취지를 잘 담고 있는 원리**이기에 향후 청소년참여 확대와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에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전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네트워크)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과 네트워크에는 더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나 지역 자원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네트워크와의 관계 설정**이다. 이들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남과 협력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과 네트워킹**이다. 또한 **참여 주체 간 교류를 촉진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습과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업 참여 만족도는 양적 조사에서 56.7%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FGI에서도 사업 참여에 따른 많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이러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사업의 정책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로는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관해 관심이 커졌다는 점이고,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슈인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경험한 심리·사회적 변화로 타인과의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도 이전보다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주도성이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친구들뿐 아니라 지역의 어른들과도 같이 협력하고, 자신의 의견 피력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사업 참여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성숙은 물론 개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FGI 참여자들은 여러 의견을 피력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한 양적 확대와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렴된 의견의 정책화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좀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하였다. 청소년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성과는 반드시 결과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 외에 이미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인 참여자들은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민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업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많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화가 많은 관 중심 네트워크를 지역사회에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제들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제6장 정책제언

- 1. 정책과제 개요
- 2. 정책과제 및 제언

1. 정책과제 개요

1) 정책과제 도출 과정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시범사업에서 수행하였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네트워크 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수행을 위해 그간 추진되었던 연구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던 사업 운영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우수 네트워크 사례,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유사 사업들을 개관하고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개념 검토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유형, 범위, 운영 주체,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운영 원리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사업 운영의 매개체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지역 현장 사례 조사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지역 중 6곳을 선정하여 사례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과 활성화 요인 등을 검토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6)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요인 도출과 정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전문가 93명과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GI는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심화 분석을 위해 전문가 7인과 청소년 5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고 정책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 연구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 등 유사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세미나에 이어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례발표회에서는 현재 지역에서 수행 중인 관련 우수 사업들과 네트워크 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고, 네트워크의 활성화 요인과 성공 요인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
다. 콜로키움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원리에 대해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 교육(지원)청의 관련 사업 담당자 등과 정책 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주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 방안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다음 [그림 VI-1]에 정책과제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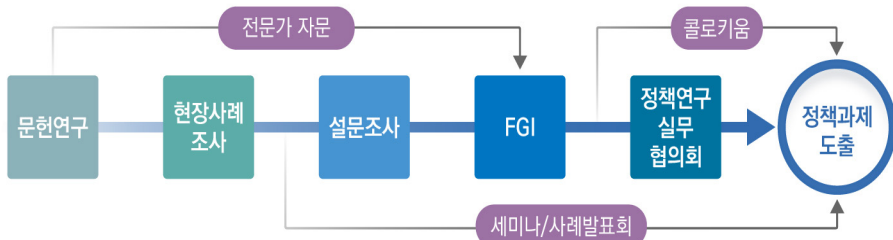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과제 도출 과정

2)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이상의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정책과제 3개와 세부 추진과제 10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구성은 크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1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1-1.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1-2. 지역 특성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운영, 1-3.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로 구성하였다. **과제 2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2-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심화 적용, 2-2.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구축,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로 설정하였다. **과제 3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3-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3-2.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3.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미래세대 자원 양성, 3-4.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상정하였다.

표 VI-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0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1-1.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1-2. 지역 특성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운영 1-3.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0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	2-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심화 적용 2-2.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확립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
0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3-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3-2.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3.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2. 정책과제 및 제언

정책과제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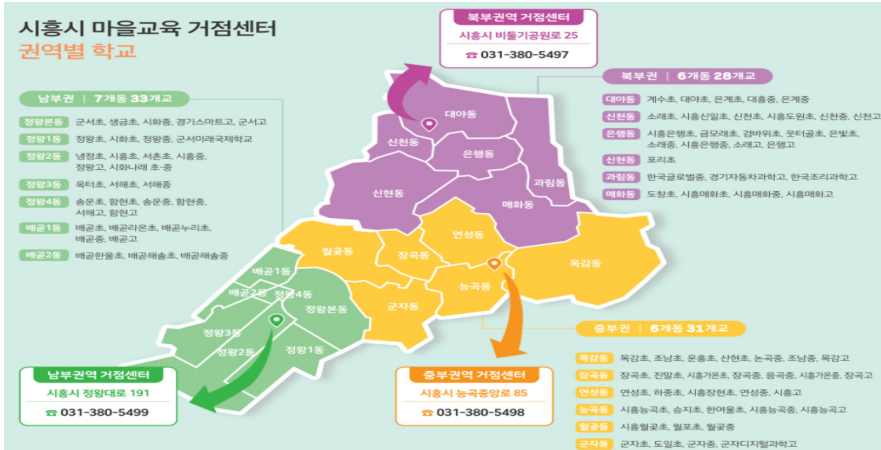
1-1.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 제언배경 및 정책제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절차와 내용 중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범위 혹은 단위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원의 대상이 달라지고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추진 역량이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으로 접했고,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행정적 지원이 네트워크의 진전과 사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구 네트워크 단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서 반드시 적절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에서 따라 시·도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 모델이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시·군·구 기초 단위의 모델이 적합한 곳도 있다. 또한 도심지역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권, 동, 마을 등 작은 범위인데도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동 단위 모델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시흥시의 경우 북부, 중부, 남부 권역과 시흥교육을 연구하는 개발센터 등 마을 교육 거점센터 총 4개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6~7개 행정동을 지원하는 거점센터에서는 동네의 교육자원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공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또한 마을교사 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교육자치회의 의제를 모아서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洞)네 언니’라는 마을교육 담당자를 센터에 배치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출처: <https://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86>에서 2023년 10월 16일 인출.

그림 VI-2.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동네언니’는 동네의 교육자원(사람·공간·프로그램)을 찾아 관리하는 학교 밖 교육자원 관리자이며, 마을의 특성이 담긴 마을수업을 만들어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연수 기획자 역할도 한다.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군·구 기초 단위 중심의 네트워크 모델에서 아래로는 읍·면·동(마을, 생활권 포함) 생활 단위 네트워크 모델, 위로는 시·도 광역 단위 네트워크 모델 등 지역의 행정 단위별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고 각 단위에 맞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은 2020~2022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 사업에 들어갔다. 전국 9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기초 단위 네트워크와 함께 광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광역 단위 모델에서는 기초 단위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역량을 증진하는 연수, 각종 조사 및 연구, 시·도 단위 대형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읍·면·동 생활 단위 모델에서는 시흥시의 사례와 같이 보다 마을 주민 밀착형 문제나 청소년 성장지원 이슈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1-2. 지역 특성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운영

■ 제안배경 및 정책제언

세부 추진과제 1-1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에 따른 모델 개발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면, 다음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관기관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관기관을 민(民)이 맡을 것인가 아니면 관(官)에서 주관할 것인가 혹은 민관 공동 운영으로 할 것인가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공설 공영(직영), 공설 민영(공공 위탁, 재단, 민간 위탁), 민설 민영(민간 단체) 등 여러 성격의 주관기관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관기관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각 유형의 기관이 지닌 특징과 장단점이 있고, 특정 기관이 주관 운영기관이 되었을 때의 사업 내용과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어느 하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단이나 공공 위탁(지자체 직영 포함)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 자원 조달의 안전성, 사업의 지속성, 사업 간 연계 가능성 등에서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이나, 사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재단이나 공공 위탁과 같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보다 민간 위탁이나 민간 운영이 더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경우 위의 세부 유형 중 민간 위탁이나 민설 민영을 제외하고 주로 재단이나 공공 위탁(일부 지역은 지자체 직영 기반, 일부 지역은 풀뿌리 네트워크 기반) 등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범사업을 주관하였다. 물론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기관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기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각 주관 기관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공공 영역 중 특히 지자체 설립 재단에 주목한다. 재단이 물론 공공조직으로서 지닌 사업 운영의 경직성이 대두될 수는 있으나 운영 방식에 따라 관과 민(民)을 잘 아우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 출처: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사례발표회(2023. 7.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VI-3.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조직 현황

한 예로, 전라남도 곡성군은 2019년 3월에 개소한 미래교육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여 2020년 12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출범하였다. **재단 인력 구성의 특징은 곡성군과 교육청에서의 파견 인력과 함께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자체-교육청-민간 영역이 함께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하여 곡성군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도 재단 내에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역의 형편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재단이나 특정 유형의 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관 기관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관 기관 선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인프라 현황, 주관 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수준과 민이나 관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 기관 선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관 기관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1-3.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 제언배경 및 정책제언

정책과제 1은 정책과제의 개요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다. 세부 추진 과제 1-1~2에서 특정 지역에서 네트워크의 범위를 설정하고 주관 기관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행정 영역의 두 주체를 간과할 수 없다. 즉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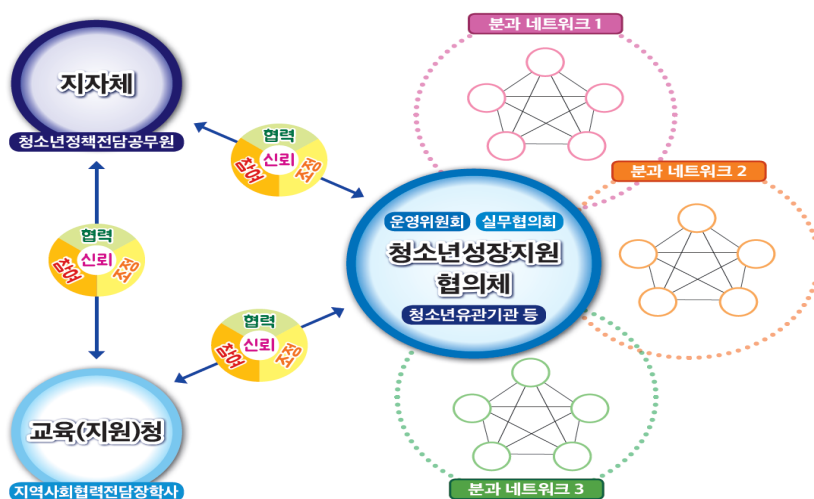
최인재 외(2019)의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로 행정, 공공, 민간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조직 구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하였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동반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지역은 원활하게 협력관계가 구축된 곳도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원활했던 곳은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의 사업 수행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 않았던 곳은 기존의 청소년정책 분야의 시설(단체) 간 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5-2-2)의 일환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정책 연계를 위한 여성가족부-시·도 교육청 간 중앙 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계획하여 추진 중이다. **향후 광역 단위뿐 아니라 이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정책 연계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주관 기관에서는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그림 VI-5 참조].



* 출처: 최인재 외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그림 VI-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 출처: 최인재 외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재구성

그림 VI-5.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2-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심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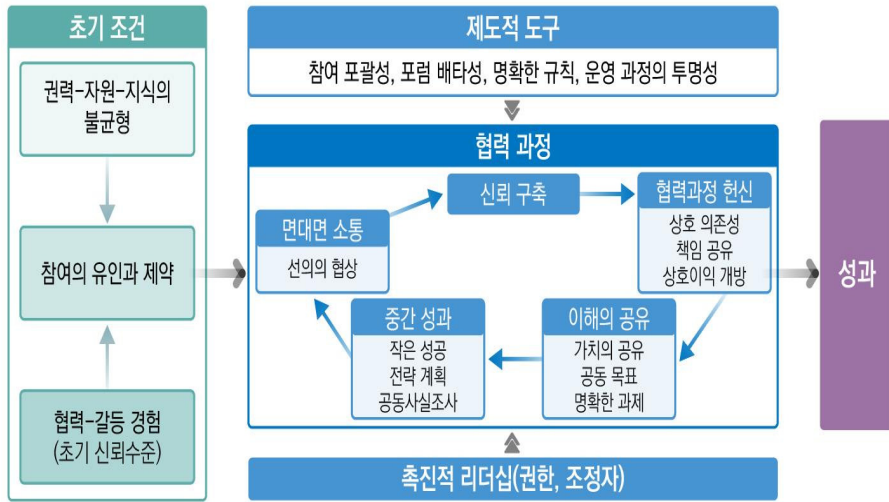
정책과제 2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다. 순서상 정책과제 1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틀을 세웠다면, 이후 네트워크 운영의 추진 방식과 추진 방향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활성화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리를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잘 적용해 나가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2장에서 제시했듯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의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또한 산업화 이전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추진 방식보다는 정부,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사회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이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Ansell과 Gash(2008)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⁵⁷⁾ 모델(그림 VI-5)의 기본 구조는 초기 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 등 크게 4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 되는 부분은 협력 과정이다. 협력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요소는 순환적 관계이다. 즉 참여 주체 간의 주기적인 면대면 소통은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되며, 형성된 신뢰는 참여자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게 한다. 또한 헌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의존적이라는 공동체 의식, 결과에 대한 책임의 공유 그리고 상호 이익에 대한 개방을 통해 헌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문제, 목표, 가치에 관해 학습을 통한 구성원 간 이해의 공유가 확산할 때, 종국적으로 (중간) 성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향후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협의체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초대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의 헌신을 끌어냈다.

57) 2장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였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Ansell & Gash(2008) 모델의 원리에 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 출처: Ansell & Gash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에서 재구성

그림 VI-6.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지역사회 민·관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 개념화한 바 있다. 따라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상호 이해와 의존성에 기반하여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원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는 물론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학습과 연수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심화하여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2-2.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확립

▣ 제안배경 및 정책제언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는 지역사회 내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모두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야 할 것이고,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의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변화 주기도 짧다. 이는 협의체의 대응 방식이 고정된 형태 이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플랫폼과 같은 형태의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즉 협의체의 문턱을 낮추고, 네트워크 간 경계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네트워크 주관 기관에서 협의체를 운영위원회와 함께 분과(혹은 실무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과 네트워크는 포럼, 세미나, 원탁회의 등 공론의 장에서 제안된 이슈들을 유목화하고, 이를 분과 네트워크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분과 네트워크에서는 세부 사업 기획과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공무원 등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 각 기관의 관리자나 지역사회 각종 네트워크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 네트워크에서 기획되고 정책화된 사업을 의결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은 분과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 등 각 단위에서 사업 대상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분과 네트워크 단위에서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분과 네트워크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7.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 도식⁵⁸⁾

그간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각 시설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구도에서 정책 전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되었다. 지자체와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참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한 참여는 물론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권역별 원탁회의 등 참여 방식의 다변화였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활성화(4-1-1)의 세부 과제로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도 분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향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5-2), 앞서 기술하였듯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운영위원회와 분과 네트워크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참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에서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58) 협의체 및 분과 네트워크 간 느슨한 연대를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명칭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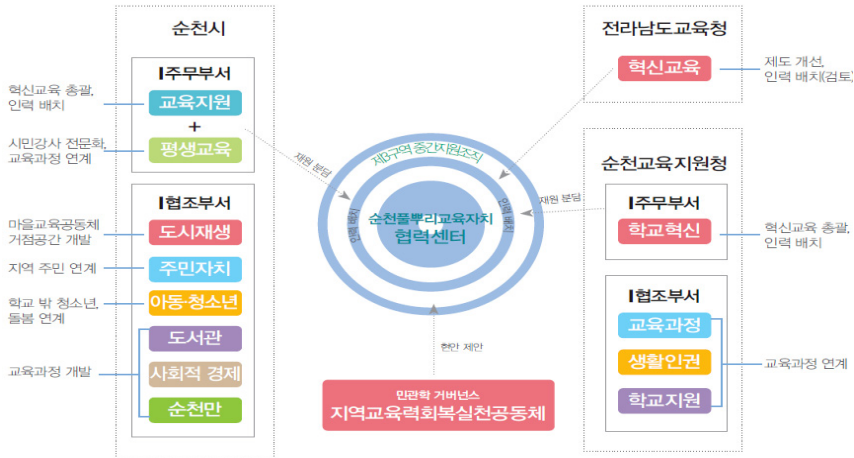
▣ 제언배경 및 정책제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의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과정이 개별 주관 기관이나 담당자의 노력에만 의지해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관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간 진행된 연구 과정에서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형식을 선호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도 생물과 같아서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제시한 관 중심의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과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등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으로 그간 구축되어 온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와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적 변화 요인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네트워크 구성원의 공동체성 제고, 지역의 네트워크 역량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야 한다.

곡성의 경우 성장지원 사업 공모 신청 이전에 교육자원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의 과정이 있었다. 즉 곡성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왔던 곡성교육희망 연대와 같은 시민자조모임의 자발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과 자양분이 되었고, 현재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내 청소년 지원팀을 조직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민 주도의 자생력과 자발성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를 꾸리고 이를 유지·확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계, 협력, 공유하는 협치기반 교육센터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 출처: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33>에서 2023년 10월 17일 인출

그림 VI-8.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또 하나의 지역의 네트워크의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는 사례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 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는 2018년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양 기관(지자체, 교육지원청)을 연결하고,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라는 교육문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민-관-학(순천시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교사, 장학사, 공무원, 시의원 등) 지역의 각 주체가 한 달에 한 번 토론하는 ‘정담회(情談會)’라는 교육민회(教育民會, 공식적인 의사 논의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인적 자원 양성 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사업 실무자, 협의체 참여 구성원, 지역사회 주민(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습 모임과 세미나, 연수 과정 등을 개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안배경 및 정책제언

정책과제 3은 정책과제 1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과제 2의 네트워크 운영의 기능적 측면에 이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측면과 생태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련 법령과 관련 자치법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일부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8조에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와 지원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대한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육성”이라는 용어를 “성장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도 “청소년성장지원위원회” 등 좀 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도 협의체와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좀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항목 개정안(예시)

현행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00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임·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2. “청소년성장지원”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00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임·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00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 5. 그 밖에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사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1.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활동 확대의 일환으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을 위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미 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이나 자치법규의 제정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관련 자치법규(예: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재단 등)의 조항에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법을 제안한다.

3-2.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제언배경 및 정책제언

현재 지역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업이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이나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지는 해당 사업의 특성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예산만 지급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또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즉 사업 특성상 사업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이란 앞서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Briggs, 2003, Brown & Kalegaonkar, 2002)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새롭게 재정리 하면, 지역사회 내 관(官)과 민(民)의 중간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조직이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원 간의 조정자 역할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 차 과업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많다. 즉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킹, 정보·지식·기술 지원, 역량 증진 교육·훈련, 지역 내 네트워크 간 교류 촉진,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사실 네트워크의 성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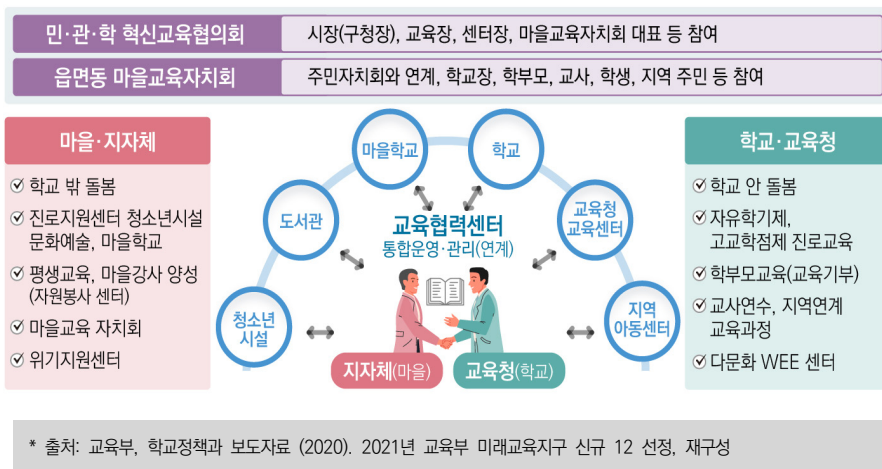


그림 VI-9. 미래교육지구, 지자체-교육청 간 연계협력 체계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방대하고 또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내용임에도 사업 담당자들이나 협의체 구성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시작한 지역은 없다. 네트워크가 성숙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동원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협의체 형태의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갖춘 센터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2023년, 3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12. 6). 이 사업에서는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사무소로 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센터에서는 학교와 지역 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교육협력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간지원조직 신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기적으로는 기존 협의체의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 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3.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 제언배경 및 정책제언

인간의 발달은 생득적인 부분과 함께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 특히 인지적 측면은 물론 신체·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외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광역 단위 사회, 국가 등 다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중 청소년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환경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 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주체는 가정과 학교가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이 두 주체가 모두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재능 기부자 등 탈중심적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즉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적 접근과 방식보다는 지역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할 때이다.

현재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마을 학교, 학교 밖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을 살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돌봄, 복지, 보호, 진로 체험, 역량증진, 친화 환경조성, 도시 재생 등 많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사업에 따라 단일 부처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정부 부처-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를 통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풀뿌리 네트워크 사업도 있다. 서비스 대상도 취약계층이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



그림 VI-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

최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켜 인구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나 농촌유학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다. 하지만 **사업(정책) 간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주기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이 건강해야 청소년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각종 자원 간 연계·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한 선순환적 상생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성장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VI-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법령 제·개정	추진시기		주무부처
			단기	중장기	
0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1-1.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	●	여가부 /지자체
	1-2. 지역 특성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운영		●		여가부 /지자체
	1-3.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	●	여가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0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	2-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심화 적용		●	●	여가부 /지자체
	2-2.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 체계 확립		●		여가부 /지자체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		●	●	부처합동 /지자체
0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3-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	부처합동 /지자체
	3-2.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부처합동 /지자체
	3-3.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	●	●	부처합동 /지자체

☒ **국정과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경영목표와의 관련성**

1. 국정과제: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5-2-2.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전국 확대
 - ☐ 청소년정책-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강화

3. 연구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 ☐ 경영목표 I 미래지향적, 지역생태지향적 생애전(前)반기 세대연구 추진
 - 실천과제 1. 지역 자원 연계와 지역 청소년 성장 환경 정비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내영 (2008). 새로운 시도,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In 희망제작소 편(2008). 「일
본 시민사회의 꽃, NPO 지원센터를 가다」. 서울 : 희망제작소.
- 강문희, 윤준희 (202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고양시자
치공동체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정치연구** 2(0). 35-72.
- 강지윤, 이태동 (2016).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공간과사회** 26(1). 139-176.
- 경상남도교육청 (2022). **2022년도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매뉴얼**. 경상남도 : 경
상남도교육청.
-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서
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1-159.
- 고경호 (2021). 농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내 민간위탁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을 사례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9(1), 51-73.
- 고경호, 김태연 (2016).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충남 지역
산업 협의체 사례-, **한국산라기술학회논문지**, 17(5), 294-304.
- 고재경, 주정현 (2012). **2012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2016). **곡성교육희망연대 원탁토론회 자료집**. 곡성군: 곡
성군청소년문화의집.

- 관계부처합동 (201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2).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
-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저책 기본계획(2023-2027)**.
- 교육부 (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1a). **2020 미래교육지구 우수사례집**.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1b).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계획**. 세종 : 교육부.
- 김민, 이영란 (2020).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115-140.
- 김석준, 강인호, 김정렬, 최태현, 강제상, 문병기, 이종열, 이재호, 윤태범, 최병대, 박흥식, 조경훈, 김지혜, 채원호 (2023). **거버넌스의 이해**. 고양 : 대영문화사.
- 김소현, 백병부, 이한섭, 김진영, 김병준 (2021). **혁신교육지구 시즌III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 경기 :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영배. (2022).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성과 분석: 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8), 403-415.
- 김용련, 양병찬, 이부영, 배현순, 박상현, 한혜정 (2020).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연구**. 서울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김은경, 최서린, 이희현 (202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의 개선과제 탐색: 정책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2), 55-75.
- 김정숙, 이재용, 황창호. (2021). 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 연구 :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73-112.
- 김지선, 양병찬 (2019). 노원교육복지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실천-‘기대지 않는’ 주체의 형성. **평생교육학연구**, 25(4), 57-87.
- 남화성, 김명숙, 유금봉, 박성희 (2022). **부천시 청소년 증장기 정책개발 연구**. 부천 :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농림축산식품부(2021). **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안)**. 세종 : 농림축산식품부

박경철, 황바람, 구자인, 박주석 (2015). 「**아산시 마을 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공주 : 충남연구원.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박재은 (2022).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특성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2021).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세종: 법제처.

법제처 (202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세종: 법제처.

법제처 (2022).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세종: 법제처.

법제처 (2023). **법제업무 편람**. 세종: 법제처.

백병부, 이해정, 서용선, 심재휘 (2019). **혁신교육지구 시즌II 성과분석 및 시즌III 모델개발연구**. 수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보건복지부 (2023).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집(지자체, 센터)**. 세종: 보건복지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7). **2007년 고른기회장학재단 사업계획**. 서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19).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성과관리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 (2019).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서울: 서울특별시.

손성호 (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322호**.
 충진천: 한국교육개발원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6&nTbBoardArticleSeq=825944>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송혜승, 이명훈 (2017).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193-212.

심익섭, 이기백 (2015). 기업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6(3): 209-229

양병찬 (2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1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관계자 워크숍자료집. 진천 : 한국교육개발원.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윤정, 전광수, 이유진 (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종 : 교육부.

양병찬, 이영재, 남기철, 정익중, 김민 (2009). **배움터장학사업의 현황 및 결과 분석 연구**. 서울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양병찬, 한혜정 (2018). **화일주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실천연구**. 서울. 삼성꿈장학재단.

양희준, 박근영, 이재준, 허준, 박상옥 (2022). **지방 소멸 시대의 농촌교육,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서울: 학이시습.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20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 운영사례집**.

여성가족부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서울: 여성가족부.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2020).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정관(안)**. 옥천: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2021).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2021 정기총회**. 옥천: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2022). **옥천교육정책 제안서 ‘우리가 바라는, 2022년 옥천교육’**. 옥천: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유종성, 박종헌, 구정은, 최혜은, 배세진 (2022). **성남시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 성남: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 이기태, 하현상 (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0.
- 이명석 (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2), 23~53.
- 이명석, 유홍립 (2009). 거버넌스 시대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경제인문사회연구원편. 「2008선진일류국가를 위한 비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총괄(2)분야」. **2008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정책연구총서**, 1-66.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이자성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II), **경남발전**, 113: 118-132.
- 이혜영 (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양병찬, 김민, 김정원 (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김효정, 최형주, 김은경, 손호성 (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충청북도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정병순, 황원실 (2018).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조철민, 안창희, 유명화 (2022). **광명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광명시.
-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병두 (2015).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개념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27-449.
- 최인수, 전대욱, 이승종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 체계 연구**. 원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오해섭, 김민, 정건희 (202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준규, 이현우, 신이수. (2019).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최창의, 서용선, 김혁동, 홍섭근, 김용련 (2016).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통계청 (2023).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최종보고서)-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사례발표회(2023, 7.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인구, 김홍철 (2020). STX그룹의 성공과 실패의 전략적 분석. **경영사연구, 35**(4), (사)한국경영사학회.

행정안전부 (2020).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계획.** 세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세종: 행정안전부.

황세영, 이경상, 송민경, 조윤정 (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 문헌]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Briggs, Xavier de Souza. (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Cambridge, MA: The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 @MIT.
- Brown, L. D., & Kalegaonkar, A. (2002).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Evolution of the NGO Sect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1(2): 231-258.
- Creswell (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Creswell (2017). 질적연구의 30가지 노하우(한유리 역). 서울: 박영 story.
- Goldsmith, S., & Eggers, W. D.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Jennifer Shea. (2011). Taking Nonprofit Intermediaries Seriously: A Middle-Range. Theory for Implementation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February*, 71(1): 57-66.
- Kellog Foundation. (2002).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 Initial Inventory of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 Kooiman, J.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 Mignon, I., & Kanda, W. (2018). A typology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ir impact on sustainability transition policies.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29: 100-113.
- Morgan, (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Thousand Oaks, CA: Sage.
- Rhodes, R.A.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Milton Keynes.

일본 내각부(内閣府), (2002). **中間支援組織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報告書**. (https://www.npo-homepage.go.jp/data/report11_2.html).

[참고 사이트]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http://cheum.hi1318.or.kr/>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2023). 2023 미래교육협력지구 성남미래교육[SFE여:숲에듀][https://snedu.seongnam.go.kr/download/2023%20%EC%84%B1%EB%82%A8%EB%AF%B8%EB%9E%98%EA%B5%90%EC%9C%A1%20%EA%B8%B8%EB%9D%BC%EC%9E%A1%EC%9D%B4\(%EC%97%85%EB%AC%B4%EC%9E%90%EC%9A%](https://snedu.seongnam.go.kr/download/2023%20%EC%84%B1%EB%82%A8%EB%AF%B8%EB%9E%98%EA%B5%90%EC%9C%A1%20%EA%B8%B8%EB%9D%BC%EC%9E%A1%EC%9D%B4(%EC%97%85%EB%AC%B4%EC%9E%90%EC%9A%)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oesh.kr/base/contents/view?contentsNo=56&menuLevel=2&menuNo=74>에서 2023년 5월 9일 인출.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70&menuId=1834>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A9).pdf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A9).pdf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곡성교육포털. <https://www.gokseong.go.kr/edu/>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edu/gokmg/>에서 2023년 8월 20일 인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1388.gsyouth.kr/>에서 7월 23일 인출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kr/subPage.do?menuNo=101001001000>에서 2023년 8월 1일 인출.

나무위키. 완주군과 전주시. <https://namu.wiki/w/%EC%A0%84%EC%A3%BC%EC%8B%9C>에서 7월 25일 인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9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53&servletPath=%2Findex.do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woori-daegu.org/p/p01-1>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53&servletPath=%2Findex.do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대구통계 홈페이지. <http://stat.daegu.go.kr/main/main.do>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wyf.or.kr/mirae/index.do>에서 2023년 8월 20일 인출.

사)청소년과 나란히 홈페이지. <http://naranhi.net/greetings>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성남미래교육 홈페이지. <https://snedu.seongnam.go.kr/mobile/main/index.asp>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nedu.seongnam.go.kr/mobile/edu/sub01.asp>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snyouth.or.kr/fmcs/266>에서 2023년 7월 22일 인출.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snyouthbigta.imweb.me/>에서 2023년 7월 24일 인출.

성남청소년데이터플랫폼 홈페이지. <https://snyouthbigta.imweb.me/>에서 2023년 7월 24일 인출.

수성구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http://www.ssef.or.kr/pages/sub.htm?nav_code=ssf1659319604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s://stat.suseong.kr/2021st/0101.html> 에서 2023년 7월 23일 인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jedu.or.kr/sub01/sub01_02.php에서 2023년 8월 12일 인출.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s://www.wanju.go.kr>에서 2023년 8월 3일 인출.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 <https://reman2000.tistory.com/10692905>에서 2023년 8월 13일 인출.

제20회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https://dev.juminexpo.or.kr/>에서 2023년 8월 15일 인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진해구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gu/contents.do?mId=501020100>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221&cntntsId=274>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720/10723.web>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bigdata.changwon.go.kr/portal/statUse/stat/useCwStatPerCw.do>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672/10674.web>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671/10720/10723.web>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1003020100>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bigdata.changwon.go.kr/portal/statUse/stat/useCwStatPerCw.do>에서 2023년 7월 17일 인출.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http://bigdata.changwon.go.kr/portal/statUse/stat/useCwStatPerCw.do>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http://www.cayouth.or.kr/index.php>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https://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t?curMenuSn=394>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38325#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9#00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851#0000>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851#0000>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보도 자료]

경기eTV뉴스 (2022.10.06.). 동네언니와 '교육도시 시흥' 향한 잔결음. <https://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86>에서 2023년 10월 16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19.4.11.). 지역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2020.12.18.). 2021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신규 12 선정.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 6.).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연합신문 (2022.10.22.). <https://www.eduyonhap.com/m/page/view.php?no=67495>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뉴스피크 (2023. 07. 06.). 안양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2022 상반기

- 지원협의회 개최. <https://www.newsp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39>.
- 더퍼블릭뉴스 (2021.11.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3>에서 2023년 10월 17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18. 06. 28.). 교육공동체운동의 중심, 완주를 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9425에서 2023년 6월 20일 인출.
- 파이낸셜뉴스 (2023. 05. 22.). 부천시, 내년부터 '3개 구·37개 일반동 체제' 본격 가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15629>에서 2023년 8월 3일 인출.
- NBN시사경제 (2020. 03.10.). [인터뷰] 취임1년 허성균 곡성교육장에게 묻는다. <https://www.nbn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7.12. 01.).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049900051>에서 2023년 7월 19일 인출.
- 전북도민일보 (2019.08.01.). 전주(全州), 지명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540>에서 2023년 8월 2일 인출.
- 한겨레 (2022. 11. 07.). '학원 압박' 벗어던진 도시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왔어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6017.html에서 2023년 5월 15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성인 참여자용 설문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

응답자
ID

--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결과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조사연구기관 :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설문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설문조사
- ▶ 조사문의 :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2, jae713@nypi.re.kr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설문지 응답을 위한 사전 설명

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개요

1) 추진 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확대·개편 등

2) 추진 목적: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하위로 전달되는 정책 추진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향함. 한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각종 자원 간의 연계·협력관계 형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3)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경기도 부천시, 전라남도 곡성군, 대전시 유성구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3년 간 진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 구리시, 성남시, 창원시 진해구, 대구시 수성구,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등에서 1~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23년부터는 총 9개 지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용어의 설명

1) 청소년 성장지원

-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을 말함.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란,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요구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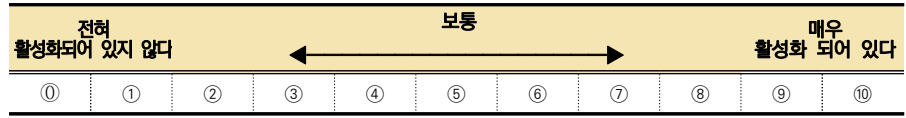
3)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 공공(행정)영역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영역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에 기반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임.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자치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사업 주관 기관에서 조직하여 운영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중간지원조직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각종 조사, 청소년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하였음.

문 1.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각종 인적, 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진행 이전과 사업 이후 귀하의 거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활성화의 정도를 다음 0~10점 범위 내에 응답해주시시오. 0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10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사업 진행 이전



2) 사업 진행 이후



문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이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표기)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官): 본 설문지에서는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과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및 교육재단 혹은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관련 기관, 지역사회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각종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민(民): 지역사회 각종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체 및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민간을 포함.

- ①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 → **문 2-1로**
- ② 민(民) 주도 → **문 2-2로**
- ③ 민관(民官) 공동주도 → **문 2-3으로**

문 2-1.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② 교육(지원)청 ③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 ④ 지자체 설립 교육재단 ⑤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관련 기관
- ⑥ 지자체(지자체 설립 재단포함)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센터

문 2-2. 민(民)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 ② 교육관련 민간 단체(시설) ③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
- ④ 지역사회 기업체 ⑤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문 2-3. 민관(民官) 공동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은 어떤 유형의 기관이 운영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복수 선택 문항).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④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 ⑤ 교육관련 민간 단체(시설) ⑥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
- ⑦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 ⑧ 지자체 설립 교육(관련)재단 ⑨ 민관협력지원센터
- 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문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초기의 네트워크 형태는 어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② 교육(지원)청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③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④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⑤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사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

문 3-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네트워크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② 교육(지원)청이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③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④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형태
- ⑤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

문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은 어떤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 단위 ② 읍·면·동 단위 ③ 시·군·구 단위 ④ 시·도 단위

문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기관에서 조직하여 운영한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재단 등 사업 운영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협의체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민간,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문 5-1로**

문 5-1.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십니까?

- ① 지자체 직영 ② 관련 공공기관(지역사회 내 각종센터 등) 위탁 운영
- ③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④ 지역 내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통합 운영
- ⑤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

문 6.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의 정도를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운영형태	1)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운영형태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독립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운영형태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형태 \ 항목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형태 \ 항목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원 조달의 안정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형태 \ 항목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 가능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형태 \ 항목	7)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부처(서)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가능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자체 직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조직(센터 등)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설립 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민간 단체 자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들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다음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체/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자자체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플랫폼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구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높여가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의 정도를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보, 지식, 기술 등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구성원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각종 조사 및 연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각종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네트워크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제·개정 필요성의 정도를 다음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관련 법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련 자치법규(조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의 필요성						
	매우 낮음			보통			매우 필요
1) 관련 법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련 자치법규(조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의 정도를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역사회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포함)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포함)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전담인력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자율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 간의 공동 목표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기관들 간의 성과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중간지원조직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2) 중간지원조직에 사업 기획과 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추진 체계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지역사회 내 유관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시시오.

(1) 소속 유형	① 관(행정기관, 공공기관) ② 민간기관 ③ 기타()
(2) 네트워크 사업 참여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3년 미만 ③ 3년 이상
(3) 사는 지역	① 시지역 ② 군지역 ③ 구지역
(4)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청소년 참여자용 설문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

응답자 ID

--	--	--	--

 -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현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결과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조사연구기관 :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설문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설문조사
- ▶ 조사문의 :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2, jae713@nypi.re.kr

4.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5.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설문지 응답을 위한 사전 설명

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개요

1) 추진 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확대·개편 등

2) 추진 목적: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하위로 전달되는 정책 추진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향함. 한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각종 자원 간의 연계·협력관계 형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3)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경기도 부천시, 전라남도 곡성군, 대전시 유성구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3년 간 진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 구리시, 성남시, 창원시 진해구, 대구시 수성구,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등에서 1~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23년부터는 총 9개 지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용어의 설명

1) 청소년 성장지원

-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쾌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을 말함.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란,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요구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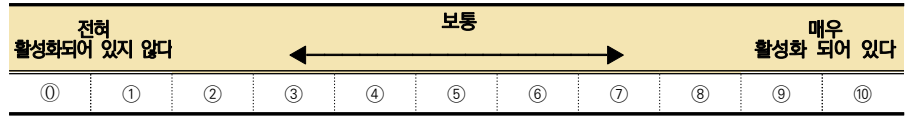
3)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 공공(행정)영역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영역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에 기반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임.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자치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사업 주관 기관에서 조직하여 운영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중간지원조직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각종 조사, 청소년 관련 사업기획 및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하였음.

문 1.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각종 인적, 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진행 이전과 사업 이후 귀하의 거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활성화의 정도를 다음 0~10점 범위 내에 응답해주시시오. 0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10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사업 진행 이전



2) 사업 진행 이후



문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이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표기)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官): 본 설문지에서는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과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및 교육재단 혹은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관련 기관, 지역사회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각종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민(民): 지역사회 각종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체 및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민간을 포함.

- ①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 → **문 2-1로** ② 민(民) 주도 → **문 2-2로**
③ 민관(民官) 공동주도 → **문 2-3으로**

문 2-1. 관(官)(혹은 공공기관)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② 교육(지원)청 ③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
④ 지자체 설립 교육재단 ⑤ 지자체 소속/설립/산하의 청소년관련 기관
⑥ 지자체(지자체 설립 재단포함)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센터

문 2-2. 민(民)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누가 주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 ② 교육관련 민간 단체(시설) ③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
④ 지역사회 기업체 ⑤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문 2-3. 민관(民官) 공동 주도의 경우, 다음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은 어떤 유형의 기관이 운영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복수 선택 문항).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④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시설) ⑤ 교육관련 민간 단체(시설) ⑥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 단체(시설)
⑦ 지자체 설립 청소년(관련)재단 ⑧ 지자체 설립 교육(관련)재단 ⑨ 민관협력지원센터
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문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은 어떤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 단위 ② 읍·면·동 단위 ③ 시·군·구 단위 ④ 시·도 단위

문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기관에서 조직하여 운영한 “협의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재단 등 사업 운영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협의체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민간,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문 4-1로**

문 4-1.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십니까?

- ① 지자체 직영 ② 관련 공공기관(지역사회 내 각종센터 등) 위탁 운영
③ 민간 단체 위탁 운영 ④ 지역 내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통합 운영
⑤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운영

문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들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다음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체/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플랫폼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구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의 참여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높여가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민관(民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의 정도를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보, 지식, 기술 등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구성원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구성원 간 교류 촉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각종 조사 및 연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제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각종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네트워크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귀하가 참여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한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8. 다음은 귀하가 참여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하였던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다음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의견이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른들(지도자 혹은 전문가 등)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다른 친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귀하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후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다음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사업에 참여 후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업에 참여 후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업에 참여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업에 참여 후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업에 참여 후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맺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업에 참여 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의 정도를 7점 척도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1) 지역사회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포함)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포함)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전담인력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자 율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주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 간의 공동 목표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기관들 간의 성과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중간지원조직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중간지원조직에 사업 기획과 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관련 매 뉴얼 개발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추진 체계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지역사회 내 유관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시시오.

(1) 네트워크 사업 참여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3년 미만 ③ 3년 이상
(2) 사는 지역	① 시지역 ② 군지역 ③ 구지역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이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관련 부처의 유사 사업에 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체계, 운영 원리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둘째,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관련 유사 사업 분석을 통한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 도출 셋째, 시범사업 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성공 요인 분석 이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면접 조사(FGI), 현장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 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콜로키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시범사업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 적용, 중간지원조직의 신설과 운영, 지역의 자생력 제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정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와 FGI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정책과제 3개와 세부 추진과제 10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과제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과제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 조성 등이다.

주제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다부처 정책 연계,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ABSTRACT

A Study on Methods to Invigorate Local Community Network Projects Aiming to Support the Youth's Growth

This study aims to monitor the pilot projects of local community networks designed to support youth development and analyze similar initiatives conducted by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expansion, and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network projects designed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The main components of the study are: i)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framework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well as their operational principles, ii) Analysis of similar initiativ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local communities to identify activation factors and key insights, iii) Monitoring of pilot project areas to analyze both the limitations and success factors encountered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expert consultations,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field case studies. Additionally, seminars, case presentations, colloquium, and policy research working group meetings were conducted.

The study identified key factors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local community networks. Furthermore, by analyzing case studies in pilot project areas, we developed a model for local community network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incorporating principl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We also have derived recomme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e enhancement of local self-sufficiency, and the formul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We gathered opinions on various issues raised during the operation of network projects through surveys and the FGI.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process, three main policy objectives and ten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were proposed. The specific policy tasks include: 1: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youth in the local community, 2: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in the local community, 3: Creation of an eco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in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local community networks, inter-departmental policy coordination,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학·한송아·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경·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응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6-1 93330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6-1